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

2024년 주요업무계획



2024. 1.

해양경찰청

목 차

I . 2023년 주요 성과와 평가	1
II . 2024년 정책 여건과 추진 방향	8
III. 주요 정책과제	11
1. 기획조정관	15
2. 경비국	39
3. 구조안전국	55
4. 수사국	69
5. 정보외사국	85
6. 해양오염방제국	97
7. 장비기술국	111
8. 직속부서	125

<참 고>

1. '24년 주요 입법 추진계획
2. '24년 주요 과제 추진일정
3. 주요업무계획 - 비전2033 실행계획 - 비전2033 연계

외국어선 나포 실적

전년 대비 28.6% ↑



1 빈틈없는 해양경비를 통한 해양주권 수호

- ▶ 선제적 경비함정 증강배치, 특별단속 등 다각적 대응
- ▶ 경계미확정 해역 전략적 경비 및 통합방위 협력 강화
- ▶ 관제망 확대 및 관제사 교육·훈련 강화

2 선제적 안전관리 및 구조대응 역량 향상

- ▶ 선종별, 장소·시기별 맞춤형 안전관리 중점 추진
- ▶ 5개소 피출소에 신형 연안구조정 배치, 즉각 대응 태세 확립
- ▶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선박사고인명피해 현황

평균(3년) 대비 12.3% ↓



마약사범 검거

평균(3년) 대비 26%/32.1% ↑



3 마약범죄 척결 등 민생침해형 범죄에 수사력 집중

- ▶ 마약수사 총력대응 체계 구축 및 국내·외 공조확대
- ▶ 보조금 편취 등 국민 민생안전 위협 범죄 강력 단속
- ▶ 과학수사 업무 고도화로 지속 가능한 발전 이행력 확보

4 예방 중심 정책으로 오염물질 유출량 대폭 감소

- ▶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해양오염사고 발생 최소화
- ▶ 해양오염재난 대비·대응 방제 인프라 확충
- ▶ 민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재난 관리 사각지대 보완

해양오염물질 유출량

전년 대비 60% ↓



예산 현황

전년 대비 4.7% ↑



5 기본·현장 중심 직무기반 지속 확충

- ▶ '24년 예산(1조8,967억) 및 국유기금(484억) 확보
- ▶ 현장 중심의 필수인력 증원(+113명) 및 직급상향(±48명)
- ▶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 구축 추진

□ [해양경비] 빈틈없는 해양경비를 통한 해양주권 수호

- COVID-19 종식에 따라 우리해역 內 외국어선 출현이 예년 수준 회복, 불법조업 강력단속 등 엄정대응을 통해 조업질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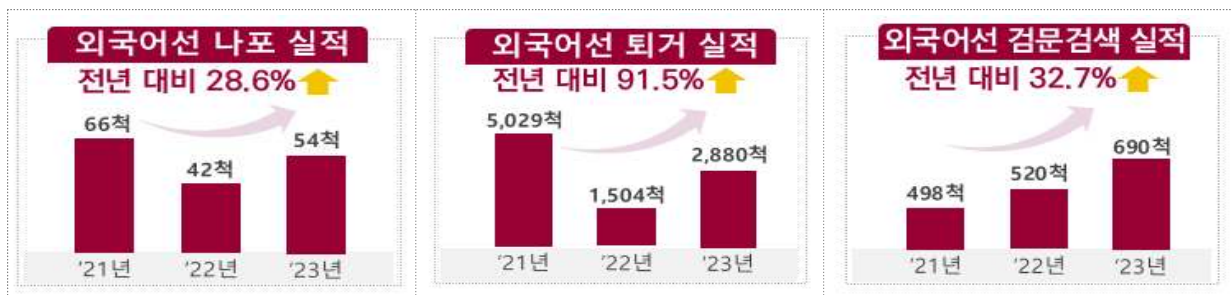
* 외국어선 조업질서 위반율(나포/검색) 6.6% 감소 : 최근 3년 평균 15.4% → '23년 8.8%

- AI기반의 해양경비지원시스템 구축('22~'26년, 90억원) 2단계 추진, MDA 체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훈련 파견* 등 운영역량 강화

* 미국 해양경비대 IMDA 교육과정 및 싱가포르 IFC(정보융합센터) 등 파견

- 목포·군산 광역VTS 운영(9.1)으로 서해 주요 선박통항로 안전관리 강화

※ 영해(86,004km²)의 33%(28,560km²) → 42%(35,649km²)로 관제구역 확대



□ [해양안전] 선제적 안전관리 및 구조대응 역량 대폭 향상

- 극성수기 연안 위험구역 집중관리 및 연안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등 장소·시기별 맞춤 정책으로 연안사고 예방 실효성 제고

* '22년 166명 → '23년 208명, 배치구역 내 연안사고 및 사망자 수 최근 5년 대비 34%, 18% 감소

- 해양안전공모전, 구명조끼 착용 운동 전개, 생존 수영 및 해양안전 교실 등 국민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추진 ('22년 38,309명 → '23년 77,075명)

- 구조 인프라 확충 및 구조대원 전문성 강화, 민간구조 활성화 등 신속한 사고대응 체계 확립으로 선박사고 인명피해 방지

- 「해양재난구조대법」 제정('24.1.),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23.6.)으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



※ 파출소 연안구조정 배치 완료 등으로 3년 연속 인명구조율 99% 달성

□ [해상치안] 마약범죄 척결 등 민생침해형 범죄에 수사력 집중

- 「해양 마약수사 전담팀(총 86명)」 구성(4.1.) 등 **수사관 총력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마약범죄 척결 추진

※ '23년 마약범죄 검거인원 461명 (전년 대비 57%↑), 구속인원 89명 (전년 대비 78%↑)

- 해상마약 유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 등 국내 기관 간 **협력 확대**, 콜롬비아 등 중남미 마약생산국과 **업무협력**으로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 강력범죄 신속대응팀 신설·운영 및 안전 저해범죄, 보조금 편취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민생치안 강화

※ 선박 불법 증·개축 223건, 안전검사 미수검 243건 등 단속 965건(1,010명)

불공정 행위(해양공사 방해 및 금전착취 등) 26건(103명), 국고보조금 편취 13건(29명), 수협조합장 부정선거 행위 23건(98명)



□ [해양환경] 예방 중심 정책으로 오염물질 유출량 대폭 감소

- 지역별 취약요인 분석, 고위험 선박·시설 중점관리로 부주의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 발생 건수 저감 ('22년 86건 → '23년 65건 / 24%↓)
- 선박 사고 시 유류 이적, 비상 예인 등 사전 배출 방지 조치* 적극 시행으로 기름 유출 피해 최소화 ('22년 156척 → '23년 207척 / 33%↑)

* 유류이적(35건, 1421.8kl), 봉쇄(93건, 250개소), 비상예인(117건) 등 배출방지조치 적극 실시

- 해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제훈련* 실시 및 전문교육** 확대

* 방제훈련(총 85회, 7,327명) 실시, HNS 훈련(연 2회 3개서 → 5개서), 배출방지 훈련(8개서 → 전국서) 확대 / ** HNS·긴급구난 전문교육(총 4회, 65명)



□ [조직관리] 기본·현장 중심의 조직 경쟁력 강화 추진

-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24년 예산 18,967억 원 확보(전년 대비 4.7% 증액)
※ 태안서 신축 등 국유기금 484억 원 확보(전년 대비 2.8% 증액)
- 본청 종합상황실장 직위 국장급 격상(경무관), 주요직위 복수직급제 도입(총경 5명) 및 필수인력 113명(정기 98명·수시 15명) 증원
- 승진소요 최저연수 조정에 따른 경력평정 제도* 및 심사·시험 비율 개선**으로 '연공·경력'이 아닌 '성과·실적' 중심의 인사문화 조성
* 근무성적평정(65 → 70) : 경력평정(35 → 30) ** 심사(6 → 7) : 시험(4 → 3)
- 과학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행안부 주관 실태점검 결과 3년 연속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기관 선정
- 필리핀 해역 국제방제 지원*, 베트남과 MOU 체결(6.23.) 및 퇴역함정 양여, 인도네시아 해경 수색구조 교육 지원 등 국제협력 강화 추진
* 해외방제 첫 사례,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명의 감사 서한 수신(5.9)



주요 사건사고 처리 사례

1 목포, 어선 정보호 전복 사고 (2. 4.)



■ '23. 2. 4. 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인근 해상에서 정보호(26톤, 근해통발, 12명) 침수·전복

➡ 8명 구조, 4명 실종

조치 사항

▶ 사고초기 목포VTS에서 인근 항행 화물선에 신속한 구조협조 요청으로 생존 선원 3명 구조, 강한 조류와 수중 장애물로 선내진입이 제한되었으나, 전복선박에 진입하여 실종자 5명 발견

2 부산, 러시아 어선(KALTAN호) 화재 사고 (4. 21.)

■ '23. 4. 21. 부산 기장 동방 해상에서 러시아 어선 KALTAN호(769톤, 트롤, 25명) 화재 발생

➡ 승선원 25명 전원구조



조치 사항

▶ 사고해역 인근선박에 지속적인 구조 요청(울산VTS)으로 탈출 선원 21명 구조, 사고선박 화재진압 중 기상 악화로 안전해역 예인, 구조대원 내부수색으로 실종자 4명 발견

3 보령, 낚시어선 금까마귀호 화재 사고 (7. 26.)



■ '23. 7. 26. 보령 원산도 사창해수욕장 앞 해상 낚시어선 금까마귀호(9.77톤, 20명) 원인 미상 화재

➡ 승선원 20명 전원구조

조치 사항

▶ 신고접수 후 18분 만에 구조세력 현장 도착, 민간해양구조대와 합동으로 해상 탈출 표류자를 전원 구조 및 화재 진화

4 공해상 불법 유류환적 사범 검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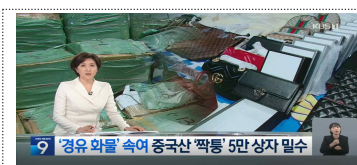
■ '23. 1월 남중국 해상에서 중국 위장업체를 통해 북한 선박에 경유 약 18,000톤(시가 180억원) 환적 선박 검거



조치 사항

▶ 장기간의 국제공조와 위성망을 통한 증거자료 채증, 불법행위 적발하여 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의자 구속 송치

5 환적화물 밀수조직 검거



■ '23. 10. 5.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환적화물에 위조상품 은닉하여 밀수·유통한 일당 검거('20.11. ~ '22.9. 기간 총 266회, 정품시가 1.5조 추산)

조치 사항

▶ 국내 밀수 총책 등 17명 검거, 중국 총책 2명 수사중지·인터폴 적색수배

주요 사건사고 처리 사례

6 부산신항 해양 건폭일당 검거



■ 어촌계장, 건설업체 대표 등 공모, 부산신항 공사담당자 협박, 발전기금 등 명목 총 4억 7천 5백만원 갈취

**조치
사항**

▶ 해양건폭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항만공사, 해수청, 지자체 등) 협의체 구성 및 피의자 2명 구속 송치

7 전남 완도해역, 모래운반선(5,198톤) 전복(11. 20.)

■ '23. 11. 20. 완도군 어룡도 인근 해상에서 오도와 접촉 후 505삼일호(5,198톤, 모래운반선)가 전복, 기름 유출(유출량 산정중)

* 선박 318척, 인력 2,452명 등 동원 방제조치 (11.20. ~ 12.7., 인양진행중)



**조치
사항**

▶ 양식장 밀집해역 고려 방제대책본부 가동 및 총력방제 시행
* 민감자원 보호용 오일펜스 5.4km 설치, 적재유 154kl 이적으로 피해 최소화

8 충남 홍성해역, 예인선(107톤) 좌주(4. 7.)



■ '23. 4. 7. 홍성군 궁리항에서 해건T-1호(107톤, 예인선)가 계류 중 좌주, bunker A 933 l 유출되어 해상·해안방제

* 선박 9척, 인력 589명 등 동원 방제조치(4.7. ~ 4.21., 15일)

**조치
사항**

▶ 사고초기 다중세력 동원(해경·공단·지자체), 집중방제로 오염피해 방지
* 해양오염사고 위기경보(주의) 발령 등 해수부·지자체 협조를 통한 방제현장 관리

9 남해청 마수대, 국내선원 상대 마약류 유통사건

■ '23.3월부터 10월까지 부산·경남지역 해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유통한 부산 폭력조직 조직원 등 마약류 판매·투약사범 적발



**조치
사항**

▶ 27명 검거(14명 구속/필로폰 98g(3,266명 투약분), 대마 365g(12,166명 흡연분))

10 포항 고래류 불법포획 사범 검거



■ '23. 6월부터 동해안에서 불법 고래포획 용의선박 발견 및 추적수사를 통해 포획선, 운반선 등 일당 검거

**조치
사항**

▶ 고래류(약 17마리(시가 16억 상당)) 불법 포획사범 59명 검거(구속 19명)

주요 정책홍보 사례

1 [지키겠습니다!] 전복선박(정보호) 구조활동 오보대응 및 기획홍보



[KBS뉴스(2.6.)]

- [개요] '23. 2. 4.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정보호) 전복 사고 관련 신속 정확한 언론소통 및 대응으로 사고대처 신뢰도 향상
- [Key메세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해경청장이 직접 입장**하여 현장직원 독려 및 최종판단·지휘, 국민 신뢰 회복
- [홍보성과] ① 초동 대응부터 수색까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짐 (대통령실 평가)
② 오보관련 대응 7회(정정기사 게시) ⑤ 회 언론브리핑

2 [대한민국 최초!] 해외(필리핀) 오염사고 긴급방제지원



[연합뉴스(3.27.)]

- [개요] '23. 2.28 필리핀 민도로섬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관련, 정부 국제지원 결정에 따른 해경청 방제물자·인력 지원
⇒ K-방제역량을 국제사회에 전파, 초국가적 해양환경 대응 필요성 강조
- [Key메세지] 수원(受援)국에서 지원(支援)국으로, 해외 긴급방제 지원
⇒ 대한민국 방제물품·인력·기술·노하우를 해외로 지원한 최초 사례
- [홍보성과] 필리핀 당국 및 현지언론(PTV 등)홍보·감사 서한 전달

3 [불법어선 꼼짝마!] 흥기 위협 불법조업 어선 검거 기획홍보



[MBC뉴스(4.1.)]

- [검거개요] '23.3.27(월) 서해 해역에서 허가없이 불법조업을 하고 흥기를 휘두르며 단속과정을 방해한 중국어선 검거 기획홍보 추진
⇒ 불법조업 중국어선 7척 발견, 2척 검거 5척 퇴거
- [Key메세지] 불법조업에 기민·엄정하게 대응하는 정부 의지 전달
⇒ 대한민국 해양주권수호와 불법저항 억지력 제고(특수공무집행방해 적용)
- [홍보성과] [23년최대]조회수 173만뷰(좋아요9,165) 언론보도 82건

4 [마약청정 대한민국] 해양마약과의 전쟁



[MBC뉴스(5.2.)]

- [배경]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의 선제적 차단과 섬지역 마약원료 재배 근절을 위한 홍보
⇒ 해양마약 범죄건수 '18년 90건에서 ⇒ '22년 962건 증가(1,060%증)
- [Key메세지] 마약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노력 홍보 및 마약 단속현장 집중조명
- [홍보성과] 조회수 145만뷰(좋아요7,165) 5개월 간 언론보도 749건

5 [안전한 추석명절!] 민생안전을 위한 1,000km 집중점검



[KBS뉴스(9.26.)]

- [배경] 국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①해양안전·②수산물·③강력범죄 집중단속 등 민생안전을 점검하고 국민 의견 수렴
- [Key메세지] 기관장이 직접 1,000km를 이동, 민생안정 대책을 패키지로 묶어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모습 기획홍보
- [홍보성과] 신문 5개사, 방송 10개사, 통신 2개사 등 총 17개사 25명 기자단 참석 및 동행취재 ⇒ 중앙방송 12건 등 총 293건 보도

1. 2024년 정책 여건

□ [국외환경]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국가 간 경쟁과 협력 가속화

- (해양의 중요성) 육지 중심의 ‘지정학 시대’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바다와 직결되는 ‘해정학 시대’로 해양관리의 중요성 대두
※ 세계 각국은 국익 증진을 위해 해양경찰 집중 육성, 전략적으로 운영 중
- (해양패권 이슈) 남중국해 영유권, 대만해협을 둘러싼 국가 간 돌발상황 우려 등 해상물류·공급망 안정을 위한 해양관리 필요
- (해양기술 경쟁)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해양산업 육성 및 첨단기술 선점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규제 완화 등 민간부문 지원 확대

□ [국내여건] 해양 안보·안전·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

- (안보인식 변화) 기존 역내·대북·군(軍) 중심의 전통적 안보 외에도 역외·비전통적 안보(해양사고·해양오염·해상운송로 차단등)의 전략적 중요성 확대
- (국민안전 강조) 이태원 사고 등을 계기로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및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 기대치 상승
- (첨단기술 도입) 전통적인 해양수산 분야에 위성·드론·빅데이터·AI 등 新기술 적용으로 생산성 향상, 성장 동력으로 활용 증가

□ [국정기조] 대한민국의 新해양강국·글로벌 중추국가로 재도약

- (해양강국 비상) 정부는 탄탄한 해양안보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물류 공급망 확보 및 선박·항만 인프라 등을 첨단화하는 해양강국 추구
- (해양경제 활성화) 국가 차원의 해양에너지·해양바이오·레저관광 등 미래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등에 중점
- (안전한 바다관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레저활동·생업영위 등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집중

2. 2024년 정책 추진방향

□ 주요업무계획에 국정방향과 조직철학 등을 정책으로 반영

- (국정 방향) 정부 3년차를 맞아 민생 현장과 국민 중심의 정책 추진, 점토가 아닌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강조 ('24년 VIP신년사)
- (조직 철학) 우리청 비전이 현장에서 역량·전문성·국민존중으로 발현되어 국민들에게 정책적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정책 추진
 - ※ ①기본에 충실한 **역량있는** 해양경찰 ②현장에 강한 **전문성 있는** 해양경찰 ③국민을 **존중하고, 보다 신뢰받는** 해양경찰 ('24년 청장님 신년사)

□ 우리청 미래 비전(비전 2033)과의 정책 연계성 강화

- (정책 연계) ①비전2033 과제 ②비전2033 실행계획과 ③주요업무계획 ④개별 법률에 근거한 중기계획 간 정책의 방향성과 연계성을 강화
- (동력 확보) 정책구현을 위한 법률 제·개정 사항, 조직 신설, 정원·예산 확보, R&D, ODA 사업 등 핵심내용을 적극 반영

□ 안보·안전·혁신 3대 축으로 6대 모멘텀(정책동력) 확보

- (정책 설정) 조직의 비전을 업무 쏠 영역에서 달성하기 위해 안보·안전·혁신을 3대 축으로 하여 국민 중심의 문제해결에 중점
- (현장 역량) 국민 중심의 정책 집행을 위해 6대 모멘텀(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과제를 설정하여 집중 관리 추진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

정책
방향

국민 중심 민생정책

문제해결 중심 조직관리

3대
분야

안 보

안 전

혁 신

6대
모멘텀

해양경비력

현장대응력

수 사 력

과학기술력

협 력

실 행 력

□ 정책추진 방향을 고려한 전략적 점검과제 선정 및 관리

○ (과제 선정) 기능과 협의를 통해 2024년 점검과제 선정 (~1월 末)

※ 주요업무계획(비전2033, 국회 지적사항, 지시사항 등 포함)을 과제화시켜 추진

○ (관리 방식)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분기별로 성과 점검 등 관리 실시

※ (예) 해양경비력(2월 2주), 현장대응력(2월 4주), 수사력(3월 2주), 과학기술력(3월 4주), 협력(4월 2주), 실행력(4월 4주) 순 점검

Ⅰ 분야별·기능별 점검 과제(안) Ⅰ

국민 중심 민생 정책 (안보· 안전)	① 해양경비력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더욱 견고히하겠습니다. <경비, 정보, 장비, 기획>	
	과제1	(안보역량) 외국 관공선·불법 어선, 해양테러·안보위협 위기관리, 외곽도서 거점화 MDA운영기반 제도와화 불법 어선·밀입국 등 사범 처리
	과제2	(경비체계) 함정근무체계 개선, 경비구역 조정 (장비인프라) 전담함정 도입
	과제3	해상용 드론 유류 등 보급, 장비관리 체계 개선
	② 현장대응력 언제나,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구조, 경비, 장비, 기획>	
	과제1	(재난관리) 상황관리체계 레저 안전관리
	과제2	(구조역량) 구조·구급 장비 보급, 교육훈련 강화
	과제3	(방제역량) 방제 인프라 구축, 고위험 선박 관리, 위험구역 공간관리
	③ 수사력 국민이 안심하도록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수사, 정보, 기획>	
	과제1	(수사체계 구축) 수사조직·교육·채용·법제·장비 등 구축, 차세대 KICS 인권보호 및 피해자 회복 지원 해상교통사고처리 법률 제정
문제 해결 중심 조직 관리 (혁신)	④ 과학기술력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해양경찰을 만들겠습니다. <경비·구조·수사·방제·장비·기획>	
	과제1	(첨단장비기술) 위성 인프라·중고도 무인기 등 유무인 복합체계
	과제2	(IT시스템) IoT 기반 스마트 함정 플랫폼 디지털플랫폼·AI비서 등 도입, 빅데이터 활용 공간 정보
	과제3	(연구개발) 각 기능별 추진 또는 예정인 R&D 사업
	⑤ 협력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경비·구조·수사·방제·장비·기획>	
	과제1	(민관협력) 민간해양구조대 해양조사 협력 마약·사이버 수사 공조
	과제2	(산학협력) 선박펀드·공모전, 해양안전대전 기구 인증제
	과제3	(국제협력) 국가·국제기구 협력, ODA사업 마약 외국범죄 불법 어선
	⑥ 실행력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경쟁력을 조기 확보하겠습니다. <기획, 직속>	
	과제1	(조직역량) 예산 확충 직급구조 개선 법령 제개정
	과제2	(인적자원) 인재육성 인사·평가제도 개선 복지·처우개선
	과제3	(소통·혁신) 적극행정·혁신 정책소통 대국민 홍보 공직기강

III

주요 정책과제 (100개)

부 서		연번	과제명	비고
기획조정관 (20)	기획재정	1	중장기 주요정책 과제 관리 고도화	중점
		2	해양경찰 정책포럼 고도화 추진	중점
		3	대국회 업무 대응역량 강화	
		4	현장 중심의 균형있는 예산 편성	
		5	합리적 초과근무 정립 및 걱정 인건비 확보	
	행정법무	6	도전적 규제혁신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중점
		7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평가 대응 및 진단 강화	
		8	일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9	업무개선·지원 중심의 변화관리/혁신행정 추진	
	인사	10	성과·실적에 기반한 역량중심 인사제도 구현	중점
		11	역량·성과관리 중심, 「인사관리통합플랫폼」 구축	
	교육훈련	12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추진	
		13	미래형 교육훈련 플랫폼 구축	
		14	인적자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등 확대	
		15	공정한시험및우수인재채용을위한 「채용제도종합개선」	
	국제협력	16	HACGAM 개최로 글로벌 선도적 역할 수행	중점
		17	ODA 활성화를 통한 「PAX-KCG」 확대	중점
		18	인태전략에 부합하는 대륙별 전략적 협력체계 마련	
		19	퇴역함정 양여를 통한 해양안보 체계 구축	
	기획재정, 빅데이터	20	AI 행정혁신체계 기반 조성	

부 서		연번	과제명	비고
경비국 (11)	경비작전	1	고질적인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항공	2	항공인력 확보 체계 다변화(Two-Track) 추진	중점
		3	해상임무능력 강화를 위한 항공기 성능개선 추진	중점
		4	정비역량 강화를 통한 항공기 가동률 향상	중점
	교통관제	5	광역VTS 구축 및 관제 사각지역 해소	중점
		6	첨단기술을 활용한 VTS시스템 고도화	중점
		7	VTS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차세대경비	8	해양정보융합플랫폼 기반 마련	중점
		9	미래형 경비체계 전환을 위한 무인체계 및 전문가 확보	중점
		10	해양경찰 무인체계 운용역량 고도화	중점
		11	위성센터 인프라 구축	
구조안전국 (12)	해양안전	1	연안안전지킴이 사업 활성화 추진	중점
		2	연안사고 예방 정책소통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	
		3	파출소 구조·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4	어선 출·입항 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5	New 기동점검단 발족, 유도선 안전 UP	
	수색구조	6	해양재난구조대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하위법령 등)	중점
		7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및 관리체계 마련	
		8	수상구조사 제도 개편안 마련 및 자격 활성화	
		9	국제 해양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SAR 협력 확대	
	수상레저	10	수상레저기구 KC 안전인증 위한 입법 추진	중점
		11	국민편의와 안전강화를 위한 수상레저법령 개정	
		12	민관협력 기반의 수상레저 안전정책 구현	

부 서		연번	과제명	비고
수사국 (10)	수사기획	1	전문수사경찰 양성을 위한 수사연수소 직제화 추진	중점
		2	현장 수사력 강화를 위한 수사인력 확보	중점
		3	근무여건 개선 등 수사경찰 사기진작 방안 마련	중점
		4	수사경찰 경정 및 전원 특별승진 제도 마련	중점
		5	선제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차세대 KCS 안정적 운영	
	수사심사	6	해양범죄 수사 지식능력 확대를 위한 「수사 실무 법령집」 제작	중점
		7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중점
	형사	8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해양 마약수사 국제포럼』 추진	중점
	과학수사	9	해양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10	수중과학수사 전문기관 도약	
정보외사국 (9)	정보	1	정보경찰 역량 강화 및 준법지원 활동	중점
		2	현장·국민들 대상 소통·공감을 통한 정보활동 추진	
		3	범죄첩보 수집 및 정보협력 채널 상시화 방안 마련	
	외사	4	해양주권·국경 수호를 위한 국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중점
		5	해양 국제범죄 대응 국제 공조수사 강화	
		6	유관기관 정보협력 실질적 네트워크 활성화	
	보안	7	안보위해선박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 채널 다각화	중점
		8	해양안보에 특화된 보안업무 환경 조성	
		9	체계적·효율적 해양 안보 상황 대응체계 구축	
해양오염방제국 (11)	방제기획	1	해양오염사고 재난관리체계 마련	중점
		2	현장 중심의 방제조직 내실화	
		3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방제인프라 확보	
		4	해양오염 방제분야 국내외 협력 강화	
	기동방제	5	친환경선박 확대 도입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중점
		6	해양환경 위기대응을 위한 국가 방제대응 시스템 강화	
		7	해양오염 긴급방제 민·관 협력 활성화	
	오염예방	8	항만 대기오염 등 해양환경 관리 강화	중점
		9	해양오염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10	국민 친화적 해양환경보전 활동 전개	
		11	미래 지향적 해양오염 예방업무 발전 기반 마련	

부 서		연번	과제명	비고
장비기술국 (13)	장비기획	1	선박편드를 활용한 함정건조 기반 구축	중점
		2	국민중심 함정건조 계약방식(협상계약) 정착	중점
		3	미래형 경비체계 장비기반 마련	중점
		4	연구개발(R&D) 전담기구 신설	중점
		5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	
	장비관리	6	"통합장비관리시스템(장비나라) 재구축" ISP 추진	중점
		7	현장에 보급한 정수(定數)물품 품질 개선	중점
		8	현장 우수장비보급(2단계) 개선 추진	중점
	정보통신	10	정보화 사업·예산 통합관리체계 강화	중점
		11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도청 체계 강화	중점
		12	KOSNET 위성통신망 성능개선 및 보안체계 확립	중점
		13	국제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기반시설 개선 추진	
직속부서 (14)	대변인	1	청년 중심(MZ세대)의 국민기자단 구성·운영	
		2	해양경찰 주요정책 국민 친화 홍보 강화	
	종합상황실	3	상황분석을 위한 상황관련 통계 고도화	중점
		4	안정적·효율적 상황시스템 구축	중점
		5	상황분석을 통한 사전 대비체계 구축	
		6	현장 중심의 상황처리 체계 정착	
	감사	7	바로해(海) 시스템 기반「현안해소형」감사체계 확립	
	감찰	8	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9	예방감찰 내실화를 통한 비위 예방	
	운영지원	10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건립 추진	중점
		11	해양경찰 마음치유원 건립	중점
		12	청년인턴 일자리 창출 및 참여기회 제공	
		13	제복근무자 예우 활동 강화	
		14	자기규율적 안전관리 체계의 현장 정착	

기획조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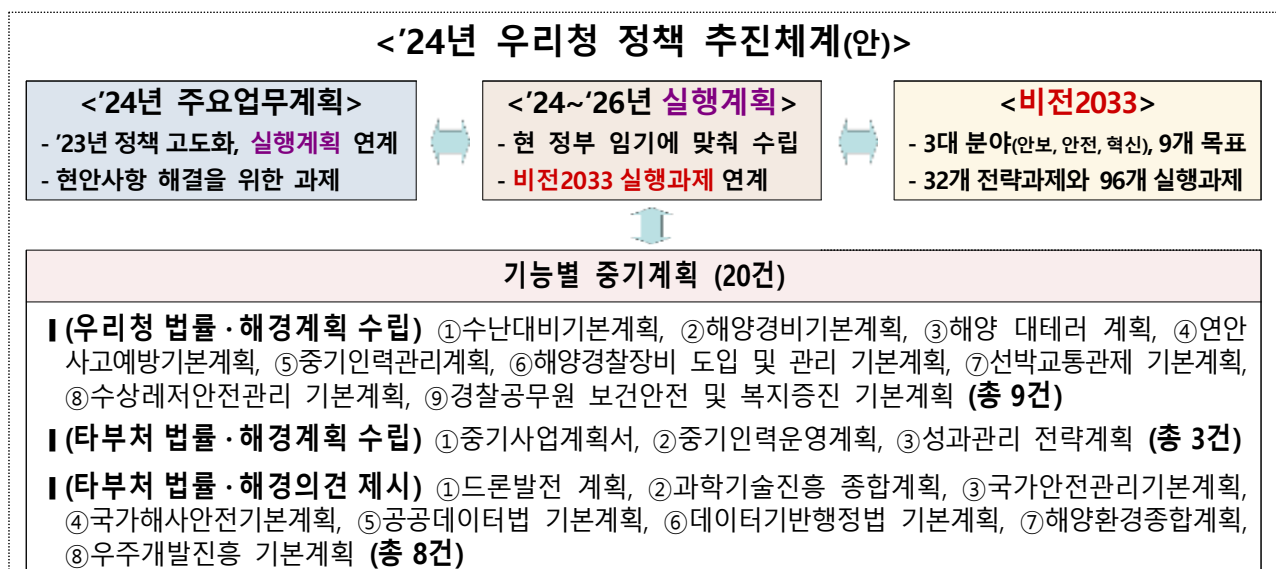
중점 추진	1. 중장기 주요정책 과제 관리 고도화 (연계과제) '23년 정책 고도화 [성과목표] 비전2033과 중기 계획을 연계, 전문가 정책 자문을 통해 우리청 미래전략 관리	기획재정
------------------	---	-------------

□ 추진 배경

- (연계성 강화)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별 중기 계획(20건)을 미래2033 등과 연계, '24년은 전략적으로 미래과제를 추진하는 元年 선포
- (추동력 확보) 주요정책의 품질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정책진단과 조직발전 제안 등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과제의 완결성 제고

□ 주요 내용

- (정책 연계 점검) ①비전2033 과제 ②비전2033 실행계획 '24~'26과 주요업무계획 ③개별 법률에 근거한 중기 계획* 간 정책의 방향성과 연계성 강화
* 중기사업계획서(예산), 성과관리전략(성과), 중기인력운영계획(조직) 등 20건



- (미래정책 자문) 해양경찰위·정책자문위 등 외부 전문가 대상 우리청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정책자문을 통해 실행계획 보완·수립
※ 각 기능 정책개선 및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도 반영

□ 추진 일정

일 정	주요 내용
1~3분기	❖ 해양경찰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 미래정책자문, 정책연계점검(3, 6, 9월)
4분기	❖ 실행계획 등 수립 시 부서별 연구용역 및 미래정책자문 결과 등 반영(11~12월)

중점 추진	2. 해양경찰 정책포럼 고도화 추진	기획재정
	(연계과제) 청장 지시사항 [성과목표] ('23년) 국회포럼(4회)→ 국회·대학·학회 등과 정책소통(세미나, 컨퍼런스 등) 실시	

□ 추진 배경

- 그간 국회포럼 등을 통해 축적된 정책 네트워크를 학회와 우리청 교육정책협의회(12개 대학) 등으로 확대하는 등 교류의 장 마련
 - ※ (청장님 강조사항) “세미나, 토론회에서 기능별 전문가 많이 참여토록 계획 수립(8.21.)”
- 개별·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회와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전략적인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한 주요정책 추동력 확보 필요
 - ※ 우리청은 한국해양경찰학회(교육원),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관제),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방제), 대한조선학회(장비기획), 한국정책학회(제도TF) 등 20여 곳과 교류 중

□ 주요 내용

- (인력POOL 관리) 정책 전문성과 영향력 등을 고려, 각 기능과 협업이 가능한 학회와 전문가 인력POOL을 선정, 본청 차원에서 별도 관리
- (포럼 다변화) 기존 국회 포럼의 시·공간·내용 상의 제약*을 극복, 본청·소속기관의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 협력체계 다변화 추진**
 - * (제약요소) 시간 국감, 선거 등 국회 일정, 공간 의원 회관(서울), 내용 의원 관심 분야
 - ** 우리청의 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학회 내 친해경 전문가 그룹 육성

기 존 (현행)	개 선 (안)
▶ 국회 정책포럼 (본청/8회 계획, 4회 개최) ▶ 학회 교류 ↓ 지방청의 역할 ×	▶ 국회 정책포럼 (본청 / '24년부터 분기 1회) ▶ 학회와의 정책소통 (본청·지방청 / 반기 1회)

- (소통 다양화) 본청 국정과제와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한 인태전략, 신흥안보 등을 중심으로 협업 소속기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 불법 외국어선(중부, 서해), 서핑 안전관리·해루질(동해), 무사증 밀입국(제주), 오염사고(남해)

□ 추진 일정

일 정	주요 내용
1분기	❖ 부서 수요조사 및 인력풀 선정, 학계와의 정책협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1월)
2분기	❖ 본청 및 소속기관 정책포럼 (반기 1회)
3분기	❖ 국회 원구성 후 포럼 개최 (8~9월)
4분기	❖ 본청·소속기관 정책포럼 (반기 1회), 비전2033실행계획 및 업무계획 반영 (11~12월)

정책	3. 대국회 업무 대응역량 강화 (연계과제) 국회 지적사항(국감)	기획재정
	[성과목표] 국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우리청 정책 추동력 제고	

□ 추진 배경

- 국회 지적사항을 우리청 정책발전의 촉매제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의원실과의 협업을 통해 조직의 난제를 해결하는 정책채널로 운용
- 특히, '24년은 22대 국회 출범으로 의장단 및 상임위 등 재구성 예정, 원활한 국회 업무를 위해 의원실과의 소통·협업체계 강화 필요

□ 주요 내용

- (교육 강화) 국회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발령 직후, 예·결산 및 국감 시기에 맞춰 계장급·실무자 대상 요구자료 처리 등 교육
- (정책 관리) 과거 지적사항이 재반복되지 않도록 후속대책 관리, 법률 제·개정 및 예산 관련 정책은 대면 또는 현장 초청 설명
 - ※ 의원실 관심사항 파악 및 각 기능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국회포럼 개최
- (신뢰 구축) 본청 국장단·소속 기관장과 의원실과의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정책협업 활성화,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계장·반장급 대상 국회 지적사항 및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2월, 수시)
2분기	❖ 22대 원 구성에 맞춰, 여·야 의원실, 사무처, 당 정책위 대상 정책설명 (6월)
3분기	❖ 국회 주요 지적사항 및 우리 청 현안사항, 의원실 관심사항 등 국감 대응 (10월)
4분기	❖ 국감, 예결산 지적사항 후속대책 마련 및 '25년 주요업무계획 반영·관리 (12월)

정책	4. 현장 중심의 균형있는 예산 편성 (연계과제) 국정과제 41번	기획재정
	[성과목표] ① (1차목표) '25년 정부 예산안 증가율 보다 높은 해경청 예산 확보 ② (2차목표) 예산 2조원 돌파 : ('24년) 1조 8,927억원 → ('25년) 2조원	

□ '25년 예산 2조원 달성

- (목표) 건전재정 속에서도 '25년도 정부 예산 증가율(3~4% 전망)보다 높은 증가율을 목표로 기재부·국회 등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사적 대응
- (전략) 중기사업계획 제출·심의(1~3월) 및 단년도 심의(5~8월) 前「재정 전략회의(2회)」를 통해 '25년도 신규 및 증액사업 발굴과 전략적 대응

2024년(1조 8,927억)
▶ (인건비, 기본경비) 9,996억
▶ (주요사업) 8,931억



2025년 목표(2조)
▶ (인건비, 기본경비) 10,676억(↑680억, 7%)
▶ (주요사업) 9,324억(↑393억, 4.4%)

'25년은 전년도 증가율(4.5%)을 넘어 해양경찰청 재정 「2조원 돌파 元年」의 해

□ 주요 내용

- (전략자산) 함정·항공기 노후교체 및 서해전력증강(3척), 광역VTS 구축(동해권) 등 차질없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 (현장예산) 함정·파출소 등 현장 근무여건 개선, 신형 연안구조정 등 4대 분야 현장예산 확보(①구조안전, ②경비장비, ③범죄수사, ④해양환경)
- (미래투자) 종합복지타운('24년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및 MDA·위성센터 구축예산 등 해양경찰 미래를 위한 예산 중점 확보
- (기타예산) 연례적 공공요금 부족(국정감사 지적) 관련, 신규 청사·함정 등 증가소요를 감안, '28년까지 연차적으로 64억원(117→181억) 증액 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중기사업 심의 대응(1~3월), · 22회계연도 지적사항 조치(1~3월), · 상반기 예산 지원(3월)
2분기	· 예산요구서 제출 및 1차심의 대응(4~6월), · 결산 요구자료 및 예비검토 대응(4~6월)
3분기	· 예산안 2~4차심의 대응(7~9월), · 결산 국회심사 대응(7~9월), · 하반기 예산 지원(9월)
4분기	· 예산안 국회심사 대응(10~12월), · 예산지원 실적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12월)

정책	5. 합리적 초과근무 정립 및 적정 인건비 확보 (연계과제) 국회 지적사항(결산)	기획재정
	[성과목표] ① (1차목표) 정부 인건비 증가율 보다 높은 해경청 예산 확보 ② (2차목표) 정부 인건비 증액 최대 한도(7%, +666억원) 달성	

□ 추진 배경

- 현업부서의 과도한 초과근무로 직원 피로도 증가, 내근부서 근무 기피, 인건비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예산 확보* 필요

* 정부의 건전재정 속에서 인건비 증액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도전적 증액 추진

□ 주요 내용

- (초과근무 정립) ① 초과근무 표준시간제 도입, ② 초과시간 총량제 운영, ③ 초과근무 산정시스템 구축 등 합리적인 초과근무 운영체계 개선

< '24년 초과근무체계 주요 개선내용 >

	'23년(현행)		'24년(개선)
개선방안	① (현업직) 초과근무 표준시간 부재 ② (현업직) 초과시간 총량제 미운영 ③ (현업직) 초과근무 산정조서 수기 작성	⇒	① (기능별) 초과근무 표준시간제 도입 ② (관서별) 초과시간 총량제 운영 ③ (현업직)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구축

* 초과시간 표준시간제 : 기본교대 + 집중근무·교육훈련 등/ 태풍·사건사고 등 추가근무시간 반영

- (인건비 증액) ① 사무실 초과시간* 상향^(24h→54h, 단계적 확보), ② 일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위한 초과수당 증액^(+200억원), 연가보상비 전액^(+55일) 지급 등 인건비 재원 확보

	'24년 기준		'25년 목표
인건비	▶ 9,509억(전년대비 +422억, 4.6% ↑)	⇒	① (1차목표) 정부 증가율 보다 높은 인건비 확보 ② (2차목표) 10,175억원(+666억, 7% ↑)

* 인사처·기재부와 매년 초과근무 상향을 위한 협의 등을 통한 연차적 확대(+30억원이상)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초과근무 운영체계 방안 정립 및 이행점검 (1월~)
2분기	❖ 초과근무 산정조서 관리시스템 구축 (6월)
3분기	❖ 기재부 등 유관기관 대응 인건비 예산 확보 (7~9월)
4분기	❖ 국회 등 유관기관 대응 인건비 예산 확보 (10~12월)

중점 추진	6. 도전적 규제혁신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연계과제) 국정과제 16번	행정 법무
	[성과목표] ❶ 규제혁신 이행과제 발굴·추진 ('23년) 20건 → ('24년) 25건	

□ 현 정부 3년차, 가시적 성과 거양이 필요한 시점

- **(대외적)** 현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 기조로 규제혁신·규제심사 관련 제도가 신설*·강화됨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방안 요구
* (신설)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등
- **(대내적)** 내부적 관심 제고와 창의적·도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위해 '규제혁신 우수성과 공무원' 대상 합당한 포상체계 마련 필요

□ 규제혁신 추진체계 고도화로 효율적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 < '24년 규제혁신 중점 추진과제 > —

- Ⅰ (국민권익 보호) 경미 해상사고 형사처벌 특례 마련, 특정해역 어업규제 개선 등
- Ⅰ (신산업 진흥) MDA 구축 및 경비체계 고도화, 자율운항선박·로봇 로드맵 등

- **(TF 강화)** 전문분과 기반의 자기주도적 추진체계 전면 개편(~3월)
* **[기존]** 8개 과(등록규제 기준) → **[개편]** 국별 전문분과 구성(규제건의 등에 따라 변동 可)
- **(업무 전담화)** 규제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규제 관련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사무 분리 및 전담인력 확보(연중)
*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12건, 사후규제영향평가제도 신설 등
- **(규제혁신 포상 확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대상으로 사기진작 및 합당한 보상 제공(연중)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제1항제1의2호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연중	❖ 유동정원 소요 제출('23. 12월)	❖ 규제혁신 포상 관련 기능협약(1월)
	❖ 규제혁신 TF 개편(3월)	❖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포상(9월)
매월	❖ 규제혁신 TF회의(수시)	

정책	7.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평가 대응 및 진단 강화 (연계과제) 비전2033	행정 법무
	[성과목표] 최종 평가대상 신설기구 및 신규인력 정규화 달성	

□ 추진 배경

- (외부 환경) 새 정부 출범 후, 정부 조직·인력 통제 기조는 지속 강화되는 추세
- (내부 환경) 국정과제 성과 창출 및 해양안전 집행정책 수립·이행, 우리청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한 내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필요

□ 주요 내용

- (평가 대응) 행안부 주관 신규인력·기구 평가 및 진단 대비, 기민하고 체계적인 사전 대응을 통해 기구·인력 정규화 추진

< '24년도 신규인력 및 신설기구 평가 대상 >

구 분	대 상		평가기간
인력	649명	①파출소(292명), ②종합상황실(93명), ③구조대(112명), ④형사분야(51명), ⑤항공단(60명), ⑥방제요원(41명)	'24. 12월
기구	2개	①본청 수사심사과, ②중부청 안전총괄부	'24. 9월

- (조직진단) 지방청·해경서 등 소속기관 행정수요 분석, 기구 및 정원 운영실태 점검 등 조직운영 적정성 평가를 통한 효율화 방안* 마련
- (임시조직 활용) ①자율기구 ②총액 조직 등 자율형 조직 지원 제도의 적재적소 활용으로 통제된 기구 활로 확대, 조직 역량·성과 제고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2분기	❖ 조직진단 대응 및 자체 소속기관 조직진단 추진
3~4분기	❖ 신규인력 및 신설기구 평가 대응, 유동정원 및 총액인건비제 성과평가

정책	8. 일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연계과제) 국정과제 14번	행정 법무
	[성과목표] ('24년) 정성평가 도입 → ('25년) 기관평가, 현장평가(상황실, 구조대 등), 개인기여도 등 정책연구 → ('26년) 성과평가체계 전면 개편	

□ 추진 배경

- **(대외적)** 現정부에서 3대 과제(노동·교육·연금)과 더불어 공직사회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 공직 내 파격적 성과주의 도입 요구
- **(대내적)** 시험승진 축소, 연공서열 타파 등 평가·보상의 공정성 요구에 따라 연공·경력보다 실적·성과 등을 반영토록 평가의 개선 필요성 제시

□ 주요 내용

- **(성과지표 정비)**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양경찰 임무 맞춤형 전략목표·성과지표 개발*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성과지표 정비
* 해양경찰법 임무 및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 개발

- **(정성평가 도입)** '24년 성과평가 시 정성평가 도입을 위해 워크숍 및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

평가체계개선(안) 수립	의견조치	성과평가 실시
부서정성평가 도입 3.31까지	워크숍 및 전국 설명회 ※ 내부평가단 구성(안) 의견조치 5~7월	성과관리시스템 활용 ※ 평가단 랜덤구성, 블라인드 평가 12월

- **(시스템 이용 활성화)** 소구성원이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서 성과평가에 참여, 평가의 수용력을 향상토록 정성평가 기능 활성화
* '23년 정성평가 기능 시범운영(~24.8월) 및 시스템 안정화 후 '24년 하반기 정성평가 실시(11~12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전략목표·성과지표 정비 등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2~3월) ❖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과제(성과지표 등) 수립(2~3월) ❖ 정성평가를 도입한 부서성과평가 체계(안) 수립(3월)
2~3분기	❖ 워크숍(4월) 및 전국 설명회(6~8월) ❖ 자체평가위원 등 외부전문가 의견수렴(6~9월)
4분기	❖ 정부업무평가 주관 기관(국조실, 행안부 등) 방문(10월) ❖ 정성평가 실시(11~12월)

정책	9. 업무개선·지원 중심의 변화관리/혁신행정 추진 (연계과제) ① 국정과제 13번, ② 국정과제 14번	행정 법무
	[성과목표] ('23년) 조직문화 개선 ^{중심} → ('24년) 일하는 방식 ^{총괄} (업무추진방식 + 업무프로세스 개선+ 업무환경+ 조직문화)	

□ 추진 배경

- **(대외적)**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기조 속 민·관 협업 및 청년소통을 통한 비효율적 행정업무 개선 등 변화관리 및 혁신행정 추진
- **(대내적)** 조직문화 개선 정책 안착, 범정부 혁신 방향 고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확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정 구현 필요

□ 주요 내용

- **(변화관리 추진)** 기본업무 수행여건 마련을 위한 조직현황 진단·소통을 추진하고, 조직 내 일하는 방식 혁신을 중심으로 조직문화 개선
 - 변화관리 목표를 정립하고,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전략 과제를 수립하여 소속기관별 실천과제 발굴·개선
- **(정부혁신 내재화)** 해양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 대국민소통을 강화*하고, 민·관 협업 안전인프라 구축 및 정부혁신 내재화 교육 추진
 - * 소통24^(행안부), 국민생각함^(권익위), 혁신박람회 등 범부처 온·오프 소통 채널 적극 활용
- **(적극행정 지원 확대)** 업무 추진 시 안정감 부여를 위한 의사결정·면책 지원제도* 활성화 및 내부 강사 활용, 맞춤형 교육 확대 시행
 - * 의사결정 업무 시 장애요인 발생 → (공무원)의사결정 요청 → (적극추진)심의의사결정
면책 면책 감사·징계 시 → (공무원)면책 요청 → (적극추진)심의·면책 심의·건의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변화관리 개선 현황진단(2월), 정부혁신/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3월)
2분기	❖ 변화관리 개선 기본계획 수립 (4월) 및 추진과제 발굴(5월)
3분기	❖ 혁신파이어니어 대표단 워크숍(7월), 변화관리 개선 중간점검 및 컨설팅(8월) ❖ 범부처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참가(9월)
4분기	❖ 일하는방식/정부혁신/적극행정 실적 보고 (11월), 조직문화 우수 기관/개인포상(12월)
매분기	❖ 해양경찰청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심의

중점 추진	10. 성과실적에 기반한 역량중심 인사제도 구현 (연계과제) ① 비전2033, ② 23년 정책 고도화	인사
	[성과목표] 역량평가시스템 구축을 ('23년) 0% → ('24년) 100%	

□ 추진 방향

- 「성과·실적」중심으로의 1년차 제도개선^{'23년}에 이어, 연공적 요소를 축소하는 등 완성도 높은「역량중심」의 인사체계 구축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 주요 내용

- (연공서열 축소) 역량을 갖췄다면 연공과 관계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경평 반영비율” 조정 및 “속진형 간후제” 도입

▶(경력평정 비율) 근무사실만으로 점수가 누적되는 경력평정의 비율을 지속 축소			
현행 (102점)	근무성적평정(65)	경력평정(35)	가점(2)
↓			
'24년	근무성적평정(70)	경력평정(30)	가점(2)
↓			
'26년~	근무성적평정(80↑)	경력평정(20↓)	가점(2)
※ (참고) 일반직은 경력평정 비율을 대폭 축소 중이나(당초 30%→20%('15년)→10%('23년)), 경찰공무원은 '94년 이후 개정된 바 없음			
▶(속진형 간후) 능력에 따른 선발과 보상, 보직관리를 위해 현직자 대상 선발 및 교육임용			

- (심사시험 정비) 심사승진 가점 자격증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경장승진은 “심사승진”으로 일원화하여 입직초기의 성장을 지원
 - * 심사7:시험3 시행 후, 환류를 거쳐 경장시험 폐지 검토('24개정, '25시행 / 안)
- (현장역량 유지) 현장결원 방지 및 신분불안 해소를 위해, 임용대기 1년 도래 시 자동임용토록 규정개정 → 현장역량의 항상성 유지
 - * 현장결원에 대한 국감 등 지적 관련, 제도적 해결방안 마련
 - ** 일반직은 자동임용 규정 마련 후 운영 중, 제복부처 중 우리청 최초 도입
- (역량평가 구축) 계급·직위별 핵심역량을 도출하여 부합정도를 평가하는 “역량평가” 체계 마련, 상위직 역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제도개선 기본안 마련 및 인사혁신처 등 실무협의(3월)
2분기	❖ 현장 순회 의견수렴(4월) 및 규정 개정계획 수립(6월)
3분기	❖ 해양경찰위원회(7월) 및 입법예고(9월) 등 법령개정 제반절차 진행
4분기	❖ 개정완료 및 과제별 시행(10월~)

정책	11. 역량 성과관리 중심, 「인사관리통합플랫폼」 구축 (연계과제) 비전2033	인사
	[성과목표] 「인사관리통합플랫폼」 시스템 구축율 ('23년) 0% → ('24년) 100%	

□ 추진 방향

- (개별시스템 통합) 분산(14개)된 인사정보를 통합, 체계적인 인사관리

성과관리	에듀오션	견문보고관리	형사사법포털	보안정보관리	외사포털	국제해양정보
수상구조사	업무포털	빅데이터포털	SI해양경비지원	통합건강관리	수상레저종합정보	미래형교육훈련

- (수기자료 디지털화) 수기(手記) 관리로 인한 인사정보 불일치를 '연계 디지털화'하여 인사정보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 역량 기반 인사관리 마련, 개인역량 → 조직 핵심역량으로 발전

- (전문인력 맞춤형 관리) 채용분야, 경과, 직별, 직렬 등을 고려한, 능력과 경력 중심의 체계적 보직관리를 위해 기능별 관리 권한* 마련

* 본청 기능별 담당자 계정으로 전문 인력관리 등 접근권한 부여·관리

- (조직 핵심인재 관리) 자격증·경력 보유자 등에 대한 인력충원 부터 전문교육 이수까지 지속적으로 핵심인재 관리·육성

* 경력·특기에 따른 보직관리 및 '분야별 전문가' 양성 환경 조성

□ 데이터 기반 인사관리 운영으로 공정성, 투명성 확보

- (역량중심 인사관리) 다면평가, 역량평가, 성과 등 인사평가 체계 지원기반 마련과 개인별 역량관리 등을 위해 인사정보* 제공

* 근평, 승진후보자 순위, 교류인사 진행사항, 개인별 경력관리 등

- (all-in-one 시스템화*) 다양한 인사정보 데이터 추출로 인사통계를 시각화하고, 승진시험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일원화

* 인사처 추진, 3세대 e사람 구축('24년) 및 통합채용시스템('25년) 연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인사관리통합플랫폼」 계약 및 추진로드맵 마련
2분기	❖ 인사담당 의견수렴 및 시스템 인프라 구축
3분기	❖ 시스템 안정화 및 베타(Beta) 테스트 진행
4분기	❖ 근평 및 승진 등 「통합인사 정보시스템」 활용 추진(시범운영)

중점 추진	12.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추진 (연계과제) 비전2033	교육 훈련
	[성과목표] 인재개발원 사업추진 ('24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및 기재부 대응	

□ 사업 개요

- 재직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예산(2,140억)·인력(총189명)·연간 교육인원(7,000명) 규모의 **인재개발원** 설립 추진
- ※ 교육원(신임)·인재개발원(재직자) 교육 / 국내(경찰청·소방청) 및 美·日도 분리 운영 중

□ 주요 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2분기) → [선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기재부)
 - 인재개발원 신축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사업)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완료에 따라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

〈* 연구용역 개요〉

- ✓ (연구명)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필요성 및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
- ✓ (연구기간) '22. 8. 31. ~ '23. 12. 13.(약 440일)
- ✓ (연구내용) ①부지 적합성 평가(선정) ②설립필요성 논리개발 ③사전타당성 조사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인재개발원 소요정원 요구(3월)
2분기	❖ 인재개발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6월)
3분기	❖ 기재부 업무협의 등 예타 대응(7~9월)
4분기	❖ 기재부 업무협의 등 예타 대응(10~12월)
연중	❖ 인재개발원 조직·예산 확보 대응

중점 추진	13. 미래형 교육훈련 플랫폼 구축 (연계과제) ① 국정과제 41번, ② 비전2033	교육 훈련
	[성과목표] 메타해양경찰청 구축('23)요구사항 분석→('24)시스템 설계 첨단훈련센터 설립('23)부지 선정→('24)국유재산기금 확보	

□ 추진 배경

- 급변하는 해양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부서원의 직무수행 전문성과 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훈련시설 구축

□ 「가상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R&D)」 시스템 설계

- '24년도는 핵심기술 개발 및 설계 단계로, AI 교육훈련 평가분석, 지능형 NPC 생성, XR 콘텐츠, 고속단정 시뮬레이터 등 개발 추진
* '23년 요구사항 분석→'24년 시스템 설계→'25년 시제품 개발→'26년 통합시험→'27년 최종평가
- 교육훈련 플랫폼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초실감 훈련장·통합플랫폼 실증·고도화를 통한 메타 해양경찰청 및 첨단훈련센터 기반 마련



□ 첨단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 추진

- (부지선정) 해양경찰교육원 유허부지 활용으로 토지매입비 예산절감
- (예산확보) 국유재산기금으로 청사 설계 및 첨단훈련센터* 신축 추진
* ①국유재산기금 예산대응('24) ②공모·설계('25) ③공사('26~'27) / 총 4년 소요
- (첨단훈련센터 신축) 연면적 1,677㎡(약 508평, 지상 2층 규모)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청사수급관리 계획 수립(1~2월), 공용재산취득 계획 수립(2~3월)
2분기	❖ 기재부 국고국, 과기부 R&D 예산대응(4~6월), 공공건축사업 계획 수립(6월)
3분기	❖ 공공건축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심의위원회 개최(7~8월), 기재부 예산대응(7~9월)
4분기	❖ 국회 예산 대응(10~12월)

정책	14. 인적자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등 확대 (연계과제) ① 비전2033 ② 국회 지적사항(국감) ③ 청장 지시사항	교육 훈련
	[성과목표] 글로벌 역량강화 ('23년) USCG 교육 20명 → ('24년) USCG 교육 25명 대국민·수탁교육 ('23년) 33개과정 2,250명 → ('24년) 41개과정 3,189명	

□ 추진 배경

-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조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외협력 정책 강화로 외연 확장 및 글로벌 인재양성 추진

□ 글로벌 역량 강화

- 「USCG 연수 프로그램」정례화 추진 및 신입경찰까지 대상 확대
※ ('23년) 간부후보생 20명 → ('24년) 간부후보생 20명 + 신입순경 5명
-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외국대학*과 제휴하여 어학·국제업무 관련 위탁교육 신설 추진 및 맞춤형 외국어 프로그램 확대 지원
* 조지메이슨대·겐트대 등 5개 대학/「인재개발플랫폼」內 YBM 프로그램 확대
- 원양항해 정례화 및 ASEAN 회원국과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등 확대되는 국제업무 감각 배양을 위한 자발적인 외국어 실력 향상 독려*
* 간부후보생 신입과정 평가 항목, 외국어 능력(자격) 가점 분야 신설
- 우리청 현안·추진정책에 적합한 국내·외 교육훈련 과제 발굴 및 수행
※ ❶(국내 민간위탁) '23년 2건(드론조종·국제감식) → '24년 + 1건 이상(과수·재난관리 등)
❷(국외 단기) '23년 1건(단정운용-싱가폴) → '24년 2건 이상(수사·수색-미국·네덜란드 등)

□ 「관-학 네트워크」 강화

- 해양·수산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측과 대표·실무협의 등을 상설화하고 포럼·학술세미나를 연 1회 이상 개최 학술교류 활성화
- 재직자 역량강화·전문성 향상을 위한 「^{2개 이상 대학 공동 운영}해양경찰공유대학」추진
 - 해양경찰 업무 특성 고려하여 전 지역에서 접근 가능한 대학* 설치
 - * 우리청과 MOU 맺은 대학 중심으로 설계 및 운영 자원·인원 등 지속 대응

□ 대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 안전관련 전문교육기관으로 공식 지정된 교육원 시설을 활용하여 국민 친화형 교육 서비스 강화 및 홍보로 국민 안전의식 개선

행안부 인증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22.5.25.),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23.4.20.)
교육부 인증	「청소년진로체험 기관」('21.12.22.), 「초등교사 생존수영 직무연수기관」('22.6.27.)

- 민방위 자율체험형 안전체험기관 지정('23.11.22, 행안부)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24년) 재난대응실습장 시범 운영(800여명) → ('25년) 정례화 전국확대(1,500여명)

□ 공공분야 수탁교육 확대

- 유관기관 관리자급 대상 해양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타 기관 간 융합행정 활성화 도모를 위해「해양치안정책과정」신설 추진
 - 시범운영* 후 장기과정(6개월, 총경급 기본교육과 통합)으로 확대 검토
 - * (횟수) 상·하반기 각 1회(3주) / (대상)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 20명
- 국내 공기업·공공기관 등 분야별 해양특화교육 대폭 확대(300명↑), 재난안전 교육 강화 및 해외 해양치안기관 공무원 초청연수* 확대
* ('23년) 해외 해양치안기관 공무원 초청연수 등 3회 43명 → ('24년) 5회 60여명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국외단기교육(부처특화) 수요조사(2월), 국외훈련 운영계획(3월), 「해양치안정책과정」 수탁교육 계획 수립(3월), 해양경찰 공유대학(석사과정) 신설 관련 협의(3~6월)
2분기	❖ 「글로벌인재양성과정」 계획 수립(4월), 교육정책협의회 개최(5월), 인사처 민간 위탁교육 수요조사(6월), 「해양치안정책과정」 수탁교육 운영(6월)
3분기	❖ 국외단기교육(부처특화) 수요조사(8월), 「글로벌인재양성과정」 운영(9월), 학술세미나 개최(9월), 공유대학 관련 교육부·인사처 심의 관련 대응(9월~11월)
4분기	❖ 교육정책협의회 개최(10월) USCG 연수과정 운영(10월), 국외장기훈련(영어권) 대상자 자체선발(10월), 「해양치안정책과정」 수탁교육 운영(11월)
연중	❖ 위탁교육과정 운영

정책	15. 공정한시험및 우수인재채용을위한「채용제도 종합개선」 (연계과제) ① 국정과제 91번, ② 비전2033	교육 훈련
	[성과목표] 원서접수~면접까지 종합 제도 개선 및 관련 규정 개정 추진(4개)	

[법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 추진 배경

-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고 채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채용제도 개선 필요

□ 주요 내용

- 응시자 편의 증진과 미래 해양경찰을 이끌어 나갈 인재 확보를 위해 그간 일부 개선에 그쳤던 채용제도·시스템의 총괄적 개선 추진
 - (원서접수 방식 개선) 원서접수부터 합격 발표까지 소과정 시스템화, 개인정보·통계 관리, 채용서류 일괄 제출·관리(정부24 등 연계)
 - ※ 공무원 채용정보·응시현황 통합, 자격증 가산점·주요 근무경력 기간 등의 자동산정을 통한 업무 자동화,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절차 간소화
 - (체력평가 개선) 남녀통합 체력기준 설계, 종목 개선 등 新평가체계 마련
- 채용제도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우수인재 선발 기반 구축
 - (법령·행정규칙 개정) 제도 개선사항 시행을 위한 법제 개정 및 행정규칙 현행화를 추진하여 채용·승진시험의 원활한 집행 기반 마련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통합채용시스템 활용 원서접수(3월)
2분기	❖ 체력검사 필드 테스트(6월)
3분기	❖ 「승진시험 규칙」 개정 추진(7월)
4분기	❖ 「채용시험 규칙」 개정 추진(10월), 「임용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12월)
연중	❖ 면접시험 개선 검토, 해양경찰 관련 강의 개설 지원

중점 추진	16. HACGAM 개최로 글로벌 선도적 역할 수행 (연계 과제) 비전2033	국제 협력
	[성과목표] HACGAM 개최 ('23년) 참여 → ('24년) 개최	

□ 추진 배경

- **(글로벌 중추국가 기여)** 국가 경제와 우리청 조직 규모 성장에 따른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 확보 및 주요 해상교통로 연안국 협력 강화
- **(해양 안보 주도적 역할)** 회의개최국으로서 회의 개최 일련의 과정을 통한 회원국과 해양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해양안보 주도적 역할 확립

□ 주요 내용

- 아시아 지역의 대표 해양치안기관장회의인 '아시아해양치안기관 회의' 최초 개최로 아시아 해역 해양안보 확립의 선도적 역할 수행

<참고>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회의(HACGAM)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설> '99년 일본 해상보안청 제안으로 '04년 이사회 해양치안기관회의 신설(도쿄) ■ <개요> 아시아 지역의 마약·해적 등 국제성 범죄 대응 등 국제 공조 방안 논의 				
< 22개국 및 1개 지역(홍콩) 2국제기구 >				
대한민국	호 주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 국	인 도	인도네시아	일 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튀르키예	태 국
베트남	프랑스	홍 콩	ReCAAP-ISC	UNODC

- 전문가·기관장 회의 일정 및 장소, 세부행사 계획수립 등을 위한 HACGAM-TF구성으로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 철저

<제 20차 아시아 해양치안기관 회의 개최(안)>

~'24년 2월 기본 계획 수립	~'24년 5월 TF 구성	~'24년 6월 전문가 회의	~'24년 9월 기관장 회의
일정, 장소, 프로그램 등 기본계획 확정	HACGAM TF 구성 세부계획 작성	국제해양안전대전 개회식시 회원국 초청 진행	아시아국가 해양안보 확립을 위한 기관장 회의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일정, 장소, 프로그램(안) 확정, 기본계획 수립, TF 구성
2분기	❖ TF 운영 등 세부계획 수립, 전문가회의 개최
3분기	❖ 전문가회의 결과보고, 피드백 및 기관장 회의 준비, 기관장회의개최
4분기	❖ 기관장회의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중점 추진	17. ODA 활성화를 통한 「PAX-KCG*」 확대	국제 협력
	* PAX는 라틴어로 평화를 의미하며 KCG에 의한 해양안보 확보를 의미	
	(연계 과제) 비전 2033	
	[성과목표] ODA 사업 확대 ('23년) 1건 → ('24년) 2건(경찰청 등 기관협업 사업 확보)	

□ 추진 배경

- **(목적이 아닌 수단)** 국제협력개발(ODA) 사업은 개도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수원국 주재 우리국민 보호 등 수단으로 활용
 - ODA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을 다한다는 목적으로의 가치를 벗어나, 수원국과의 협력 경로를 개척하는 수단이라는 개념 확립
 - * UN은 국민총소득 대비 ODA예산 0.7%로 권고하며, 우리나라는 0.16%('21년)에 불과
- **(관련산업 활성화)** ODA와 연계된 해외시장을 개척*해 우리나라 구난 등 관련 산업을 육성, 이를 통해 신속한 수난구호 동원체계 구축
 - * 현지 조달이 어려우므로 주로 국내업체와 구매 계약 후 수원국으로 배송하는 체계

□ 주요 내용

- **(부처협업)** 프로젝트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 연관성이 높은 부처와 함께 부처 협업사업을 우선 추진, 사업 경험 등 전수·체득
 - 예) 경찰청은 베트남公安부와 치안역량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고 있으므로 우리청 함정양여사업과 결합하여 협업 추진 용이
- **(KOICA 사업발굴)** KOICA 예산으로 수행하는 부처 위탁사업에 신청(상반기 중)하기 위해('24년 지원→'26년 수행) ODA 사업 아이템 발굴
- **(초청연수 확대)** 기존 KOICA예산과 자체예산으로 나뉘어 있던 초청연수 예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연수 대상국 및 초청인원 확대
 - * ('23년)주요 협력국 9명(0.4억)+ 인도네시아 24명(1.3억)+베트남 10명(0.1억) → 통합운영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유관기관(경찰청, 해양수산부 등)과의 ODA 협업 소요 확인
2분기	❖ KOICA 예산지원 프로젝트 사업발굴 및 신청
3분기	❖ 부처협업사업 수행, 해양치안기관 실무자 초청연수 개최
4분기	❖ KOICA 예산지원 프로젝트 사업선정을 위한 현지 조사

정책

18. 인태전략에 부합하는 대륙별 전략적 협력체계 마련
(연계 과제) 비전 2033

국제
협력

[성과목표] 신규협력체계구축 ('23년) 1건 → ('24년) 2건

□ 추진 배경

- **(전략적 해양안보 강화)** 인태 전략에 맞춰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 전략적 해양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양경찰 국제 역할 선도
- **(대륙별 협력체계 마련)** 동남아(필리핀), 유럽(프랑스·영국), 아프리카(케냐), 태평양도서국(피지) 등 대륙별 신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주요 내용

- **(신규 협력체계 구축)** 대륙별 주요 국가와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구 분	국 가	주요 내용
동 남 아	필리핀	마약 등 해상범죄 공조, 장비 지원, MDA 정보교환 등
아메리카	미국	해양안보 안전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 채택
유 럽	프랑스 영국	(프랑스)협력의향서('18년) 바탕, 해양안보 협력 강화 (영 국)신규 협력 체계 구축, 해양안보, MDA 정보 공유추진
아프리카	케냐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장비지원, 초청연수 등 개발 협력 논의
태 도 국	피지	피지 등 태평양도서국 해양 협력 추진

- **(주요 협력국 교류)** 주변해역 인접국인 주요국가와 정례적 협력 추진
 - * (중국·일본) 조업 질서 확립 및 수색구조 공조 강화 등 우리국적 선박 보호
 - * (싱가포르·인니·인도·베트남) 합동훈련, 인적교류 활성화 등 교류협력 지속 추진
- **(다자회의 주도적 참여)** NPCGF, CGGS 등 주도적 참여로 연대 공고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미국 방문 및 LOI 체결, 필리핀 신규 MOU, 싱가포르 정례회의
2분기	❖ 인도 정례회의, NPCGF전문가, 중국 정례회의, 인니 정례회의
3분기	❖ 베트남 정례회의, NPCGF 기관장, 프랑스, 영국 등 업무협의
4분기	❖ CGGS전문가회의, 일본 정례회의

정책	19. 퇴역함정 양여를 통한 해양안보 체계 구축 (연계 과제) 비전 2033	국제 협력
	[성과목표] 함정양여 실행 ('23년) 고속단정 2척 등 → ('24년) 경비함정 2척	

□ 추진 배경

- **(한·미·일 정상회담)** '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 시 3국 정상은 아세안과 태도국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약속
- **(양여요청 확대)** '23년 베트남 공안부(6월), 에콰도르(10월)와의 장비 지원 등이 담긴 해양안보 협력 MOU를 비롯 국가별 지원 요청 확대
 - 베트남 공안부와는 신속하고 성공적인 1차 양여(고속단정 등 4척) 이후 필리핀 등 주변 국가에서도 해양경찰 퇴역함정 수요 증가

□ 주요 내용

- **(함정양여 체계 구축)** 그간 함정양여 대상국가가 많지(2개국) 않아, 국가 간 사전 협의, 양여 절차 등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 미정립
 - 지속적인 양여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업무절차 등 매뉴얼 제작
- **(사후 관리체계 마련)** 함정 양여 후에도 수리부품 및 기술, 승조원 교육 등 지원을 통해 한국 해양경찰청 중심의 해양안보 협력 구축
 - 해군은 「후속 군수지원시스템」 운영, 시스템 공유 등 업무협조 검토
- **(적극양여로 전환)** 함정양여 희망국을 직접 물색하고 국가별 수요에 맞는 함정(대·중·소형 등)을 확인하여 적극적인 함정양여 체계 구축
 - * 기존에는 인수 희망국가가 우리 해양경찰에 접촉하여 의사를 타진하는 구조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3개년 퇴역함정 현황 관리, 함정양여 업무 프로세스 정립
2분기	❖ 함정양여 희망국 확인, 베트남 공안부 함정양여
3분기	❖ 사후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해군·방사청 업무 협의
4분기	❖ 고속단정 등 소규모 양여 희망국에 대한 우선 양여 지원
매월	❖ 인수 희망국가의 업무협약 추진(실무자 기관방문, 기관장급 체결식 추진 등)

정책	20. AI 행정혁신체계 기반 조성 (연계 과제) 비전2033	기획재정, 빅데이터
	[성과목표] 행정업무 보조를 위한 지능형 AI서비스 도입	

□ 추진목표 및 전략

- (목표) 누구나 AI를 쓰는 미래 시대에 대비, 해양경찰 주 분야에서 AI 내재화를 통해 혁신적 행정기반 조성

□ AI 활용 전면화 및 교육·학습데이터 구축으로 기반 강화

- (①AI서비스) 함정·파출소 등에서 사람이 수행하던 행정업무 보조 및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지능형 서비스 도입(①ChatGPT, ②AI개인비서 등)

< 행정분야 지능형 서비스 (예시) >

분야	주요 서비스 내용	활용 데이터
문서-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 실적보고, 단순취합 등 단순·반복적 보고서 초안 작성 및 요약업무 지원 · (상황대응) 해양사고정보 검색 등 대한 문의 상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보고서 · 상황보고서 · 상황별 메뉴얼
현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처리 지원) 과거 해양사고기록에 따른 대응방법, 관련규정 등 추천 · (민원처리 지원) 관할구역 민원 및 신고대응, 위험 지역·지형지물 등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료 · 관련법령 · 각종 지침서 등

- (②AI인재) AI 인재양성을 위하여 해양경찰에 특화된 수준별* AI교육과정 개설 추진 및 전문 교육기관 등 협업(MOU) 확대(~'26년)

* 기본(챗GPT 활용) → 활용(프롬프트 작성법) → 심화(영상제작 등 전문업무 활용)

- (③AI학습용데이터) 해양안전, 해양교통 분야 비정형 데이터(해안가영상·위험지형지물 이미지 등) 구축·개방(~'26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AI활용 전문기관 업무협약(3월)
2분기	❖ AI 명사특강(5월), AI 인재양성 희망자 선발(6월)
3분기	❖ AI활용 기초·전문교육 실시(7월)
4분기	❖ AI 학습데이터 및 지능형 시범서비스 (12월)

경비국

정책	1. 고질적인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연계과제) ① 국회지적사항(국감), ② '23년 정책 고도화	경비 작전
	[성과목표] 불법조업률(나포건수/정밀검색건수) ('23년) 9.4% → ('24년) 9.0%	

[예산] '24년도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장비 390백 만원

□ 추진 배경

- 엔데믹 이후 서해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일평균 출현*이 지속 증가
- 최근 북대·와이어·철망 등 등선방해물을 설치하고, 접경해역의 지리적 특성을 악용한 '꾼' 재출현, 허가수역에서 집단 불법조업 여전

□ 주요 내용

- (선제적 대응) 위성 분석으로 외국어선 주요 진입로 및 조업지에 단속세력 선제적 배치, 기동전단 운영을 통한 대대적 '일제단속*' 실시

* 꽃게 성어기 도래 前 대규모 기동전단을 편성하여 특별단속 등 전개

- (공조 강화) 해군·해수부 등 불법조업정보 공유, 합동단속 추진 및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당국에 자정노력 지속 촉구

- (단속 전담함정 도입) 불법외국어선에 직접계류가 가능하고, 기상 불량 시에도 단속이 가능한 '불법외국어선 단속 전담함정*' 도입

* '24년 개념·기본설계 후 '28~'30년까지 매년 2척씩 배치 목표



전담 함정 도입 효과	① 직접계류가 가능하여 작전시간 단축으로 NLL 以北,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 前 단속 가능
	② 기상의 영향을 덜 받아 기존 단정이용 단속 대비 작전가능 일수 증가(파고 3m까지 임무 가능)
	③ 고속주행이 가능해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밀입국 등 민생침해 범죄 단속에 활용 가능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불법외국어선 단속 대책(1월)
2분기	❖ 꽃게 성어기 대비 특별단속(2~3월) 한·중 어업지도단속회의(4~6월)
3분기	❖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8~9월), 해경·해수부 합동순찰(7~9월)
4분기	❖ 성어기 특별단속(10~11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회의(11월)

중점 추진	2. 항공인력 확보 체계 다변화(Two-Track) 추진 (연계 과제) ① 23년 국감 지적사항, ② VIP 메시지 관리과제	항공
	[성과목표] 채용 및 내부인력 양성을 통해 헬기 조종사 충원율 65% 이상 목표	

□ 추진 배경

- 회전익 조종사 부족 및 지원·채용률 저조로 적정 수준 인력 확보 필요
 - * '23년 충원율 63% (항공경위 채용 현황 : 모집 5, 지원 5, 채용 0)
- 인력확보 관련 연구용역 구체화를 위한 실현계획 수립·추진
 - * 채용제도 개선(비행(승무)시간 축소, 다발 자격 폐지), 내부인력 양성

□ 주요 내용

- (정책방향 수립) 기존 외부인력 채용과 내부인력 양성을 병행하여 조종사 인력을 확보하는 다변화(Two-Track) 추진
 - * Two-Track : ❶경력있는 외부 전문인력, ❷내부인력 양성(외부위탁 및 자체 교육)
- (외부인력 확보) 분야별 고정력 전문 외부 인력 선발
 - 회전익 조종사 채용제도 개선에 따른 보완사항 검토 및 시행
 - * 다발 한정 폐지, 기장시간 포함, 해상비행 경력 축적 후 기장 승급 등
 - 인력운영 최적화를 위한 회전익 전문경력관 기종별 선발 및 배치
 - * '23년 전문경력관(4명) 기종 : 흰수리 2, S-92·팬더 각 1
 - 정비사 장기근무를 통한 정비기술 유지 가능토록 전문경력관 확보 추진
- (자체 양성) 안정적인 항공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적정 인력 확보
 - 위탁 가능 기관(군·민간)과 업무협약 추진 및 관련 예산 확보
 - 시뮬레이터 확보 계획과 연계한 자체 인력양성 방안 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전문경력관 기종별 배정 및 정비대 전문직위(가·나군) 정원 요청(2~3월)
2분기	❖ 내부인력 외부기관 위탁 양성 방안 검토(5월)
3분기	❖ 내부인력 외부기관 위탁 양성 소요 인력 및 예산 반영 추진(7월)
4분기	❖ 내부인력 외부기관 위탁 양성 추진(11월)
매월	❖ 정원 반영을 위한 수시 대응

중점 추진	3. 해상임무능력 강화를 위한 항공기 성능개선 추진 (연계 과제) ① 비전 2033 실행과제(5개년 중기과제)	항공
	[성과목표] 예산확보 ('23년) 10.1억 → ('24년) 92.7억 → ('25년) 43.2억	

[예산] '24년 92.7억(AW-139 단종 MFD교체 1.8억, AW-139 지상충돌경고장치 개조 0.6억, 위성통신망구축 57.3억, 레이더성능개선 17.1억, 열상장비구매 13.5억, CN-235 레이더 예비품 2.4억)

□ 추진 배경

- AW-139 비행정보표시장치(MFD) 생산중단에 따른 신형모델 장착 및 위험지형 회피를 위한 지상충돌경고장치 추가 설치 필요
- 해상임무능력 강화를 위한 CN-235 감시장비체계 성능개선 추진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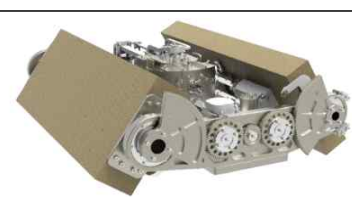
- (성능개선) AW-139 신규장비 설치를 통한 성능개선 사업 추진
 - * 신형 비행정보표시장치(MFD) 교체 및 자동비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구조능력 강화
 - ** 주변 위험지형 및 장애물 사전인지(안전사고예방)를 위한 지상충돌경고장치 설치
- (감시체계) 해상경비세력 간 실시간 항공정보 공유를 위한 감시체계 개선
 - * CN-235(1대) 위성통신망 구축 시범사업 및 레이더(4대) 주처리장치 성능개선
 - ** 임무장비 가동률 향상을 위한 CN-235 열상장비(1대) 및 레이더(1대) 예비품 구매



비행정보표시장치 개선



지상충돌경고장치 전시화면



Ku-Ka 이중밴드 위성안테나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AW-139 성능개선 계획 수립 및 계약 의뢰(1월) ❖ 챌린저/CN-235 레이더 예비품 구매계획 수립 및 계약 의뢰(2월) ❖ 항공기 위성안테나 설치 및 레이더 성능개선관련 방사청 감항인증 신청 (2월)
2분기	❖ CN-235 열상장비 장착 및 시험비행(6월)
4분기	❖ CN-235 성능개선 레이더 장착 및 체계통합(11월)

중점 추진	4. 정비역량 강화를 통한 항공기 가동률 향상	항공
	(연계 과제) 23년 국감 지적사항 [성과목표] 항공기 가동률 ('23년) 66% → ('24년) 67%	

□ 추진 배경

- 러-우 전쟁으로 항공기 원자재 공급 차질 등 부품 수급 장기간 소요
- 항공기 노후로 인한 부품단종 및 잦은 결함 발생으로 불가동 증가
- 다기종 운용 및 중정비 수행에 따른 인적에러 방지 시스템 도입 필요

□ 주요 내용

- **(예비품 확보)** 항공기 가동률 향상을 위한 노후기종 및 장기 공급 지연부품에 대한 기종별 필수부품목록 작성 및 예산 사전확보
 - * 「장비나라」 활용 필수부품목록 사이트 개설, 5년간 소요 수리부속(시간교환 부품, 공급지연부품 등) 및 다빈도 결함 부품에 대한 소요 파악
- **(자체정비 강화)** 일부 정비업체 자격 및 정비시설 미보유 등 열악한 정비체제로 항공기 불가동 최소화를 위한 자체정비능력 강화
 - * 기종별 제작사교육(전수교육 포함) 및 특수공구 확보를 통한 능력확보 추진
 - ** 고정익/회전익 정비대 정비능력 확보(안)

기 종	챌린저	CN-235	C-212	카모프	팬더	AW-139	S-92	흰수리
정비능력(%)	30	50	40	30	100	90	90	40
확보(안)(%)	-	70(20↑)	-	-	-	-	-	80(40↑)

- **(정비품질 강화)** 사전예방적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 통합관리와 교육훈련으로 효율적인 정비관리 및 인적에러 최소화
 - * 일선항공대 [정비팀장·검사관] 대상 「항공품질경영시스템 실무과정」 교육 개설
 - ** 통합장비관리시스템(장비나라)와 RFID기반 자재관리시스템 융합관리 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24년도 항공품질경영시스템 인증심사 확대계획 수립(3월)
2분기	❖ 중요구성품 필수목록 작성(4월), 「항공정비·품질관리시스템」어플 제작계획(5월)
3분기	❖ 항공품질경영시스템 실무자 과정 교육 추진(7월)
4분기	❖ 항공품질경영시스템 외부심사+일선항공 시범적용(10월)

중점 추진	5. 광역VTS 구축 및 관제 사각지역 해소 (연계과제) ① VIP강조사항, ② 국외파적사항(국립), ③ 국정교제, ④ 비전2033	해상 교통관제
	[성과목표] 광역VTS 운영 ('23년) 2개소 → ('24년) 3개소	

[예산] 동해·포항권 광역VTS 구축(105억 원), 관제시설 확충(4억 원)

[법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등 개정

□ 추진 배경

- 선박의 출항에서 입항까지 연속적 관제를 위한 국정과제 광역VTS 확대 구축 및 관제 사각지역 해소로 더욱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

□ 주요 내용

- (제주권 운영) 시범운영, 운영인력 배치 및 규정 고시 등을 통해 '24. 9월 개국 추진

* 선박교통관제 관련 행정규칙 개정



- (동해·포항권 구축) 속초 ~ 포항해역에 관제시설 신축 추진

* 동해센터 '24.12월, 포항센터 '25.6월, 레이더 등 관제운영시스템 '25.11월 설치

- (사각지역 해소) 부두가 신설되는 새만금 신항과 관제사각 지역인 기장·거제해역에 관제시설 설치 추진

* 새만금기장 설계('23~'24) → 공사('25~'26), 거제 설계('24~'25) → 공사('26~'27)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3분기	❖ 제주 광역VTS 개국(9월)
4분기	❖ 동해 광역VTS 건축공사 준공(12월) ❖ 새만금·기장해역 VTS시스템 설치 설계 준공(12월)

중점 추진	6. 첨단기술을 활용한 VTS시스템 고도화 (연계과제) ① VIP강조사항 ② 국외파견사업(국감), ③ 국장교제, ④ 버전2033	해상 교통관제
	[성과목표] 관제정보 표준규격 적용 및 관제지원기술 도입	

[예산] 노후 레이더·운영시스템 개량 설계·공사비(3,150백만원)

[법령]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 추진 배경

- 전국 VTS 대상 관제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호환성 강화* 및 관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시스템 등 현장적용 추진

□ 주요 내용

- (표준적용) 노후장비·운영시스템 교체, 확충사업 내 레이더, VHF, AIS 장비 등의 호환성 강화를 위한 표준규격 적용
 - * 장기적으로 전국VTS 통합연계망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사업) 추진
- (법제화 추진) 해경청의 연구개발 성과로 제정된 표준규격의 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 개정
 - * 「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내 표준규격 적용 조항 신설 등
- (관제지원기술 적용) 전국 VTS 센터의 관제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위험선박 자동식별 등 인공지능 기술* 현장 적용
 - * '24년도 전면개량 예정인 여수항VTS 운영시스템 등에 도입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VTS장비 설계·설치시 표준규격 적용(3월) ❖ VTS 운영시스템 개량 실시설계용역·공사 발주 및 관제지원기술 적용(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6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TS 운영시스템 개량 실시설계용역 준공(12월)

정책	7. VTS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연계과제) 국정과제 41번	해상 교통관제
	[성과목표] 관제구역 설정 절차, 인력 관리운영제도 마련 및 교육과정 개설	

[법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및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 추진 배경

- 現 정부 2기, 국정과제 ^{41번}에 반영된 광역 VTS 운영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관제체계 운영효율화 긴급
- * 광역VTS 구축이후 기존의 조직·인력운영 틀을 벗어난 새로운 혁신방안 마련

□ 주요 내용

- ① 사고다발 해역 집중관제를 위해 『합리적인 관제구역 설정절차(안)』 마련
 └ 부안, 예부선-낙시어선 충돌·사망(10.22)
- 광역 VTS 운영개시 직후 관제구역 인근에서 사망사고(4명) 발생을 계기로 전문가 검증 등 객관적인 관제구역 설정절차(안) 마련 추진
- * (절차 안) ①설계용역^{마련}→ ②시범운영^{보완}→ ③전문가 자문^{검증}→ ④규정 개정^{확정} 順

< 관제구역 설정 절차(안) >

- ① (설계용역^{지방청}) 해당 해역의 선박 교통량·이동경로, 해양사고 등 분석 후 레이더 탐지범위를 을 고려한 관제구역(안) 마련
 * 설계용역 없이 관제구역 변경시, VTS 센터에서 자체 교통량 등 분석 후 관제구역(안) 마련
- ② (시범운영^{VTS센터}) 관할 VTS 센터 자체 시범운영을 통해 관제구역(안) 보완
- ③ (전문가 자문^{지방청}) 해당 해역의 선장, 도선사, 항만종사자, 해양계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관제구역(안) 검증
 * 본청은 지방청 검증결과를 토대로 현안점검회의의 안건으로 상정, 최종안 마련
- ④ (규정 개정^{본청}) 우리청 고시 개정을 통해 관제구역 확정

- ② 관제 패러다임 변화 등 능동적인 업무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광역 VTS를 통한 촘촘한 관제 등 관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낙시어선 등 관제주의선박 사고예방을 위해 교육훈련 강화 추진

* VTS교육훈련센터 구축 및 관제학과 신설로 관제역량 집중교육, 민간교육 확대 등

구 분	주요 내용
자체교육 강 화	“VTS 학과” 신설·운영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위탁 운영했던 관제사 교육* 과정을 자체교육으로 전환(4개 과정 중 1개 운영 → 3개) * (확대) 관제사 기본교육, 선임관제사, 현장직무교육 강사교육, (위탁) 보수교육
공통과정 확 대	VTS - 현장세력간 협력 강화를 위해 신임(순경, 간부후보 등) 대상 VTS 교육시수 확대(現 3시간 → 10시간 이상)
민간대상 교 육	해상교통관제 유관기관(수협 어선안전조업국, 한국도선사협회)과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민간 대상 교육과정 운영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분기	❖ 관제구역 설정 절차 마련(6월)
4분기	❖ 신임 VTS 교육확대 및 외부 교육과정 개설(11월)

중점 추진	8. 해양정보융합플랫폼 기반 마련 (연계과제) ① VIP강조사항, ② 국정과제 41번	차세대 경비기획
	[성과목표] MDA 기반 조성 ('23년) 조직·인력 미반영 → ('24년) 조직·인력 신설	

[예산] MDA플랫폼(AI해양경비지원시스템) 3차년 구축 15.5억 [법령] 해양경비법

□ 추진 배경

- 국정과제·인태전략 등 국가 주요현안 과제에 포함되는 MDA 업무를 전담하여 이행할 수 있는 법률·조직·인력 등 기반 부재
- 해양정보를 기반으로 해양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중

□ 주요 내용

- (법률) MDA 이행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된 해양경비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함에 따라 해양경비법 개정* 재추진
* 해양경비정보 정의 신설, 해양경비정보 수집 권한 강화 등 4개 조문
- (정책 연구용역) MDA 도입 시 업무 프로세스·인력·조직구조 변화 등 우리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수립에 관한 정책연구 수행
- (조직·인력) 빈틈없는 MDA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확보
 - 위성정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SAR 위성영상 분석관(1명) 채용('24년 상반기) 및 다종정보 분석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분석 전문가 충원 검토
- (MDA 플랫폼) 3차년도 사업으로 무인헬기 수집정보를 연계, 그간 수집된 해양정보를 융합분석하는 AI모델 개발*(3종) 등 시스템 고도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과업심의위원회(2월), 계약의뢰(3월) ❖ 정책 용역연구(3월)
2분기	❖ 사업자 선정(5월), 시스템 설계(5월~6월) ❖ 시스템 구축 감리 사업 공고(6월)
3분기	❖ 시스템 구축 감리 사업자 선정(8월)
4분기	❖ 3차년도 시스템 구축 완료(12월) ❖ '25년 총원계획 대응(11~12월)

중점 추진	9. 미래형 경비체계 전환을 위한 무인체계 및 전문가 확보 (연계과제) 국정과제 41번	차세대 경비기획
	[성과목표] 국정과제 이행률 ('22년) 0% → ('23년) 5% → ('24년) 10%	

□ 추진 배경

- **(무인체계)**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수색구조 등 해양경찰 임무의 효율성 향상 및 경비체계 고도화를 위해 무인체계 지속 도입 필요

* '21년 7대 도입 및 시범운용 후 '23년 3대 계약, '24년 16대 도입 사업 추진 예정

** '28년까지 대형함정 32개소, 경찰서 20개소에 유선드론 및 무인헬기 배치하여 광역·내해·연안구역 연계 감시 체계 구축

〈 유무인 복합체계 일상화 단계별 이행 계획(안) 〉

단계별 전략	도입규모		주요 내용
1단계 ('22~24년/현재) (운용체계 정립)	대형함 10척	77명	• 소형드론 활용, 임무특성에 적합한 운용체계 정립 및 무인기 운용 일상화
2단계 ('25~26년/단기) (전문인력 양성)	대형함 32척	420명	• 전문인력 확보, 쏜대형함에 무인기 배치하여 광역구역 감시체계 구축
3단계 ('27년~/중장기) (고성능 기체 도입)	서해전략함 등 배치		• 고성능 무인기 도입, 유무인기 합동 임무 능력 고도화 및 유무인 복합체계 일상화(함·선·기)

- **(전문인력)** 국정과제 이행 및 해상용 드론 운용 전문성 확보를 위해

① 조종인력(1급) 420명, ② 교관요원(지도조종자) 100명 집중 양성

* 함정(무인헬기 조종), 교육원(교관), 지방청 드론전담(정비·교육·지도점검)

□ 주요 내용

- **(연구용역)** '24년 상반기 「해양특화 드론 도입연구(가칭)」를 통해 우리청 임무 특성에 최적화된 안정성 높은 고성능 기체 도입 추진

* (연구중점) 해양특화기종·성능표준·임무장비·운용체계·적정 배치안 등

- **(전문성 강화)** 무인기 사고방지 등 무인체계 안정화를 위해 드론 전문가 5명 채용(상반기)
 - **(신규사업)** 국정과제 도입장비 및 각 기능별 수요장비에 대한 용도별 기체형태·특성 등 소요규격을 도출하여 중기예산 신청시 반영
- * 분야별 전문가 합동 해상용 드론 실제비행 안정성 및 운용체계 점검(12월) 결과 반영

〈 분야별 전문가 합동 점검 내용 〉

구 분	점검 내용
기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정에서 악기상(풍랑주의보 등)에서 비행·착륙이 용이한 기체 파악 ▪ 해양 특성에 적합하고 고성능·안정성 있는 운용이 간편한 기체형태 ▪ 전문 정비능력을 갖추고 감항성 및 성능이 우수한 기체확인
임무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시범위 한계 극복을 위한 AI 기반 자동식별·인식기술 소요 ▪ 운용인력이 부족한 현장부서를 고려 비교적 운용이 간편한 조정방법 파악
통신·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무인기 제어용 주파수(5070~5090MHz) 통달거리 등 활용성 ▪ 함정구조물에 의한 지자기 센서오류·통신두절 등 원인파악 ▪ 카메라 및 자료전송 등 보안성 향상방법
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무특성을 고려하여 운용 활성화를 위한「드론 운용 기준」개선사항 ▪ 운용자의 숙련도 향상 및 교육 강화 방안 ▪ 사고유형별 예방·대응방안, 및 안전비행을 위한 매뉴얼 체계 재정립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현장 의견 및 전문가 합동 점검 결과 등 반영하여 중기예산 반영(1월)
2분기	❖ 우리청 임무 특성에 맞는 해양특화 드론 도입 연구용역 수행(3~4월)
3분기	❖ 연구결과 등 반영 '24년 신규착수사업 구매규격 등 정립(7월)
4분기	❖ 24년 신규착수사업(15대) 계약 의뢰(9월)

중점 추진	10. 해양경찰 무인체계 운용역량 고도화 (연계과제) 국정과제 41번	차세대 경비기획
	[성과목표] 국정과제 이행률 ('22년) 0% → ('23년) 5% → ('24년) 10%	

□ 국정과제 지속 이행을 위한 운용 인력 확보 및 전문화

- **(운용인력)** 도입 초기('21~'22년) 시범운용 기간 이후 「무인기 활용 일상화 단계('23년) 정착을 위한 운용 함정별 무인체계 운용팀 정원 확보(2명)
* (운용실적) 22년 총 62시간 → 23년(1~10월) 228시간 / 운용률 약 3.7배 ↑
- **(교육강화)** 기체 도입시(3대) 조종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수 교육 및 기령 누적에 따른 기체관리(정비+운용) 전반에 대해 보수교육 강화
* 신규 운용요원 인수교육시 既 운용함정에 편승하여 노하우 전수 등 OJT 실시

〈 교육 강화 내역 〉

- ['21년] 3주(이론^{1주}, 실기^{육상1주+해상1주}) → ['23년] 4주(이론^{1주}, 실기^{육상1주+해상2주})
- ['21년] 특별점검^{상반기}, 보수교육^{하반기} → ['23년] 특별점검·보수교육^{상반기}, 인수교육·보수교육^{하반기}

□ 무인기 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경비활용)** 조종인력 2명 일근 지정 등 근무체계 개선과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수색구조 등 상황별 전술 개발
* (예비조종자) 기본업무(당직 근무)를 실시하되, 드론 비행 시 조종자 보조
- **(유지보수)** 해상드론 연차적 도입('23년 6대→'24년 10대→'25년 25대)에 따른 안정적 운용·정비체계 마련을 위한 「통합 유지보수체계(계약)」 추진
* 무인기 신속 수리,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사고 시 임시기체 지원 등 포괄
- **(매뉴얼)** 항공운항 가이드 북과 연계, 유·무인기 합동 단속·수색구조 임무시 표준 절차를 수록한「유·무인기 합동 임무 가이드 북」제작
* (海)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훈련교범, (空) 글로벌호크 표준 임무 지침서 등 활용

□ 드론 도입 분야 감시 인프라 확충

- **(R&D)** 선행 연구로 도출된 EO·레이더를 함정·항공기·유무선 드론에 탑재 가능하도록 경량화(총 10kg 이하) 기술개발 예산 확보

* 개발자 선정을 위한 민군협력사업(Fast Track) 등 추진



- **(해양특화드론)** 기상악화에도 모든 경비함정에서 감시범위를 확대(10→40km)할 수 있는 「유선드론」 개발('22~'25) 모니터링 및 실증('24.11월)

* ('25년 실증) MDA 플랫폼 및 상황실과 실시간 연동 기능 구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규격서 작성 및 중기 예산 요구(1월) ❖ 무인체계팀 정원 요구 (2월) ❖ 해양특화드론 연구용역 실시 및 R&D예산 요구(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특별점검 및 보수교육 실시(5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인기 합동 임무 가이드 북 제작(7월) ❖ 신규드론 인수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9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신규 도입 해상용 드론 계약 체결(10월) ❖ 우리청 경비함정내 유선드론 실증 추진(11월)

정책	11. 위성센터 인프라 구축	차세대
	(연계 과제) ①국정감사(41번) ②MP 강조사항 ③비전2033 ④'23년 정책 고도화	경비기획
	[성과목표] 청사 신축 및 인프라 구축 ('23년) 31.7억원 → ('24년) 68.71억원	

□ 「해양경찰 위성센터」 청사 신축 <'23 ~ '25년, 90.1억>

- (설계·착공) 위성센터 특수성을 고려한 각 분야별(건축·토목·통신 등) 설계* 및 조달 절차를 통한 旣 건축물 철거 등 청사 신축공사** 착수

* 기간 '23.9.26. ~ '24.3.31. 예산 4.6억 내용 관련 법규검토 및 주요인증 반영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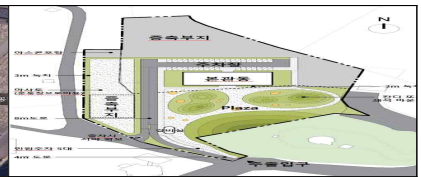
** 기간 '24. 6. ~ '25. 12월 예산 85억 내용 석면 등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신축



위성센터 조감도



신축 부지



건축물 배치(안)

□ 「해양경찰 위성활용 기술개발」 사업<'23 ~ '27년, 253억>

- (예비설계) 다중 위성정보 융합·활용을 위한 시스템 및 융합·분석 기술 등 예비설계와 국제협력*을 통한 정보융합 기술 벤치마킹

* 유럽해사안전국(EMSA), 독일우주청(DLR) 위성 활용·분석 연구 및 기술 자문

〈'24년 주요 추진사항〉

✓ ('24년 예산) 56억원

✓ (주요과제) ①다중 위성(5종 이상) 수신 및 수집체계, ②위성 통합 촬영요청 시스템, ③위성정보 융합·분석 인터페이스, ④선박탐지식별 알고리즘 등 설계

□ 천리안3호 위성통신망 기반시설 구축 추진<'24 ~ '28년, 286억>

- (추진방향) '24년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①기반시설 구축사업 실시 설계(2.8억) 착수 또는 ②'25년 정부예산(안) 확보 대응 추진

※ '2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기반시설 구축 지연되면 위성활용 못해.. 신속 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해양경찰위성활용기술개발 진도점검(2월) ❖ 해양경찰 위성센터 청사신축 설계용역 완료(3월)
2분기	❖ 해양경찰 위성센터 청사신축 계획수립 및 계약의뢰(4월) ❖ 해양경찰위성활용기술개발 진도점검(5월)
3분기	❖ 해양경찰 위성센터 청사신축 착공(7월) ❖ 해양경찰위성활용기술개발 진도점검(8월)
4분기	❖ 해양경찰위성활용기술개발 예비설계 검토회의 및 진도점검(11월) ❖ 제3회 관측위성 운영 및 활용 워크샵(12월)

구조안전국

중점 추진	1. 연안안전지킴이 사업 활성화 추진 (연계 과제) ①23년 국회 지적사항(예산) ② 23년 정책 고도화	해양안전
	[성과목표] 표준 운영지침 제정, 사업성과 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예산] '24년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7.2억원

[법령] 「연안사고예방법」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개정 추진

□ 추진 배경

- (사업 확대) 연안안전지킴이 사업 성과* 및 국회 지적** 등 고려, 보건복지부·지자체 등 협업을 통한 연안 위험구역 예방활동 강화 필요

* [연안사고(건)] '22년 39%↓, '23년 32%↓ [사망(명)] '22년 47%↓, '23년 20%↓

** '23년 예결위(안병길 의원) : 안전한 연안해역을 위해 연안안전지킴이 배치 확대 필요

□ 주요 내용

- (제도 정비) 보건복지부(산하 노인인력개발원)·지자체 등 他 기관이 연안안전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표준 운영기준·지침 마련

〈 세부 정비(안) 〉

Ⅰ (「연안사고예방법」) 타 기관에서 연안안전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Ⅱ (운영지침) 연안안전지킴이 사업 참여 시 필요한 표준 운영기준·지침* 설계

* 모집선발(채력기준 등), 교육훈련, 복제지급품 구비요건, 복무·성과관리 등

- (대외 협업) 他 기관 협업을 통한 차별화된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기반 마련으로 인력·배치구역·활동비 등 확대하여 정책 내실화 추진
- (중장기 발전방안) 사업의 대내·외 여건, 그간 성과·한계 등 종합 분석하여 제도개선, 운영 지침, 타 기관 참여 유도 등 발전방안 마련

* (주요 내용) 협업 방식, 배치장소 확대 및 적정인원, 운영관리, 교육·훈련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보건복지부·지자체 등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참여 수요조사(1월) ❖ 2024년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계획 수립(2월)
2분기	❖ 연안안전지킴이 사업 관련 법제도 정비(4월)
3분기	❖ 연안안전지킴이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9월)
4분기	❖ 2024년 연안안전지킴이 사업 성과분석(12월)

정책	2. 연안사고 예방 정책소통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 (연계 과제) ① 23년 정책 고도화	해양안전
	[성과목표] 중앙연안사고협의회 및 연안정책 세미나 개최	

□ 추진 배경

- (협업체계 고도화) 기존 해경청이 주도(지자체가 협조)하던 연안사고 예방체계를 民-官-學이 함께하는 협업체계 고도화 필요
- (단계별 안전문화 확산) 연안사고가 많은 여름철 연안활동 성수기 전부터 단계별 해양안전문화 확산 노력으로 인명피해 예방

□ 주요 내용

-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여름 성수기 前, 관계기관과 연안사고 예방 대책 공유 및 협조사항 협의 등 선제적일 협의회 개최 추진
*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중앙부처-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 (연안안전 세미나) 「연안사고예방법」제도개선, 연안사고 예방 발전 방향 모색 등을 위한 民-官-學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 (토론주제) 연안안전지킴이 확대 방안 효율적인 연안순찰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방안 등
- (해양안전문화 확산) 권역별(지방청) 중심의 해양유관기관·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시기·단계별 생활 밀착형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 활동
* 행안부·해수부·복지부·수협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 (연안안전 체험교육) 국민의 해양안전 습관 기틀 마련을 위한 어린이-부모-온가족이 함께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 체험교육 추진
* 지역별·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운영(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개최 계획 수립(3월) ❖ 해양안전문화 확산 추진계획 수립(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개최(4월) ❖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세미나(정책토론회) 개최 계획 수립(3월) ❖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세미나 개최(5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안전의 날 행사 개최(7월) ❖ 여름철, 해양안전문화 확산운동 전개(7~8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문화 확산 추진 실적 분석(11월)

정책	3. 파출소 기본임무 역량 제고 및 근무환경 개선 (연계 과제) ① 청장 지시사항, ② 23년 정책 고도화	해양안전
	[성과목표] 파출소 기본임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한 ①현장업무지침서 제작 ②노후 파출소 등 환경 개선	

[예산] '24년 20년 이상 노후 파출소 23개소 리모델링 15억

□ 추진 배경

- (기본역량 제고) 파출소 근무에 대한 기본역량 제고를 위해 무기 등 사용법 교육·훈련 강화 및 현장 처리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환경 개선) 인력 증원으로 협소해진 78개 파출소의 근무환경 개선 ('23.4~11), 직원편의 및 신속한 출동 동선 확보 등 업무효율 제고

□ 주요 내용

- (무기 등 운용능력 향상) 강력범죄 대응 등 위급상황 시 적절한 물리력 행사를 위해 38권총 및 가스발사총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38권총) 상·하반기 직장훈련 병행 실사격 실시, (가스발사총) 이론교육 내실화
- (현장업무 지침서 제작) 각종 업무 처리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현장업무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현장 근무자 업무 혼선 사전 방지
* (수록내용) 사건·사고 초동조치 방법, 시스템 운용법, 장비 관리 방법 등
- (파출장소 환경개선) 준공 20년 이상 파출소 리모델링* 추진 및 상주형출장소(45개소) 노후 집기류 교체 등 사무공간 환경 개선
* (파출소 리모델링) 23개소(중부청 5, 동해청 4, 서해청 9, 남해청 5)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파출장소 환경개선 소요예산 파악(1월) ❖ 노후 파출소 리모델링 및 상주형출장소 환경개선(2~6월)
2분기	❖ 현장업무 길라잡이 제작을 위한 T/F 구성(4~6월) ❖ 상반기 파출소 근무자 38권총 실사격 훈련(~6월)
3분기	❖ 현장업무 길라잡이 제작·배포(7월) ❖ 하반기 파출소 근무자 38권총 실사격 훈련(~9월)
4분기	❖ '25년 환경개선 파출장소 개소 파악(10~11월)

정책	4. 어선 출·입항 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연계 과제) ① 23년 국회 지적사항(국감) ② 23년 정책 고도화	해양안전
	[성과목표] V-Pass 노후 송·수신기 교체 ('23년) 교체 無 → ('24년) 135대 교체	

[예산] V-Pass 위치신호의 안정적 수신을 위한 노후 송수신기 교체 16.2억원

□ 추진 배경

- (출입항 관리 강화) 안정적인 자동 출입항 신고 체계 유지('11. 12월)를 위한 노후 장비 교체 및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어선 안전관리 강화
- (신고체계 일원화) 자동출입항신고 제도 정착 이후 다양한 경로의 출입항 신고 방법을 최적의 출입항 신고체계로 일원화 추진

□ 주요 내용

- (출어선 안전관리 제고) 출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 송·수신기 교체*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에 대한 처분 강화 추진
 - * 노후 송·수신기('12년 설치) 557대 중 135대 교체를 통한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 (특정해역 출입항 개선) 특정해역 출어 어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대면 신고를 V-Pass 등「자동 출입항 신고」로 전환 추진
- (자동문자발송 시스템 구축) 자동 출입항 신고, 모바일 출입항 변동 신고 사항 등에 대해 자동 알림서비스 실시로 공공서비스 증대
 - * 자동출입항신고, 승선원변동신고 등 비대면 신고 처리 결과 알림서비스 및 승선원 변동없이 장기간 운항하는 어선에 대해 신고 독려 알림문자 발송
- (미래형 출입항신고 체계 개발) 서로 다른 출입항신고·변동신고*의 방법을 최적의 출입항신고 체계로 개선 등을 위한 방안 마련
 - * (출입항신고) V-Pass, 전화 등, (출입항 변동신고) 파출소 방문, 모바일신고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Pass 노후 송수신기 교체 계획 수립(2월) ❖ 출입항신고 등 자동문자발송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2월)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항신고 등 자동문자발송 시스템 구축(4~5월) ❖ 미래형 출입항신고 체계 연구(4~7월) ❖ V-Pass 노후 송수신기 교체(4~11월)

정책	5. New 기동점검단 발족, 유도선 안전 UP (연계 과제) ① 23년 정책 고도화	해양안전
	[성과목표] New 기동점검단 발족을 위해 ① 최근 10년간 성과·문제점 분석 ② 설문 조사, 세미나 개최 등 의견수렴 ③ 기동점검단 재편	

□ 추진 배경

- (유도선 이용객 증가) 유도선 이용객은 코로나19 발생 전과 유사 수준*으로 증가, 관련 사고**도 계속 발생 중으로 지속적 관리 필요

* 이용객수 : '20) 806만 → '21) 858만 → '22) 1,134만 → '23.11월) 1,005만명

** 사고(사망) : '20) 18건(0) → '21) 15건(0) → '22) 29건(0) → '23.11월) 22건(1명)

- (기동점검단 10년 경과) 기동점검단* 발족 후 10년 경과, 매너리즘 극복과 기동점검의 효과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동점검단 재편 필요

* 지방청 주관, 내외부 전문가 점검단 인력풀 207명('23년) 구성, 연 4~5회 점검

□ 주요 내용

- (New 기동점검단 발족) 지난 10년간 기동점검단 성과·문제점 분석 후 이를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기동점검단 발족 추진

* 현장 설문 조사, 해양 기동점검단 발전 세미나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 현재 지적되고 있는 기동점검단 문제점 〉

- ✓ 법상 안전점검 주체는 서장, 기동점검 주체는 지방청으로 법체계 부조화
- ✓ 점검단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지방청별 상이)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부족
- ✓ 다중이용선박·시설별 기동점검결과 DATA의 효율적 관리방안 부재 등

- (시기별 유도선 기동점검) 연말연시(해넘이·해맞이 행사), 휴가철, 명절 연휴(구정·추석) 및 불시 기동점검을 통한 유도선 안전관리 활동 지속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24년 기동점검단 운영 계획 수립(1월), 10년간의 기동점검단 운영 성과 분석(2월)
2분기	❖ 해양기동점검단 발전 세미나 개최 및 최종 보고회 후 발대식 개최(4월)
3분기	❖ 여름 휴가철(7월), 가을 행락철 및 추석 연휴 (9월) 대비 기동점검 추진
4분기	❖ NEW 기동점검단(가칭) 운영 성과 분석 및 해넘이·해맞이 대비 기동점검(12월)
수시	❖ 해양 유도선 및 선착장 등에 대한 불시 기동점검 지속

중점 추진	6. 해양재난구조대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하위법령 등) (연계 과제) ① 국장고제, ② VIP 메시지 관리, ③ 연평도는 5개년 중기과제	수색구조
	[성과목표] 해양재난구조대법 하위법령 마련('24년 상반기)	

[법령]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마련

□ 추진 배경

- 민간구조세력의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위해 입법 추진한「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에 따라 후속조치 추진

* 농해수위 상정('23.2.21.) → 농해수위 의결('11.8.) → 법사위 의결('12.7.) → 본회의 통과('12.8.)

- 법률 제명의 변경(민간해양구조대법 ⇒ 해양재난구조대법) 변경됨에 따라 현장 혼선 최소화와 제도 시행의 조기 안착을 위해 대내외 홍보 필요

□ 주요 내용

- (하위법령 마련) 법률 공포 후 시행일(1년 뒤)에 맞추어 제때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 마련* 등 제정 추진

* 유사 입법례,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및 법제처 사전 검토를 통해 조문 완성도 제고

〈하위법령 제정 대상〉

- ✓ (시행령, 2개조문) ①청장의 조직설치 권한위임, ②대원 치료절차 및 방법
- ✓ (시행규칙, 14개조문) ①조직 설치 필요사항, ②기념행사, ③위촉대상으로 인정되는 학력경력, ④기타 해촉사유, ⑤위해촉 절차방법, ⑥조직운영 필요사항, ⑦ 기타 임무, ⑧복장착용 신분증 소지 예외상황, ⑨복장신분증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필요사항, ⑩소집명령 없이 자발적 임무수행시 보고 절차방법, ⑪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의 구조합회 위탁, ⑫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⑬수당 및 실비지급 방법·절차, ⑭활동실적 평가관리, 포상방법

- (대내외 홍보) 신법 제정에 따라 민간구조세력, 일반 국민, 지자체 및 관계기관 대상으로 법률 해설서 간행 및 홍보(보도자료 등) 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법률 해설서 간행 및 대내외 홍보 추진(3월)
매월	❖ 하위법령 제정계획 수립 ⇒ 사전 검토·자문 ⇒ 장관보고, 법령안 입안 ⇒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조회 ⇒ 각종 영향평가 ⇒ 해양경찰위원회 심의 ⇒ 입법예고 ⇒ 규제 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 관보게재·공포

정책	7.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및 관리체계 마련 (연계 과제) ① 대통령 지시사항	수색구조
	[성과목표] 재난안전법령 상 긴급구조 관련 조항 개정('24년 하반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

□ 추진 배경

- 「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 지원체계의 해·육상 간 불균형* 해소 및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량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필요

* 대통령 지시사항('23.2.20. '재난안전 법제 정비를 위한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관련, 현행 소방청장만 긴급구조지원기관을 평가관리하는 문제점을 발굴, 개선과제로 추진 중

□ 주요 내용

- (지원기관 지정) 해양 긴급구조지원에 필요한 인력·장비·기술 등 보유한 기관(지방해수청·어업관리단·해양환경공단)을 지원기관으로 지정

* [소속기관 협조] 긴급구조지원체계 정비 시 관할 지정기관 간 대응 협력체계 강화

- (역량관리 체계 마련) 해양재난 분야 긴급구조교육 담당기관* 지정 (해양경찰교육원) 및 지원기관의 역량관리** 체계 마련 추진

* [교육원 협조]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시 관련 교육프로그램 편성·운영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 긴급구조활동 평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 등

〈개정안 주요 내용〉

- ✓ 「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62조」
(긴급구조활동 평가) 구조본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
- ✓ 「법 제5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긴급구조교육 담당기관 지정) 해경청장에 해양재난 긴급구조교육 담당기관 지정 권한 부여
- ✓ 「시행령 제61조의 2」
(긴급대응협력관) 해경청장에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 관련 고시 권한 부여
- ✓ 「시행령 제66조의 3, 4, 5」
(지원기관 능력평가) 해경청장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 관련 고시 권한 부여
- ✓ 「시행규칙 별표1」
(긴급구조지원 기관) 【추가지정】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환경공단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상반기	❖ 재난안전법령 개정을 위한 법제 연구용역 추진(~6월)
하반기	❖ 개정안 마련 및 개정 추진

정책	8. 수상구조사 제도 개편안 마련 및 자격 활성화 (연계 과제) ① 연관되는 5개년 중기과제, ② 23년 업무 연계	수색구조
	[성과목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개편안 마련, 교육기관 책임관 교육과정 운영	

[법령]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추진 배경

-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는 자격의 공정한 평가와 체계적인 교육·양성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자격 일원화 등 자격제도 개편* 필요
* '23년 주요 업무과제(자격 정책·제도적 기반 강화) 연구용역(23. 7~12월) 결과 활용연계
- 수상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 및 취득 수요 증가에 맞춰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제도 대국민 홍보 활성화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 (제도개선) 자격 세분화*, 시험관리·운영 민간위탁, 기본능력검정, 필기시험 도입 등 자격제도 개편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민간단체, 자격취득자 등 이해관계자 간 국가자격 일원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공감 확산을 위해「수상구조사 제도발전 정책포럼」개최
* 세분화(안): 생존수영 등 신규 수요를 반영한 수상구조사 교육강사, 1급, 2급 등
- (교육기관 역량강화) 체계화된 수상구조사 교육을 제공하고 사전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전국 교육기관 책임관 전문화 교육과정 운영
- (홍보 활성화) 수상구조사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수상구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기·디자인 등 공모전* 개최 추진
* 분야: ①합격 수기(취득동기, 과정 등), ②인명구조 사례, ③수상구조사 심벌·마크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교육기관 책임관 전문화 교육과정 운영
2분기	❖ 제도 개편 관련 현장 의견 수렴
3분기	❖ 수상구조사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
4분기	❖ 수상구조사 제도 개편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정책	9. 국제 해양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SAR 협력 확대 (연계 과제) ① 23년 업무 연계	수색구조
	[성과목표] 인·태 SAR 기관과 MOU체결(2개국 이상)	

□ 추진 배경

- 우리선박의 통항이 많은 해역에서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국제수색구조 협력 확대 및 해외 민간수색구조 단체 등과 교류 활성화 필요
 - * '23.9월 인도네시아 해역 표류사고(골든메이플호), '22.10월 대만 해역 침몰사고(교토1호)
- '24년 감사원 사전감사 및 '25년 ICAO 안전평가(수색구조분야) 대응

□ 주요 내용

- (MOU체결) 인태전략 주요국(인도, 말련, 인니 등)과 수색구조 협약을 통한 국제 해양사고 협력망 구축 및 대응역량 제고(지방청별 인접국간 MOU확대)
 - * MOU 체결현황 : [본청]-4개국(日, 中, 호주, 뉴질랜드), [지방청] 동해-日8관구, 러 연해주 / 남해-日7관구 / 서해-中산동성 / 중부-中요녕성, 제주-中·日 체결 추진
 - ** [협력사례] '23.11 한일중간수역 어선(복길호) 전복사고 日 7관구 합동수색, '22.10 타이완 해협 우리 유조선(켈시2호) 침몰사고 中 동해구조국 15명 구조
- (해외민간 협력) 국제해양구조연맹(IMRF*) 및 미국·일본 민간 수색구조단체와 교류확대를 통해 기술공유 및 상호 발전방안 모색
 - * 영국소재 민간해양구조단체, IMO 기술자문, IAMSAR 등 제·개정, 연구 개발
- (MMEX 준비) 러시아 이슈 장기화에 따른 NPCGF 합동훈련(MMEX) 개최국 변경 가능('26년→'25년)으로 관련 예산편성 대응 및 사전준비
- (국제기준 이해도 제고) IMO 'IAMSAR* 매뉴얼 제1·2권」번역본('04 번역) 발간 및 수색관련 부서 교육(또는 교육자료 배포) 추진
 - * IAMSAR 매뉴얼 1권-조직·관리, 2권-임무조정은 구조당국의 필수숙지 사항
- (ICAO 평가준비) ICAO 평가기준 및 준비사항 파악, 항공구조조정본부 및 항공안전감독관 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 등 대응계획 수립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상반기	❖ ICAO 평가대비(ASAC 파견, 규정 제정), 인니 MOU 체결, MMEX 예산요구
하반기	❖ 감사원 사전감사(7월), IMRF 회의참가(6~8월), 인도 SAREX-24참가 및 MOU체결(7~10월), IAMSAR매뉴얼 제1·2권 한글판 발간(12월)

중점 추진	10. 수상레저기구 KC 안전인증 위한 입법 추진 (연계 과제) ①국외자적사항(국감), ②'23년 정책 고도화, ③비전2033	수상레저
	[성과목표]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전부개정안 발의('24년 하반기)	

[법령] 「수상레저기구등록법」

□ 추진 배경

- (수상레저활성화) 국민소득증가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이 비약적으로 증가 중이며, 이용 기구도 보트류 등에서 서프보드, 카약 등으로 다변화



- (무분별한 기구 수입·제조) 보트,요트 등 일부 수상레저기구 이외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수입·제조과정에서의 안전성 평가과정의 부재로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및 잠재적 안전위해요소 有

* 국내 수상레저기구 제조업체는 무분별한 수입·제조에 관한 대책마련 희망

□ 주요 내용

- (법안 개요) 수상레저기구의 수입·제조 시 위해도에 따라 제품 시험·검사, 공장심사 등을 거쳐 KC인증마크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

〈 수상레저기구 KC안전인증 법제화 로드맵 〉

- ✓ (개요) 수상레저 R&D 1년차 사업('23년)을 통해 도출된 KC안전인증제 법률 제·개정안을 토대로 의원입법 추진(대표발의 의원실 협의, 입법공청회 개최)
- ✓ (추진 시기) '24년 하반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원구성 종료 시 추진
- ✓ (입법 형식) 전부개정* 또는 신규 법률 제정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전부개정(잠정)
- ✓ (하위법령 입법) '25년 상반기 법률안 공포를 목표로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 입안 및 법제처 심사(시행 '26년 목표)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3~4분기	❖ 관련 법률안 의원입법 발의(8월), 관련 입법 공청회(9~10월)

정책	11. 국민편의와 안전강화를 위한 수상레저법령 개정 (연계 과제) '23년 정책 고도화	수상레저
	[성과목표] 법령 개정 ('24년) 관련 법령 개정	

[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등록법」 및 동법 하위법령 등

□ 추진 배경

- (법령 고도화)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입안 시 쟁점 최소화를 위해 미반영된 제반 개정 소요 및 미비점 개정을 통해 법령의 신뢰·실효성 제고

□ 주요 내용

- (수상레저안전법) 조종면허, 수상레저사업, 안전수칙 등 조문 정비

〈주요 개정사항〉

- ✓ (조종면허) 현행 조종면허를 필요로 하는 기구의 상·하한 조정, 외국 요트활동자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종면허 면제조항 명확화 등
- ✓ (수상레저사업) 이원화된 사업자 준수사항 정비, 빌려주는 사업의 범위 확대 검토,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등록기준 정비 등
- ✓ (안전수칙) 기구별 특성을 반영한 인명안전장비 세분화, 내·해수면 야간운항 장비 이원화, 기상특보 시 세일링요트 운항금지 완화방안 검토, 일정 톤수 이하의 어선·일반선을 이용한 레저활동 시 일정 안전수칙 적용 명문화 등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안전검사에 관한 제반 조문 정비

〈주요 개정사항〉

- ✓ (운항구역) 선박안전법을 기반으로 한 현 운항구역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도 제고 및 현장 안전관리에 용이한 새로운 개념의 운항구역 개선 검토 등
- ✓ (임시항해검사제 도입) 외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입 시 수상레저기구등록법상 안전검사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임시항해검사제 도입
- ✓ (기타) 타법(수중레저법, 마리나항만법)상 이용 기구에 대한 검사·등록제도 개선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2분기	❖ 주요 개정소요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정(안) 마련(~6월)
3~4분기	❖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등록법」 개정안 발의·심사 대응(7월~)

정책	12. 민관협력 기반의 수상레저 안전정책 구현 (연계 과제) '23년 정책 고도화	수상레저
	[성과목표] 위원회(자문위, T/F) 구성, 수상레저안전협회 발전방안 수립 등	

□ 추진 배경

- (국민공감형 정책구현) 다양한 수상레저 정책 수요자의 의견수렴 채널을 제도화, 수상레저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도·수용성 제고 필요

□ 주요 내용

- (수상레저 안전정책 자문위 신설) 정책의 수립·집행·환류 과정에 관련 정책수요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참여 강화
 - * 수상레저 법령 및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안전제도 개선사항 제언, 수상레저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기타 수상레저 정책수립에 관한 권고 등
- (수상레저 규제혁신 T/F 구성·운영) 수동적 규제개선의 관행에서 탈피, 선제적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이행하기 위한 T/F 구성·운영
 - *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 외부 위원은 수상레저 안전정책 자문위원 중 선발
- (수상레저안전협회와의 파트너십 강화) 법상 주요 공익사업* 구현 및 유일한 법정 단체로서의 위상 제고에 관한 세부 방안·로드맵 수립
 - * 수상레저 안전·산업진흥·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사업
- (안전문화 정착)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민간 부문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안전 캠페인, 홍보 활동 전개

〈 안전문화 확산 추진 활동 〉

- ✓ 「민간기업 업무협약」을 통해 제품, 배송박스에 '안전 슬로건' 홍보문구 표출
- ✓ 주요 활동 항·포구, 활동자 대상 안전수칙 안내와 다양한 안전 메시지 게시
- ✓ 「선외기 자가정비」 온라인 영상 교육자료 제작('23.11.15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 안전정책 자문위원회 구성(3월) ❖ 「선외기 자가정비」 온라인 영상 교육자료 제작(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 규제혁신 T/F 구성·운영(4월~) ❖ 상반기 수상레저 안전정책 자문회의 운영(6월) ❖ 수상레저안전협회 발전 방안 및 로드맵 수립(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기업 업무협약」 체결(7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수상레저 안전정책 자문회의 운영(12월)

수사국

중점 추진	1. 전문수사경찰 양성을 위한 수사연수소 직제화 추진 (연계 과제) ①비전 2033, ②'23년 정책 고도화	수사 기획
	[성과목표] 수사연수소 직제화(계단위 비직제 → 과단위 직제)	

□ 추진 배경

- (부족한 인력·시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교수 인력·시설에는 큰변화가 없어 개선필요

* 교육현황 : '21년(19개 과정 580명) → '22년(22개 과정 700명) → '23년(30개 과정 1,200명)

< 수사연수소 연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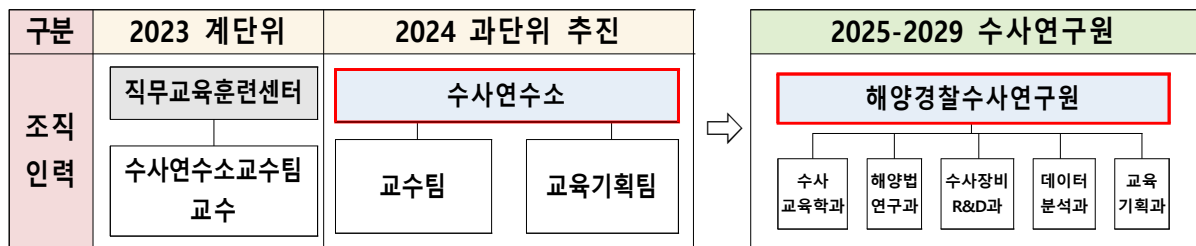
- ('14년)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비직제 10명 출범(3월) →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11월)
- ('19년) 수사권 조정 대비 여수 교육원내 비직제 계단위 재출범(전담요원 1, 겸직 5)
- ('20년) 직무교육훈련센터 소속 계단위로 개편(3월/4명) → ('23년) 6명으로 확대(+2명)

□ 수사연수소 과단위 직제화를 통한 수사역량 강화추진

- (수사연수소 직제화) 수사연수소 직제화를 통해 수사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수사관과 현장 경찰관 대상 이론·실무교육 확대

* 전문수사 이론교육, 최신수사기법 연구보급, 실습중심 특성화 교육 등 마련

해양경찰수사연구원 설치(안)



- (시설·장비 확충) 현장감식, 포렌식 현장실습, 차세대 KICS 연수 등 수사실습에 필요한 시설·장비 예산을 마련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장기과제] 별도기구 확대, 실습동 부지확보, 해양치안정책연구 기반마련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수사실습 필요시설장비 소요조사(2월), 수사연수소 신설(안) 정기직제 제출(3월)
2분기	❖ 수사연수소 시설·장비 예산 확보 추진(5월)
3·4분기	❖ 수사연수소 과단위 출범 준비(하반기)

중점 추진	2. 현장 수사력 강화를 위한 수사인력 확보 (연계 과제) ① 국정과제(63번), ② '23년 정책 고도화	수사 기획
	[성과목표] 현장 수사관 확보, 수사 중간관리자 직급상향 추진	

□ 추진 배경

- (수사인력 필요) 「군사법원법」 등 법령개정에 따라 증가하는 수사 수요에 대응하고, 법령상 요구되는 전담수사관 등 현장인력 필요

□ 수사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 수사인력 확보 추진

- (사법경찰관 직급 상향) 계(팀)장 중심 수사체계 구축과 함께 형사법상 요구되는 수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 단계적 증원
- (현장인력 확보) 군인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성범죄 전담수사관 등 법률상 요구되는 필수 인력을 증원을 법령개정과 함께 추진

- ✓ (군인범죄수사)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전담수사 인력 증원
- ✓ (피해자 보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성범죄처벌법(개정 진행중)」에 요구되는 전담수사인력 경찰서별로 배치, 피해자보호·성범죄수사 전담 추진

□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추진

- (전문인력 관리) 수사경채자 채용분야를 확대(과학수사 등 전문분야)하고, 채용된 수사경채자에 대한 관리방안(경력관리, 보수교육 등) 마련

* 변호사(경감), 수사(순경) 외에도, 과학수사 등 신규분야 채용 검토(순경~경장)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정기직제 요구(3월)
2분기	❖ 수사분야 역량강화 등 수사 경채자 관리 방안 마련(6월)
3·4분기	❖ 법령개정에 따른 하반기 수시직제 추진(10월)

중점 추진	3. 근무여건 개선 등 수사경찰 사기진작 방안 마련 (연계 과제) ①'23년 정책 고도화, ②기타('23년 해경 위원회 보고)	수사 기획
	[성과목표] 특수업무수당 신설, 일한만큼 보상받는 체계 마련	

□ 추진 배경

- **(근무기피 심화)** 타 부서 대비 높은 업무강도 요구, 수사 업무의 책임성 요구, 권위적인 수사문화, 낮은 보상 등으로 수사부서 기피 심화

* 수사부서 근무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452명) 중 67%(306명)이 전출 희망('23.11.)

□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사부서 근무여건」 조성

- **(행정 간소화)** 소속기관에 하달된 지침·규칙에 대한 불필요한 일버리기, 규칙·지침 일몰제를 추진하여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존에 수기로 복잡하게 수집하던 통계를 차세대 KICS시스템을 통해 효율적 수집

- **(현장예산 확보)** 수사활동에 필요한 필수예산(사건수사비, 운영비 등) 증액 및 범죄진압용 현장 필수장비의 단계적 보급을 위해 예산확보 추진

* '24년 보급 방검조끼, 안전모, 마약단속 보호장비 등 '25년 확보 저위험 권총, 방검토시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수사경찰 근무여건 개선계획 수립(3월)
2분기	❖ 수당 신설(안) 인사처 제출(4월), 범죄 진압용 현장 장비 보급(5월)
3·4분기	❖ 국회·기재부 설명 등 수사예산 편성심의 대응(8~11월),

중점 추진	4. 수사경찰 경정 및 전원 특별승진 제도 마련 (연계 과제) ①청장 지시사항	수사 기획
	[성과목표] ('23년) 개인 특별승진 → ('24년) 경정 및 전원 특별승진	

□ 추진 배경

- 현장 수사경찰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계장 중심 수사체계 정립을 위해 개인 특별승진에서 경정 및 전원 특별승진으로 개선 필요

□ 수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장 중심 수사체계 구축

- (계장중심 수사체계) 수사완결성 강화를 위해 계장을 정수사관으로 지정하여 사건을 주도,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역량있는 계장 보직
* 계장역할 : (기존) 수사지휘, 관리 → (변경) 정수사관으로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건주도

□ 수사경찰의 막중한 책임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계장 중심 수사체계로 막중한 책임에 비례하여 경정 및 전원 특별승진 등을 통해, 수사경찰에 영예성과 동기부여

- ✓ (경정 특진제도 신설) 중요 범인검거 특진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유능한 경감 계장 유입 등을 위해 現 경감까지의 특진제도를 경정까지 확대
* 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23.11.21.)
- ✓ (전원 특진제도 신설) 일정한 규모의 성과 거양 시 계장 포함 사건 처리에 공적이 있는 전원에 대한 특진 부여
- ✓ (우수계장 선정, 포상 부여 등) 우수 계장 선정(연 1회), 수사비·표창 수여

□ 추진 일정 ※ 원활한 계획 추진을 위하여 인사·조직 부서와 사전협의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변화된 수사체계에 대한 수사직원 교육 실시(1월) ❖ 책임수사 강화를 위해 계장 중심수사 체계 시행(2월)
3분기	❖ 계장 중심수사 체계 운영 중간점검(7월)
4분기	❖ 경정 및 전원 특별승진 실시(10월) ❖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11월)

정책	5. 선제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차세대 KICS 안정적 운영 (연계 과제) ①국정과제(04번), ②비전 2033	수사 기획
	[성과목표] 차세대 KICS 안정화 ('24년) 안정화·오픈 → ('25년) 운영, 유지·관리	

[법령]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 TF 협의, 시스템 운영세칙 제정

[예산] 차세대 KICS 장비·정보화 연차사업 ('24년) 2.6억 ('25년) 5.49억 ('26년) 1.56억

□ 추진 배경

- '24년 10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시행에 따라 형사절차 전자화, 대 국민 서비스 확대 등 업무효율·국민편의 중심 시스템 구축 중

□ KICS(Platform) ↔ 사용자(User) 상호작용을 통한 유기적 시스템 구축

- (사업 마무리) 통합 TEST 및 시험 운영 실시(시범서 → 전관서 단계별 시행), 현장수사관이 직접 운영하며 개선사항을 반영한 최종 결과물 도출('24.10)
* **시범서 선정** 1 ~ 2개 경찰서('24. 4월) / **시험기간** '24. 5월 ~ 8월(약 3개월)
- (환류 교육) 신규 시스템 운영법 습득과 현장 이질감 최소화를 위해 기존 교육을 “차세대 KICS 교육”으로 개선, 관서별 맞춤형교육 시행
* **향후계획** 관서별 핵심사용자 2명 양성, 사이버 전용 콘텐츠 신규 개발

□ 안정적 시스템 정착을 위한 「차세대 KICS 필수 인프라」 구축 추진

- (인적 인프라) 통계, 빅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문 운영정원 확보 추진
- (물적 인프라)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규 기능 구현을 위한 KICS 현장장비 및 기관간 연계, 보안강화를 위한 정보화 장비 도입 추진
※ 현장 장비(태블릿PC 등 6종), 정보화 장비(방화벽, 스위치, 접속기록관리 S/W)
- (제도 인프라) 효율적 시스템 활용을 위한 운영세칙 등 제도 근거 마련
* **향후계획** 「해양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정('24.10월) → 시행('25.1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차세대 KICS 인력 확보(2~3월)	❖ 차세대 KICS 장비, 정보화예산 대응(1월)
2분기	❖ 차세대 KICS 시범관서 운영(4월)	❖ 차세대 KICS 교육, 강사양성
3분기	❖ 차세대 KICS 전관서 시험운영(8월)	❖ 차세대 KICS 장비 구입·보급(7~8월)
4분기	❖ 시스템 정식 오픈(10월)	❖ 해양경찰청 KICS 운영규칙 제정(10월)

중점 추진	6. 해양범죄 수사 지식·능력 확대를 위한 「수사 실무 법령집」 제작 (연계 과제) ①비전 2033	수사 심사
	[성과목표] 수사기법사례 공유 ('23년) 수사심사 종합 사례집 → ('24년) 핵심법령집 제작	

□ 추진 배경

- 수사실무에 관한 법률적·기술적 지식 확대를 통한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범죄에 관한 체계적 「법령 정리·해설서」 필요*

* 일선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양특별법 범죄 관련 구성요건에 관한 체계적 정리·해설을 통해 수사심사관 및 신입수사관의 업무처리 향상에 도움

< 추진 경과 >

- ('21년) 「수사심사 실무 사례집」 제작 : '수사심사의견서' 사례 및 작성기법 공유
- ('22년) 「수사 LAW」 개편 : 보완수사요구, 판례, 법령질의·해석 등 '수사자료 축적'
- ('23년) 「수사심사 종합 사례집」 제작 : '검찰 보완수사요구' 사례 공유

□ 해양범죄 수사 법령집 제작 계획

- (해양특별법) 최근 5년간 발생사건 분석 후 「주요 위반법령」 선정, '적용범위, 구성요건·처벌규정, 쟁점사안' 등에 관한 법령해설서* 제작

* △ 법령별 적용 및 배제대상 명시 △ 위반행위별(예: 무허가조업)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등 관련규정 정리 △ 적용규정별 주의해야 할 쟁점 제시

< 5년간 주요 위반법령 >

수산업법(13.8%), 어선법(12.9%), 수산자원관리법(9.1%), 해양환경관리법(6.7%), 선박안전법(5.9%), 선박직원법(5.8%), 수상레저안전법(5.2%), 공유수면관리법(4.8%), 선박입출항법(4.4%), 양식산업발전법(2.9%), 낚시관리및육성법(2.8%) 등

- (상·하급심 판례 등) 해양특별법 관련 △ 대법원 및 지방법원 판례 △ 소관부처 질의·해석 △ 법적쟁점에 대한 분석자료 등을 첨부하여,

- 수준 있는 법 해석 및 범죄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의 정확도 제고*

* 해양특별법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희소하여,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합리적 해석기준 마련을 위해 하급심 판례, 유권해석 등 다양한 자료 필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분기별 제작	❖ (1분기) 해양수산 관련 법령	❖ (2분기) 해양안전 관련 법령
	❖ (3분기) 해양환경 관련 법령	❖ (4분기) 기타법령, 법령별 통합 발간

중점 추진	7.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연계 과제) 국정과제(64번)	수사 심사
	[성과목표] 범죄피해자보호기금('24년 최초 배정 예상) 지속 확보 및 증액	

□ 추진 배경

-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를 위한 임시숙소 지원('24년 정부 예산안 5,300만원 확정)으로 2차 피해 예방 및 심리적 안정 등 신속한 피해 회복 도모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역량 강화 및 제도발전을 위한 학술적 논의 필요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조기 집행을 위한 사용지침 수립

- (기금 목적) 범죄피해자에 대한 임시숙소(숙박비, 긴급부대비) 지원
- (지침 마련) 기금 사용 첫 시행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① 범죄피해자 정의, ② 지원 대상*·기준·내용, ③ 임시숙소 지정 및 운영 원칙, ④ 기금 집행 절차 등 규정

* 지원 대상 :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선박사고) 등 피해자

□ 범죄피해자 단체와의 세미나 추진

- 해양경찰청 주관, 民·學·官·軍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가 참석하여 피해자보호에 관한 학술적 교류 및 협업체계 구축 논의

Ⅰ (참석대상) △(民) 한국피해자지원연합회, 한국피해자지원협회 △(學) 해양·경찰행정학 분야 교수 △(官) 경찰청, 검찰청 △(軍) 육·해·공군 수사단등

Ⅰ (논의내용) 살인·중상해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군범죄 등 분야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효성(피해자 맞춤형 지원 등) 있는 방안 논의*

*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시설물(시뮬레이션센터 등) 체험·관람 병행으로 해양경찰 홍보 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해양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지침 수립 및 시행(1월)
3분기	❖ 범죄피해자 지원단체(民·學·官·軍) 세미나 개최(9월)
4분기	❖ '25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확보 대응(10월) ❖ 피해자 지원현황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11월)

중점 추진	8.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해양 마약수사 국제포럼』 추진 (연계 과제) ① 국정과제(63번), ② '23년 국감, ③ 비전 2033	형사
	[성과목표] ('24년)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해양 마약수사 국제포럼』 개최	

□ 추진 배경

- (주도적 첩보망 구축) 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 단속 등을 위해 국제공조를 통한 첩보망 구축과 범죄첩보 입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
 - 국내·외 유관기관은 마약 첩보입수를 위해 앞다투어 마약관련 포럼 개최 중, 마약 밀반입에 선제적 차단을 위한 주도적 첩보망 구축 필요

√ 국내 유관기관 마약관련 주요 국제행사

- ▶ (검찰청)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 국내외 마약 전문가 참석, 국제 마약범죄 동향 및 공조 방안 논의
- ▶ (경찰청) 인터폴 마약수사 국제공조회의(ICON)
 - 경찰청-인터폴 공동주관 마약 등 초국경범죄 대응 컨퍼런스

□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포럼』 추진

- (국제공조 포럼) 해양 마약수사에 특화된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포럼』추진, 주도적 첩보입수 및 마약 밀반입의 선제적 차단 발판 마련

- ▶ (명칭/개최시기)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포럼(약칭:MNIF) / 연간 1회(하반기)
(Maritime Narcotics Drug Investigation & Mutual Assistance International Forum, MNIF)
- ▶ (초청 국가 및 기관) UNODC·DEA·인터폴·JIATF-W 등 국제 유관기관과 콜롬비아·태국·페루 등 마약 관련 주요생산(유통)국 등 국내·외 해양 마약수사 전문가 약 20명 내외
- ▶ (주요 내용) 주요 수사사례 발표, 선박 밀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검토 등

- (포럼 운영방안) 콜롬비아, 태국 등 마약생산(유통)국에서 경유·도착지까지 해양 마약유통망을 감시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국제기구 및 국내·외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수사공조를 통해 선박 이용 해양 마약 밀반입 범죄 적발·마약조직 합동검거작전 활성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상반기	❖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무자급 사전회의(5월)
하반기	❖ 국제해상 마약범죄수사 공조포럼 개최(9월)

중점 추진	9. 해양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연계 과제) ①국정과제(101번) ②국회 지적사항 ③비전2033	과학 수사
	[성과목표] ('23년) 사이버수사 체계 완성 → ('24년) 사이버공격 대응력 확보	

□ 추진 배경

- 자율운항선박(AI), 스마트항만 등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해사환경 급변으로 해양 사이버범죄 등 위협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 증가
 - * '23년 일본 나고야항 및 네덜란드 해상 물류회사 대상 랜섬웨어 공격
- 사이버수사계 신설로 既 해양 사이버범죄 대응(수사)은 가능하나,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테러)은 현실적으로 미흡함
 - * '23년 국감 신정훈 의원 "선박의 하이재킹 등 사이버공격 대응능력" 요구

□ 해양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제고

- (협업체 구축) 民·官 합동 해양 사이버공격 대응 협업체 구축
 - * [민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공공] 국정원, 경찰청, 해수부 등
- (상황훈련) 해양 사이버공격 모의훈련으로 대응체계 확립
 - * 선박 항해기기에 대한 악성프로그램 감염 등 임의 상황 부여에 따른 비상 대책본부(가칭) 가동 및 수사단서(랜섬웨어 특정 등) 확보 등 대응조치 숙달
- (매뉴얼) 하이재킹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유형별 매뉴얼 제작
 - * '23년 해양 사이버범죄 수사매뉴얼 업그레이드

〈 해양 사이버공격 유형 〉

- ✓ (스푸핑) 가짜 위성신호를 생성 GPS플로터에 송신, 잘못된 위치로 운항
- ✓ (재밍) 위성신호를 압도하는 강한(범람) 신호로 GPS플로터 사용 불가
- ✓ (미코닝) 위성신호를 차단하였다가 지연신호를 재전송하여 위치 착오
- ✓ (하이재킹) 위성 단말기를 해킹하여 선박의 위치 등 변경시키는 공격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주요 내용(3월) 경찰청 등 협업체 구축 - 비상대책본부(가칭)
2분기	❖ 주요 내용(4월) 훈련을 위한 사전 회의 ❖ 주요 내용(6월)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 실행
3분기	❖ 주요 내용(7월) 훈련 결과에 따른 피드백 및 보안
4분기	❖ 주요 내용(10월) 사이버공격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정책	10. 수중과학수사 전문기관 도약	과학 수사
	(연계 과제) ①비전2033	
	[성과목표] 수중 공인자격증 취득 ('23년) 18명(48%) → ('24년) 23명(61%) 이상	

□ 추진 배경

- 해양 매개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물속'도 법과학적 지식 정보 기반의 감식·분석의 중요성 대두 등 우리청의 선도적 역할 적격
 - * 해양 기반시설과 전문인력(수사/구조)을 갖춘 유일한 선도 기관으로서 감식 전문성 제고와 독보적 기술 확보를 위한 분야별 기반 확충 필요

□ 수중감식 인적·제도적 기반 공고화로 전문기관 기틀확립

- (지침 개선) 수중의 물리적 영향 및 감식관 개인의 안전 등 육상 일반감식과 다른 특성화 분야의 차이를 반영한 해양특화 지침 마련
 - * '수중과학수사 운영 규칙', '수중감식 표준업무 처리지침(SOP)' 검토 및 개정, 국/내외 매뉴얼 분석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감식활동의 법적근거 마련
- (인적 역량) 최근 증거재판 추세 등 감안, 증거물 유기·멸실 방지 및 경위를 입증해줄 증거물 확보·분석 등 수중 공인 자격증 취득
 - * 현장대응 가능 중급자이상 감식관 확보로 감식증명력 확보 및 대외 신뢰도 제고

정 원(명)	소계(38)	중부청(8)	서해청(10)	남해청(8)	동해청(6)	제주청(6)
'24년 목표: 61%	23(61%)	3→5(63%)	4→6(60%)	5(63%)	3(50%)	3→4(66%)

- (훈련 체계) 교육원, 중특단/대 등 우수 수중훈련 기반시설 및 수중 교수 요원(감식/구조/특공)활용, 제반시설/인력이 부족한 他기관요원 수탁교육
 - * 경찰청(非상설조직·훈련시설 미보유), 해군(기반시설 미약) 등 교육수용(수탁)으로 우리청 수중감식 분야에 전문성을 알리고, 부족 분야에 대한 위탁체계 보완
- (지원 사업) 정부 외교정책(인-태 전략) 기반, 선진 수중과학수사(기법/장비) 전수사업(ODA) 추진으로 국제위상 제고 및 공조네트워크 확립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2분기	❖ 수중규칙 및 매뉴얼, 지침 검토(4월) 장비점검(5월), 수중감식관 자체훈련 (6월) ❖ 수중과학수사 전수사업(ODA) 추진 검토(기재부·KOICA)(4월)
3-4분기	❖ 유관기관 합동훈련(7월), 지침 및 법령 개정(9월)
수시	❖ 수중과학수사 등 위탁교육 협의(민관군)

정보외사국

중점 추진	1. 정보경찰 역량 강화 및 준법지원 활동 (연계 과제) 비전2033	정보
	[성과목표] 정보협의체 구성 및 특성화 교육, 준법지원 통제 강화 등 역량강화	

[예산] 정보협의체 운영(1.3천만원) - '24년 신규편성

□ 추진 배경

- 해양정보·여론 수집을 위한 정보협의체 부재로 대외협력 및 정보 수집 능력 저하 등 전반적인 대외 정보역량 약화 개선 필요
- 정보-수사 기능 분국 이후 직무교육훈련센터 내 정보 전임교수 부재·특성화 교육 미개설로 내부 인적역량 함양 애로
- 경찰청 일선 정보기능 축소(259개→62개)로 해양경찰 정보 단독 활동 지역은 상대적 주목 가능성이 높아 법과 원칙에 맞는 준법활동 필요

□ 주요 내용

- **(정보협의체 구축)** 해군, 관세·출입국 등 해양 관련 정보기관으로 구성하는 「해양정보 협의체」를 우리청 주관 운영, 대외교류·협력 강화
 - 협의체 정례회의(반기 1회 / 국장주관) 운영, 각종 정보 현안 등 공유를 통해 정보주체 간 협력강화
- **(정보경찰 역량강화)** 직무교육훈련센터 내 정보전임 교수 신설 및 정보특성화 교육(전문정보관 교육 등) 개설로 정보경찰 인적역량 강화
- **(준법지원 강화)** 시기별·테마별 준법지원 활동 및 준법감시 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정보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 확보
 - 해양경찰 단독 정보활동 지역 중점점검, 공공갈등 발생 우려 지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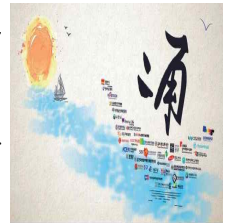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정보 전임교수 신설·준법지원 계획수립(2월) ❖ 준법지원 특별 점검
2분기	❖ 정보협의체 구성(6월) ❖ 지방청·경찰서 정보경찰 집합 교육(6월)
3분기	❖ 정보협의체 정례회의(9월) ❖ 정보특성화 전문교육(9월)
4분기	❖ 정보협의체 현장방문(10월), 준법지원 활동 종합보고 (12월)

정책	2. 현장·국민들 대상 소통·공감을 통한 정보활동 추진	정보
	(연계 과제) 비전2033	
	[성과목표] 국민·현장 대상 정책소통 활성화·고도화를 위한 세부 이행계획 추진	

□ 추진 배경

- 대통령님, 수석비서관회의(10.16)에서 “책상에만 있지 말라, 국민소통과 현장소통을 더 강화해 달라”고 주문, MZ세대 직장인이 가장 선호하는 리더십이 ‘소통형’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조직문화에 있어서 소통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
- ‘22~’23년 시행한 ‘해드림 팀’ 운영 만족도 조사*결과 약 80%가 만족, 본청에서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만으로도 조직문화가 개선되고 있음을 인식
 - 단, 시행 초기로 적극적인 활동과 성과 등이 공유되지 않아 전 직원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활동기간이 짧아(廳별 1~2일)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한계 有



□ 주요 내용

- **(현장 소통 고도화 마련)** ‘22~’23년도 추진한 ‘해드림 팀’ 활동분석을 통해 ‘해드림 팀’ 운영 고도화 및 현장참여 활성화 유인책 마련을 위한 전략 추진

〈이행 계획〉

- ✓ 【전략 1】 업무포탈 게시판 및 언론보도를 통한 주요성과 적극홍보 및 공유
- ✓ 【전략 2】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 청취를 위해 활동기간 확대(廳별 3~4일)
- ✓ 【전략 3】 정책제언~개선으로 이어진 최초 의견제출자에 대한 연말 포상

- **(국민 소통·공감 추진)** 해·수산 관계자 및 어민들 대상 정기적 소통으로 각 해역별 이슈 및 주요현안을 지방청별 발굴·본청보고, 국민 소통·공감 추진

〈이행 계획〉

- ✓ 【전략 1】 각 지방청별 국민 여론 청취를 위한 테마별 의견 수렴(분기별 1건)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현장소통을 위한 ‘해드림 팀’ 운영계획 수립(3월) ❖ 국민소통을 위한 현장점검 계획 수립(3월)
2분기	❖ 주요정책 현안 문제점 발굴을 위한 1차 활동(4~6월)
3분기	❖ 주요정책 현안 문제점 발굴을 위한 2차 활동(7~9월)
4분기	❖ ‘해드림 팀’ 운영 종합 보고(11월), ❖ 국민소통 운영 종합 보고(11월)

정책	3. 범죄정보 수집 및 정보협력 채널 상시화 방안 마련 (연계 과제) 청장 지시사항	정보
	[성과목표] 분기별 범죄정보 수집목표 및 해·수산단체·기업과 정책간담회 정례화	

□ 추진 배경

- 해양 마약밀반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 첩보력 강화를 위해 외근전담 정보관의 협력망을 통한 범죄정보 수집, 수사지원
 - * 지난 4.19. 청장 『해양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지시 → 4.20. 정보수사 긴급 화상회의 『특히, 정보 기능에서 마약첩보 적극 발굴』 협력 강조
- 매년 해·수산 및 유관기관 간 정보협력 정책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여 외부정책·대외협력 소통창구 상시화로 국민 중심 정책협업 제고 모색

□ 주요 내용

- **(범죄정보 수집 강화)** 수사력 강화 지원을 위한 양질의 첩보 수집을 위해 본청·지방청 외근중심으로 분기 1건 목표로 수집 의무화 마련
 - * 정보-수사 기능 협업 및 정보경찰 전문교육 시 범죄정보 수집 과목 추가

〈 이행계획 〉

✓ (운용) '24년 시범운영(본청·지방청) / '25년 건문수집처리규칙 개정 검토 등

- **(정보협력 채널 상시화)** 정책수혜자이면서 협력체인 해·수산단체·민간기업 등과의 청장님·지휘부 정례간담회를 통해 국민소통 강화
 - * 단체예시) 해운협회·조합 / 수협, 한국수산회, 수산경영인협회 / 해운·수산기업 등

〈 이행계획 〉

✓ (운용) 2월 1회, 해·수산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및 본청 초청 간담회 진행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2분기	❖ 범죄정보 활성화 방안계획 수립·시행(2월) ❖ 해·수산단체 현장간담회(3, 5월)
3·4분기	❖ 해·수산단체 간담회(7, 9, 11월) ❖ 범죄정보 수집 시범운영 결과 및 향후계획(11월)

중점 추진	4. 해양주권·국경 수호를 위한 국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연계 과제) 비전2033	외사
	[성과목표] 해양국경을 초월한 국제범죄 대응력 향상	

□ 추진 배경

- 해양주권·국경침해범죄 등 해양 국제범죄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점·우선 이행과제를 선정, 내실있는 이행으로 국제범죄 대응 전문성 확보

□ 주요 내용

- **(해양국경 치안강화)** 밀입국, 밀수 등 해양국경범죄 차단을 위해 최신 범죄수법 반영 세부이행계획 마련·실행 및 주변국과 협력강화
* (밀수밀입국) 밀입국 사전 차단활동 등 선제적 대응^①중실무회의추진 ^②모집책 활동 모니터링
- **(항만보안)** 현행「항만보안법」에는 우리청은 ^{폭발물, 무기류 반입 등}항만보안사건 발생 시 합동조사, 현장점검 등 제한적 참여 규정, 항만보안에 미비점 발굴·개선추진
- **(외사방첩 연계 국제범죄 대응)** 해양주권 등 국익침해, 국경초월 범죄 적극 차단을 위한 방첩활동과 연계한 국제범죄 기획 수사 활성화
- ^{국정감사 등 국회당부사항}**(외국어선 불법조업 피해기금 마련)** 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피해 기금마련을 위한「어업주권법」개정 관련 해수부 요청 시 적극 협력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상반기	❖항만보안 연구용역(4월~), 항만보안 자문단 구성(5월~), 상반기 워크숍(3~6월중)
하반기	❖국제범죄컨퍼런스(9월, 국회), 유관기관 협력회의(연중), 합동단속·점검(연중)

정책	5. 해양 국제범죄 대응 국제 공조수사 강화 (연계 과제) 비전2033	외사
	[성과목표] 해양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외 정보수사기관 공조 확대	

□ 추진 배경

- 해양국제범죄의 신속·완벽한 검거를 위해 범죄 관련 주요정보 등 주변국(中·日 등) 및 인터폴과 적극 공유, 다각적 국제공조 추진

□ 주요 내용

- **(국제범죄 정보 공유)** 주변국 해양치안기관 간 범죄정보 공유 확대

대상국	관 련 기 관	범죄정보 공유	비 고
중 국	해경국 공안부(해안경찰지대)	· 해상환적 등 밀수범죄 · 밀항·밀입국 등 국경범죄	기관장 회의 (‘23. 6월)
일 본	해상보안청 (국제형사과·국제조직범죄대책기)	· 선박이용 마약 밀반입 등	과장급 회의 (‘23. 2월 / 11월)

- **(불법조업어선 정보제공 확대)** 中 해경국과 불법조업 어선의 범죄 정보공유 확대* → 中 정부 재조사·처벌 등 재범사례 사전차단 기대
 - 기존 영해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구속수사의 경우 불법조업 증거 자료 일체를 中 대사관뿐만 아니라 中 해경국에도 추가 제공

* **[현행]** EEZ어업법 위반(무허가) ⇨ **[확대]** + 영해침범, 공무집행방해, 담보금 미납

- **(인터폴 국제공조 활성화)** 국외도피사범 인터폴 수배서 발부 확대 및 국제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경찰청(국가중앙사무국) 협업 강화
 - 전국 수사부서 교육·홍보*를 통한 국외도피사범 인터폴 수배 적극 활용

* 일선 순회교육(인터폴협력관) / 외사교육(교육원) 커리큘럼 편성 / 교육자료 배포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연 중	❖ 주변국(中 해경국·공안부, 日 해상보안청 등) 간 해양 국제범죄 정보공유 활성화
	❖ 인터폴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경찰청 등) 업무협력 확대

정책	6. 유관기관 정보협력 실질적 네트워크 활성화 (연계 과제) 비전2033	외사
	[성과목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가시적·효과적 협력 구체화	

□ 추진 배경

- 국제범죄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짜임새 있는 정보공유·협력, 수사공조 등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주요 내용

- **(맞춤형 정보교류)** ^{FBI특수교육} 특화된 수사기법 교육, ^{해외에서} 한국향 범죄정보 및 ^{교정정보} 특정범죄 정보 등 맞춤형 교류 협력 발굴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교류 성과거양
- **(컨퍼런스)** 「제3회 해양국제범죄 대응 컨퍼런스」초청 국내·외 기관을 확대하고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한단계 상향
 - * 제1회 (‘22년, 여수) 국내 8 / 국외4 제2회 (‘23년, 송도) 국내 14 / 국외 6
- **(전문교육 협력)** 주요 기관별 특화 분야 전문교육 참여 확대 추진
 - * 국정원·방첩사(국가방첩분야), 법무부(외국인 정책분야), 경찰청(국제범죄 분야) 등

중점 추진	7. 안보위해선박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 채널 다각화 (연계 과제) ①국정과제(93번) ②비전2033	보안
	[성과목표] 안보위해선박 정보 수집·분석·검증,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지원	

□ 추진 배경

- 대북제재 강화의 지속 및 9·19군사 분야 합의서 일부 파기에 따른 안보 범죄 및 대북상황 발생 대비·대응을 위해 정보 수집채널 다각화 필요

□ 주요 내용

- **(기관정보 수집)** UN대북제재 등 안보위해선박 정보 수집을 위해 軍 정보기관 및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기구 구성, 정보공유 활성화
* 軍 정보기관과 안보위해선박 대응 정보공유 협정 체결 관련 후속조치 이행

〈 협약 후속조치 〉

- ✓ (예산 확보) 청내 보안시설 등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 ✓ (협업 기구) 기관 간 비상설 협업기구 구성, 필요 정보 요구 및 수집·분석
- ✓ (시설 구축) 향후 보안시설 구축 및 인원파견 시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확립

- **(국민제보 활성화)**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한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여 안보위해선박 신고체제 구축
* 언론매체 등 다양한 홍보와 제보방법 등 실시계획 수립·시행

- **(위성정보 수집)** '23년 대북 위성영상 수집 사업 연계, 인공지능 (AI) 등 활용, 위성영상 분석을 용이하게 하여 자료 활용 극대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영상 분석 사업 추진(2월) ❖ 안보위해선박 협업기구 구성(3월) ❖ 신고 포상금 제도 대국민 홍보 추진(3월)
매월	❖ 상기 사업 추진 활성화 및 모니터링

정책	8. 해양안보에 특화된 보안업무 환경 조성	보안
	(연계 과제) ①국정과제(93번) ②비전2033	
	[성과목표] 대국민 안보교육 인원 수 ('23년) 2,300명 → ('24년) 2,415명 (5% 상향)	

□ 추진 배경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24.1.) 관련 해양 안보범죄 공백 방지를 위해 안보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 장비 및 교육 등 역량 제고 필요
- 정부 각 부처에서 대내외 북한 인권실상을 교육하라는 대통령님 지시 및 접경해역 우리어선 안전 확보를 위해 안보교육 추진

□ 주요 내용

- **(역량 확보)** 보안경찰, 안보범죄전담반 실적 분석 및 실무자 의견 수렴, 내·외부 안보 수사교육 시 성과와 문제점, 사례 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
* 전담반 개편여부 평가(연1회), 국정원·경찰청·통일교육원 등 외부기관 교육 확대
- **(장비 개선)** 야간감시장비, 채증장비 등 보안장비의 효율적 운용 및 가동률 향상을 위한 전수조사 시행, 수리 또는 신규장비 도입
- **(임무 확대)** '24년 우리청 안보요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편성에 따른 총무계획 개정 및 소속기관까지 계엄사 합동수사단 편성 추진
* 을지훈련 시 합수본 파견 및 임무 확대 등 총무계획 개정, 지방청 추가 편성 협의
- **(대국민 교육)** 연중 접경해역 출어민 등 해수산 종사자 안보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북한 실상 교육을 위한 '안보DAY' 행사 개최
* 지방청·경찰서 해수산종사자 교육 지원, 본청 주관 일반국민 대상 행사 개최(6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보안업무 평가 계획 수립(3월), 보안장비 전수조사(3월)
2분기	❖ 보안업무 현장 소통 지도점검(5월), 안보의식 고취 '안보 Day' 운영(6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편성 사항 총무계획 반영(6월)
3분기	❖ 보안업무 실적 평가(7월), 보안업무 유공자 선발(7월)
4분기	❖ 보안업무 현장 소통 지도점검(10월), 보안업무 우수사례 선발 및 전담반 실적 검토 (12월)
매월	❖ 내·외부 안보수사 전문교육 시행

정책	9. 체계적·효율적 해양 안보 상황 대응체계 구축	보안
	(연계 과제) ①국정과제(93번) ②비전2033	
	[성과목표] 안보상황 매뉴얼(개정), 안보 상황FTX훈련, 합조요원 교육	

□ 추진 배경

- 대북제재 장기화로 북한의 경제난·식량난 지속과 체제 불만으로 인한 귀순 및 NLL월선 등 해양 안보상황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역량 강화
 - * 목선 이용 귀순('23.5.7. 연평도 일가족 9명, '23.9.23. 속초 일가족 등 4명)

□ 주요 내용

- **(안보 상황훈련)** 중요 안보상황에 신속·체계적 대응을 위해 '안보상황 대응반' 재구성 및 '안보상황 FTX(실제기동훈련)' 실시로 대응역량 강화
 - * 동·서 접경해역(안보상황 FTX훈련), 그 외 지역(지방청 별 도상훈련)
- **(합조요원 교육)** 합동정보조사 요원 역량강화를 위해 중앙·시도·지역 합동조사 사례 정보공유 및 교육의 장(국정원·방첩사 등) 신설 운영
 - * 안보상황 발생시 합동조사 노하우 공유 및 안보상황 대응 주의사항 논의
- **(매뉴얼 개정)** 유관부처 상황대응 법령·지침·매뉴얼 개정을 반영, 체계적·효율적 안보상황 대응을 위한 '해양안보상황가이드북' 개정 발간
- **(제재위반 대응훈련 확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의심 선박에 대한 식별·탐색 교육 훈련 시 타기관 참석 확대로 정보교류 및 노하우 공유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보안활동 집중분야 지정(2월), 지방청별 중요 안보상황 대응반 구성(3월)
2분기	❖ 해·항만 보안활동 점검·훈련 계획 수립(4월), 접경해역 안보상황 FTX 훈련(6월)
3분기	❖ 해양안보상황 가이드북 개정(7월), 제재 위반선박 대응 훈련 실시(9월)
4분기	❖ 합동조사요원 역량강화 소통·교육 개최(10월), 접경해역 안보상황 FTX 훈련(12월)
매월	❖ (수시) 해역별 불시 안보상황 훈련(도상) 실시

해양오염방제국

중점	1. 해양오염사고 재난관리체계 마련 (연계 과제) ① 비전2033, ② '23년 정책 고도화	방제 기획
	[성과목표] 해양오염사고 재난관리주관기관 공동지정 및 후속 조치 시행	

□ 추진배경

- 행안부는「재난안전법」상 재난의 유형(의미와 범위)과 재난관리주관기관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는 '재난안전 법제 정비*' 마련

* (우리청 관련과제) 해수부-해경청 해양오염사고 재난관리주관기관 공동지정

- '해양오염사고'를 법률에 근거한 재난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수부·해경청 재난관리주관기관 공동지정 추진 중

【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관리 주관기관	사회재난의 유형
해양수산부	해양 분야 환경 오염사고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 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피해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재난안전법」상 '해양오염사고 재난관리주관'으로 해수부와 해경청이 공동지정 예정에 따라, 재난대응체계 개편을 위한 과제발굴·추진

* 행안부 주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공동(해수부-해경청) 지정 협의체 구성·운영

-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 「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해수부 협의 등 추진

**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소요 발굴 및 부처 협의를 통한 개정 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연 중	❖ 「해양오염사고 재난관리주관기관」 공동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 시행
	❖ 해양환경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 「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정책	2. 현장 중심의 방제조직 내실화 (연계 과제) ① 국정과제(41번), ② VIP 강조사항	방제 기획
	[성과목표] 현업운영 주요성과 분석 및 문제점 개선·보완	

□ 추진 배경

- 방제업무 진단 및 개편을 통해 그간 꾸준히 확대된 조직 규모에 걸맞은, 내실있는 업무 수행 및 전문성 확보 필요
- 대규모 오염사고 위험성 증가 예상에 따라 방제직원 재난사고 대응 역량 제고와 관계기관 협업 강화 등 재난사고 대응체계 보강 요구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방제국 조직·기능 개편을 통한 체계적 방제업무 수행 및 소통·공감 강화
 - * 본청·소속기관 인력운영 현황 및 업무량 분석 등 조직진단 추진
 - ** 소속기관과 주요정책 공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워크숍 및 영상회의 개최
- 해양오염 상시대응을 위한 현업운영체계 점검 및 내실화 추진
 - * 현업운영 주요성과 분석 및 문제점 개선·보완으로 안정적인 현업체계 정착
- 재난오염사고 대응 전문성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운영
 - * 일반직 7급 기본교육 최초 개설, 재난대응 역량 강화 내·외부 전문과정(26개 과정)을 '24년 교육훈련계획 및 '24년 일반직 상시학습 운영지침에 반영 추진(1분기)
- 오염사고 공동대응 및 협력과제 추가 발굴 등 국립공원공단과 협업 강화
 - * 생태휴식제 도서지역 공동 정화 활동 및 업무공유 합동 워크숍 개최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방제직원 교육과정 개편 운영
2분기	❖ 방제조직 재설계안 마련(5월)
3분기	❖ 현업운영 주요성과 분석(9월)
4분기	❖ 우리청-국립공원공단 업무공유 합동 워크숍(11월)
연중	❖ 방제국 영상회의 및 워크숍 개최(수시)

정책	3.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방제인프라 확보 (연계 과제) ① 국정과제(41번), ② VIP 강조사항, ③ 비전2033	방제 기획
	[성과목표] 친환경 LNG 방제함 현장 배치 ('23년) 1척 → ('24년) 3척	

□ 추진 배경

- 급변하는 해양재난 환경에 대응 가능한 첨단 방제함정 및 방제 기자재를 확보하고, 적시에 활용 가능하도록 자원 관리 체계를 고도화

□ 세부 내용 및 이행 계획

- 국내 최초 다목적 화학방제함* 건조 및 고성능 LNG 방제함정** 확충

*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화학방제함 건조 프로젝트 팀' 운영 등 건조 전주기 관리

** '24년 3척 현장 배치(부산, 울산, 목포) 이후 '26년까지 2척 추가 배치(여수, 사천)

- 현장 필수 장비·자재 확보* 및 보관시설 현대화 등 관리·운용 내실화**

* 방제장비 노후도감안 순차교체 및 현장활용도 고려 유흡착재 등 자재 확보

** 노후 컨테이너 교체, '자원관리 심포지엄' 개최 및 운용기술 공유 등 권역별 협력 강화

- 방제 현장요원 입체적 지원* 및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등 협력 강화

* 모바일-QR코드 활용, 방제자원 동원양식 표준화 등 현장 활용도 제고

** 재난관리자원 현행화(매월),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자원지원 태세 유지

- 첨단기술 접목, 차세대 방제기자재 도입 및 선제적 재난대응기술 발굴

* 국가전략기술기반 방제로봇 배치 및 시범운영 등 최신기술의 현장적용

** 무인기술, AI 등 신기술 융복합 방제장비·기술 연구개발 신규과제 발굴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다목적 화학방제함 건조 소요제기(1월) ❖ '24년도 방제자원 확보·재배치 계획 수립(1월)
2분기	❖ 친환경 LNG방제함 2척 현장배치(6월) ❖ 재난관리자원 광역방제지원센터 방제기술·장비 운용기술 교류(6월)
3분기	❖ 방제현장 필수 장비 확보(9월)
4분기	❖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계획 수립(10월) ❖ 방제자원 관리 혁신 심포지엄 개최(12월)

정책	4. 해양오염 방제분야 국내외 협력 강화 (연계 과제) ① '23년 정책 고도화	방제 기획
	[성과목표] 글로벌 전문가 소통 협력 지수 ('23년) 95% → ('24년) 96%	

□ 추진 배경

-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형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해양오염 방제 분야의 국가간 협력과 연대 강화 필요
- 친환경 선박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전문가 협력 다변화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 계획

- 해양오염 방제 분야 다자간 및 양자간 국제 협력 강화
 - * 북태평양 지역 인접국가간(한·중·일·러·미·캐) 다자 협력 강화(NPCGF/NOWPAP)
 - ** 한국-일본 방제정책 교류회의를 통해 최신 방제기술 및 정책 공유 활성화
- 아세안 지역(필리핀, 베트남 등), 해양오염 방제 역량 강화 지원
 - * 아세안 지역 국가의 방제 역량 강화에 필요한 방제 기술 지원 및 정보 교류 활성화
- '대규모 해양오염 피해 야생 동물 구호' 역량 강화 추진
 - * 관계기관·전문가 간 협력 회의 개최, 야생 동물 구조 전문가 양성 교육 추진
- 국내외 전문가간 교류 확대 및 선진 방제 정책 기술 도입
 - *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자문 기능 활성화, 국제전문가 초청 방제 기술 교육 추진
 - ** IMO 회의 등 결과를 국내에 환류할 수 있도록 국제방제정보 공유회의 활성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IMO 해양오염 대비·대응 전문위원회 참석(2월) ❖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정기회의 개최(3월) ❖ NPCGF 전문가회의(위기대응그룹, 일본) 참석(3월)
2분기	❖ 국제유류오염학회(IOSC, 미국) 참석(5월) ❖ 야생동물 관계기관 및 전문가 협의회 개최(6월)
3분기	❖ 야생동물 대응역량 강화 전문교육(7월) ❖ NPCGF 기관장회의(위기대응그룹, 일본) 참석(9월)
4분기	❖ NOWPAP 국가방제 책임기관 간 회의 참석(10월) ❖ 해경-ITOPF 합동 방제전문가 교육과정 실시(11월) ❖ 한-일 방제정책 교류회의(12월)

중점	5. 친환경선박 확대 도입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연계 과제) ① 비전2033, ② '23년 정책 고도화	기동 방제
	[성과목표] 위험요소 분석 및 장비 재배치, 차세대 대응기술 개발 추진 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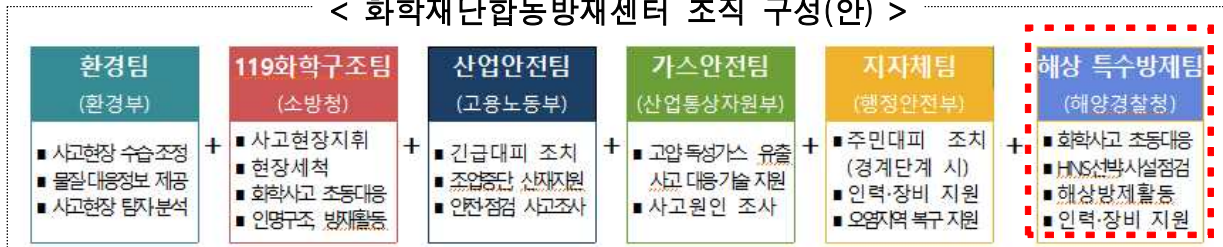
□ 추진배경

-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율 30%로 확대(~'30년)에 따른 화재·폭발을 동반한 복합 해양오염사고 위험성 증가로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전문인력 배치 및 유관기관 상시 협업체계 강화
 - * 해상인접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4개) 중 위험도가 높은 해역에 인력배치
 - 환경부 등 5개부처와 협의하여 공동훈련 등 제·개정 추진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조직 구성(안) >



** 소방청 119화학구조센터 등과 사고대응 방안 협력 및 상호 교류(연 2회)

- 해사환경 변화에 따른「新유형 사고」위험성 재분석 및 대응체계 정비
 - * 친환경선박 벙커링 지역 등 해역별 위험요소를 공간관리 계획에 반영·관리(반기 1회)
 - ** 해경서별 위험도 분석 및 고위험 해경서 중심 장비 자재 재배치·보강
- 친환경연료 추진선박 사고 대비 차세대 대응기술 개발(R&D)
 - * 친환경 선박 사고 연료확산·피해규모 예측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23~'26/55억)
 - **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한 친환경연료(LNG 암모니아 등) 누출 간이센서 개발('23~'25/20억)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연 중	❖ 환경부 등 5개부처 협의, 공동훈련 등 제·개정 추진(연중)
	❖ 해역별 위험요소 공간관리 현행화(연중)
	❖ 유관기관 상시 협업체계 강화(연중)
	❖ 해경서별 위험도 분석 및 장비 자재 재배치(연중)
	❖ 친환경연료 누출감지용 간이센서 개발(~'25년)
	❖ 친환경 선박 사고 연료확산·피해규모 예측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26년)

정책	6. 해양환경 위기대응을 위한 국가 방제대응 시스템 강화	기동 방제
	(연계 과제) ① 국정과제(41번), ② VIP 강조사항, ③ 비전2033 [성과목표] 해양오염방제 조치율 (5년 평균) 81.3% → ('24년) 82% 이상	

□ 추진배경

- 방제 총괄기관으로서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방제시스템 정비
- 해양 재난현장 신속한 상황 판단 및 지휘·통제를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복합 재난현장 정보 신속파악 및 대응전략을 지원하는 스마트 시스템 구축
 - * 해양환경 위기대응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설계용역(2월) 및 본예산 대응(3~8월)



- 국가 방제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훈련 내실화
 - * 행안부 「재난관리주관기관 체계」 개선에 따른 해양오염 매뉴얼 개정
 - ** 광역방제대책본부 부분부장 신설 등 지휘 공백 방지를 위한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개정
 - *** 인접 해경서간 합동훈련, HNS 훈련 강화(연2회 5개서 → 6개서)
- “유류오염”에서 “위험물 복합해양사고” 중심으로 대응체계 강화
 - * 위험물컨테이너 반입시 물질정보 사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선박입출항법)
 - ** 복합해양사고 시 신속대응을 위한 「HNS 물질정보집」 제작
 - *** 화학물질안전원 등 위탁 전문교육 및 긴급구난-HNS 특별세션 운영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해양환경 위기대응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설계용역 추진(2월)
3분기	❖ HNS 물질정보집 제작(7월) ❖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 개정(9월)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매뉴얼 개정(9월)
4분기	❖ 위험물컨테이너 반입 신고 제도 개선(12월) ❖ 실전형 방제훈련 실시(연중) ❖ 긴급구난, HNS 전문 위탁교육 및 특별세션 운영(연중)

정책	7. 해양오염 긴급방제 민·관 협력 활성화 (연계 과제) ① 국정과제(41번), ② VIP 강조사항	기동 방제
	[성과목표]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네트워크 강화 실적(연 7회 이상)	

□ 추진배경

- 유기적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대응체계 마련으로 피해 최소화
- 민간 방제세력 동원 활성화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해양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민·관 방제 총력대응체계 구축
 - * 「해경청-해양환경공단-방제협회」 협의체 구성, 유기적 협력방안 논의(반기1회)
 - ** 고위험 항만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협의체」 활성화(간담회 훈련 소화약제 확보 등)
 - *** 지역별 해상화학사고 전문가 실무협의체 운영(간담회 연1회 이상, 사고시 자문 활용)
- 민간 협력을 통한 해양오염 긴급방제체계 마련
 - * **해양자율방제대** 교육·훈련 경비 예산 확보, 대응물품 지원 등 운영 활성화
 - ** **방제·구난세력** 적정 방제세력 동원제도 마련 및 설명회 개최
-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국민 해양오염신고 제도 활성화
 - * **제도개선** 해양환경관리법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 ** **기준마련** 긴급방제 및 피해확산 방지 기여도 등 세부 포상금 산정기준 마련

현재(As-is)	<포상금 지급범위>	개선(To-be)	<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자 신고 <포상금 범위추가>	➡	①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자 신고 ② 오염현장 신고로 긴급방제·피해확산 방지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고위험 항만 민·관 공동대응협의체 활성화(3월)
2분기	❖ 「해경청-해양환경공단-방제협회」 협의체 구성·운영(4월) ❖ 민간방제자원 동원 제도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설명회(6월)
3분기	❖ 해양오염신고 제도 활성화(9월)
4분기	❖ 해양자율방제대 교육·훈련 경비 예산 확보, 대응물품 지원(연중) ❖ 지역별 해상화학사고 전문가 실무협의체 운영(연중)

중점	8. 항만 대기오염 등 해양환경 관리 강화	오염 예방
	(연계 과제) ① 비전2033, ② '23년 정책 고도화	
	[성과목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 ('23년) 800척 → ('24년) 1,000척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1건, 시행령 2건, 시행규칙 1건, 항만대기질법 1건 개정 추진

□ 추진배경

- 범정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24.3.) 연계, 항만 대기질 개선 기여
- 선박재활용 협약 발효시('25.6) 선박해체 사업장·작업의 적정 관리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 연료유 점검목표 관리제 추진 등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 확대
 - * '23년 800척 → '24년 1,000척 → '25년 1,200척(연 점검목표 2,400척의 50% 이상)
- 항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하역시설 점검 확대
 - * (기존) 5만톤 이상 계류 → (확대) 모든 하역시설 ※ '23년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확보
 - ** 시멘트, 석탄 등 화물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해상탈락 여부 등

■ 선박재활용 협약 발효 관련, 업무 신설 등 해경 역할 확대 추진

- 선박재활용 협약 발효('25.6월) 대비, 선박해체 업무 해경청 역할 정립
 - * (가칭) 「선박재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용역 모니터링 등 협력 강화(해수부)
- 협약의 국내법 수용시, 신설 법령에 업무반영 등 법제화 대응
 - *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대비 로드맵 수립 및 대응 TF팀 구성·운영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하역시설 비산먼지 집중 점검(1~3월) * 선박 연중 지속
2분기	❖ 선박재활용 협약 발효 대비 로드맵 수립 및 TF 구성·운영(4월~)
연 중	❖ 해수부 협의, 협약에 따른 선박해체 업무 법제화 대응

정책	9. 해양오염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연계 과제) ① 국회 지적사항, ② 비전2033	오염 예방
	[성과목표] 부주의 해양오염 사고율 ('24년) 40% * 선진국 수준 한계치(3년 평균 37%)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3건, 시행규칙 4건 개정 추진(점검업무 개선) 등

□ 추진배경

- 대규모 해양오염, 중대재해 등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장기계류선박 등 고위험 선박·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해양오염 사전예방 중심의 선박·해양시설 점검 시행
 - * '24년 점검목표 3,900회(선박·시설 3,324, 해양환경관리업 72, 무인기 감시 504)
- 해양시설 취약요소 개선* 및 조선소(건조·해체시설) 일제 점검** 추진
 -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 여부 지속 관리('23년 18개소 23건)
 - ** 폐유·폐기물 처리실태 및 비산먼지 저감 등 관계기관(해수청·지자체) 합동 점검
- 지역별 해양오염예방 테마점검* 및 장기계류선박 체계적 관리**
 - * 폐어구 피해 예방 어선점검(폐기물기록부 등) 및 실태조사(어구 적재량, 폐어구 반납량 등)
 - ** 장기계류선박 실태조사·관리카드·위험도평가(연2회) 및 합동점검 등 관리 내실화
- 수출용 패류생산 해역 점검* 강화 및 세정수 불법배출 특별점검**
 - * 패류생산 시기(2~3월, 11~12월), 분뇨 불법배출 중점점검 및 무인기 활용 감시 강화
 - **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화물 세정수 처리기준 및 배출해역 준수 등 위법행위 단속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점검(2~3월), 장기계류선박 실태조사(3~4월)
2분기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4~6월) ❖ 유해액체물질운반선 세정수 불법배출 특별점검(5~6월) * 지방청별 필요시 대체
3분기	❖ 태풍·장마시기 장기계류선박 안전관리(6~8월) ❖ 지역별 부주의 테마점검(어선 등)(7~8월) * 폐어구 실태조사 병행
4분기	❖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이행실태 확인(9~10월), 조선소 일제점검(10월) ❖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점검(11~12월)

정책	10. 국민 친화적 해양환경보전 활동 전개 (연계 과제) ① 비전2033	오염 예방
	[성과목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예방순찰 (3년 평균) 41회 → ('24년) 80회	

□ 추진배경

- 해양환경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과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해양환경보전 활동 추진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인천(1만평), 부안(5천평) 등 염생식물 군락지 부지 조성(2월) 및 파종(3월)
 - ** 교육용 염생식물 표본 제작 초·중학교 지원 및 염생식물 현장 체험
- 유해성 생물 예찰, 재해쓰레기 수거* 지원 및 해양쓰레기 관리 협업** 강화
 - * 적조·괭생이모자반 등 예찰·제거, 집중 호우태풍 내습 기 해양유입 쓰레기 수거 지원
 - ** 바다의날(5.31.) 등 연계, 해경·해수부·해군 합동 도서지역 등 취약해역 정화활동 추진
- 자원순환 활성화* 및 ESG 경영 기업과 연계한 해양환경보전 사업** 추진
 - * "우생순 프로젝트" 활성화(공단 - 수거 확대·새활용 제품개발 / 수협 - 수매비 증액 등)
 - ** 산해진미 플로깅(SK이노베이션 등), 해양환경보전 콘텐츠 공모전(포스코이앤씨) 등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참여 확대* 및 수협 해양오염 예방교육** 정례화
 - * 사전 희망자 조사를 통한 항·포구 합동 감시·모니터링 및 정책간담회 개최
 - ** 수협중앙회 협력, 전국 수협 유류 취급 직원 대상 해양오염 예방 교육(연 2회)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3월)
2분기	❖ '바다의 날' 해양환경보전 활동(5월) ❖ 해양경찰청 적조 대응 지원계획 수립(6월)
3분기	❖ 제6회 해양환경보전 콘텐츠 공모전(8월), '국제연안정화의 날' 해양환경보전 활동(9월) ❖ 청소년 대상 염생식물 체험 교육 운영(9월)
4분기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 성과 분석(12월)
연 중	❖ 염생식물 군락 조성사업, 산해진미 플로깅 캠페인, 우생순 프로젝트 추진

정책	11. 미래 지향적 해양오염 예방업무 발전 기반 마련 (연계 과제) ① 비전2033	오염 예방
	[성과목표] 해양환경감시원 교육 운영 ('23년) 2회 → ('24년) 3회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1건 및 시행령 1건 개정 추진(업무개선)

□ 추진배경

-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전문성 향상 및 환경·안전에 대한 포괄적 개념의 미래 지향적 예방정책 발굴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미래형 교육 플랫폼* 적용 등 해양환경감시원 역량 강화
 - * 선박 구조설비 XR 콘텐츠 고도화(지도점검방법 추가 등) 및 감정사 자격 취득 지원
- 해양환경감시원 운영 내실화
 - * 방제정 승선 감시원 해상계류선박 점검 확대 및 지방청 광역 감시활동 방안 마련
- 미래 지향적 정책 수립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소통 강화
 - * 관련 학회 특별세션 구성·운영 및 「제2회 예방업무 미래발전 컨퍼런스」 개최
- 해양오염감시 무인비행기 대체 도입* 및 운영 방안** 개선
 - * 고정익 드론(14대) 연차별 노후 대체·확대(60대), 기종 변경 편의성·활용도 개선
 - ** 기체성능 정기점검 추진 및 학습단 운영을 통해 운용술 배양·정보공유
-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제도 규제 완화* 및 관리 기반 마련**
 - * 정책포럼을 통한 관심도 제고로 신속한 법률 개정 추진 및 관련 하위법령 정비
 - ** 유통제품 모니터링 제도(주기와 방법, 시험항목 등) 도입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XR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고도화(3월), 해양환경감시원 유출량 산정 교육(3월)
2분기	❖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발표회 특별세션 구성·운영(4월)
3분기	❖ 선박 오염방지설비 관리 및 실습 위탁교육(9월) ❖ 유통제품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9월)
4분기	❖ 제2회 해양오염 예방업무 미래발전 컨퍼런스 개최(11월) ❖ 유출량산정 사례 분석·평가 공유회의(12월)
연 중	❖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규제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정비

장비기술국

중점 추진	1. 선박펀드를 활용한 함정건조 기반 구축 (연계 과제) ① 23년 국회지적 (예산정책처, 예결위)	장비 기획
	[성과목표] 선박펀드를 활용, 함정(10척) 건조 계약체결	

[예산] '24년 노후 100톤급 경비정(10척) 대체건조비 97.4억원

* 사업기간 : 10년 ('24~'33년 (건조:4년 ('24~'27년)) / 총사업비 : 2,059억원

□ 추진 배경

- 선박펀드 예산반영에 따른 원활한 계약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10년도 해경 선박펀드사업을 마지막으로 13년간 관공선 선박펀드 신규 추진 全無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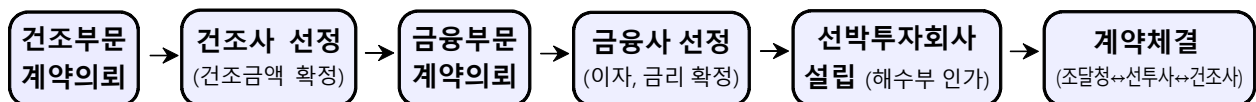
- (사업설명회) 금융사, 건조사 등 입찰참가 업체 대상 선박펀드사업 설명회를 개최, 계약조건·사업자 선정방법 등 개선사항 의견수렴
- (선정기준 정비) '06년도 수립된 선박펀드 사업자 선정·평가 기준을 현 금융시장 여건, 사업설명회 결과 등에 따라 평가내용 보완

'06년~10년 선박펀드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30점) + 기술능력 (70점))
→ 기술능력평가 주요항목 : 선박펀드 발행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자기자본 보유액 등

- (쟁점사항 사전협의) 선박펀드사업 추진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쟁점사항 등을 관계기관(조달청, 해수부 등)간 사전 검토, 협의

* 조달청(사업자 선정부문), 해수부(선박투자회사 인가부문) 등 관계부처와 검토회의 개최

< 선박펀드 계약절차 >



- (후속예산 반영) 선박펀드를 통한 함정건조 대상사업 검토, 예산확보 대응

* 노후 도래되는 50톤급 경비정(82척) 등 선박펀드 추진사업 발굴, 예산확보 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2분기	❖ 선박펀드 사업설명회(2월), 평가방법·기준 보완(3월), 사업계획 수립(4월)
3~4분기	❖ 선박펀드 사업자선정, 계약체결(7월),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대응(~10월)

중점 추진	2. 국민중심 함정건조 계약방식(협상계약) 정착	장비 기획
	(연계 과제) ① 23년 국감 지적(최저가 낙찰 개선방안 강구) [성과목표] 협상계약을 통한 건조업체 경영환경 개선, 건조품질 향상 도모	

[예산] '24년 함정건조 예산 1,977억원 (신규사업 118억, 진행사업 1,859억)

□ 추진 배경

- '23년 추진된 함정계약 방식 개선(최저가 낙찰→협상계약)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선 요구내용을 보완, 정착화 추진 필요

* **협상계약추진경과** 전문기관 용역(6월) → 공청회·사업설명회(6월) → 유관기관 협의(7~8월) → 제안서 평가기준 마련(9월) → 3000톤 등 7개사업(25척) 협상계약 적용, 계약의뢰(10월)

□ 주요 내용

- **(현장 의견분석)** '23년도「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여한 입찰업체 대상 평가 보완사항 의견수렴 및 타기관 사례 등 개선의견 수집, 검토
- **(평가기준 개선)** '24년 협상계약 사업현황 및 평가기준 개선(안) 관련 설명회 개최, 최종 의견수렴후 평가기준 개선안 마련
- **(전문인력풀 보강)** 방위사업청 등 협상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조선분야 民·官 전문가를 추가 중원, 평가관련 전문인력풀 재편성
 - * 23년도 33개 기관(52명) 민·관 전문가로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인력풀 구성
- **(계약 추진)** 개선된 협상계약 평가내용을 반영, 신규사업 발주 추진

< '24년 신규계약 함정건조사업 현황 >

구분	계	경비함정	특수정	기 타
계	24척	11척	2척	11척
사업명		3000톤 1척 100톤 10척 (대체)	연안구조정 2척 (대체)	고속단정 7대 (대체) 유류바지 3척 (대체 1척) 부 선 거 1척 (대체)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2분기	❖ 협상계약 개선 의견수렴 (2월) / 협상계약 평가, 개선안 마련 (5월) / 설명회 개최 (6월)
3분기	❖ 협상계약 함정건조 계획수립(7월), 건조계약 체결(9월)

중점추진	3. 미래형 경비체계 장비기반 마련	장비기획
	(연계 과제) ① 연관되는 중기과제 (미래형 경비체계(2040) 구축) [성과목표] 주변국 세력에 적극 대응·견제할 수 있는 작전성능 구축	

□ 추진 배경

- 「미래형 경비체계(2040)」 수립 관련 장비분야 연계방안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 **(경비자산 확충)** 중·대형함 37척 및 항공기 20대 확충 및 드론모함 1척

함정	6000톤급(+2)	3000톤급(+14)	500톤급(+21)
	국가안보함(2)	서해전력(9), 동해북방(3), 제주동부(2)	독도전담(3), 단속전담(18)
항공	고정익 항공기(+9)		회전익 항공기(+11)
	터보프롭(9)		헬기(11)

- **(노후대체)** 중대형함 톤수 일원화, 소형정은 임무변화에 맞추어 대체건조
 - 대형함 : 피항기준 차이 해소, 헬기격납을 위해 3000톤급으로 일원화
 - 중형함 : 내해구역 확대 대비 내파성을 갖춘 500톤급으로 일원화
 - 소형정 : 100톤급→200톤급, P정(95톤)→차세대 P정(50톤급, 속력, 자동화 보강) 대체
- **(장비보강)** 조사장비 탑재, 장비 표준화·첨단화, 감시·무장강화 등
 - MDA활용을 위한 스마트 통합지휘체계 등 장비 도입
 - 적외선 전방위감시장비, EOTS, 안티드론, 근접방어 무기체계, 76mm 함포 등 탑재
 - ※ 톤급별 감시·방어체계 및 무장강화를 위한 경비과 연구용역 예정
- **(인터넷 기반 함정 운용)** 승조원 위치추적, 원격정비 시스템 등 구축
 - 스마트 함정 플랫폼 : 스마트 위치로 승조원 위치정보 확보로 함이탈 감지, 순찰 자동화 등 안전관리 및 행정업무 자동화 구현
 - 원격정비시스템 : 증강현실 기술로 정비지원 및 장비 실시간 감시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2분기	❖ 차세대 P정, 고속단정 개념설계 계획 수립, 감시장비 개발 현황 및 시장 조사
3~4분기	❖ 무기체계 강화를 위한 기술자료 조사·검토
연 중	❖ 함규격, 탑재장비 등에 대해 기능과 협의 및 결정

중점 추진	4. 연구개발(R&D) 전담기구 신설	장비 기획
	(연계 과제) ① 국회 지적사항(예산결산), ② 비전2033 [성과목표] ('23년) 자율기구(임시정원) → ('24년) 전담기구 신설	

□ 연구개발 전담기구 추진

- **(총괄 기능)** 現 R&D 업무를 과 단위로 확대, 해경청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수립, 사업기획 및 관리, 성과물 활용 등 연구개발 총괄기능 수행
- **(필요성)** 해경청 R&D예산 규모증가(연평균 55% 성장) 및 연구개발 사업 총괄·조정과 중장기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 관리 필요
 - ※ 재난대응 임무를 전담하는 업무 특성상 장비 의존율이 높아 맞춤형 첨단 장비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R&D예산 규모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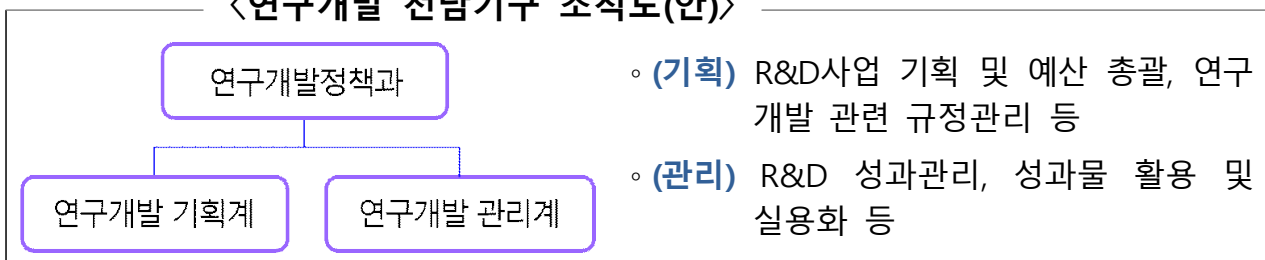
〈전담기구 필요성에 대한 대외적 지적사항〉

- ✓ 관련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사업 업무는 정규조직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23년 국회 예정처**)
- ✓ 해양경찰의 R&D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부 내 R&D업무 전담부서 마련 필요 (**'19년 국회 농해수위**)

- **(기구 신설)** 미래전략기술 지속발굴 및 신규사업 확대 등 전문성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해 전담기구 추진

* 종합적 관점에서 중장기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기획 등 R&D 관리

〈연구개발 전담기구 조직도(안)〉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2분기	❖ '25년 정기직제/소요정원 요구(행안부 제출 및 대응)
3~4분기	❖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12월)

정책	5.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	장비 기획
	(연계 과제) ① 비전2033, ② '23년 정책 고도화	
[성과목표] R&D 예산확보 ('24년) 412억원 → ('25년) 494억원(20% 증액)		

□ 정부 R&D 혁신방안과 연계한 예산 대응

- **(예산확보)** 정부 R&D예산 기본방향과 연계한 신규사업 중심 전략적 예산 편성 및 심의대응으로 '25년도 494억원 확보 추진
 - 정부의 혁신적 R&D*와 국가임무수행 필수 R&D**의 투자방향과 접목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자체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전략적 대응
 - * 혁신적 R&D :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7대 핵심분야
 - ** 국가임무수행 필수 R&D : 국방안보(무기체계), 재난·안전, 수소기술, 사업화 등

□ 현장임무 중심의 기술개발 중점 투자

- **(현장 맞춤형)** 임무현장에서 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실용화 장비개발
 - * 해양경찰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오션랩 2.0)('24~'28, 189억원)
- **(임무 중심)** 미래경비체계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해상에서 무선신호를 탐지하여 불법어선 등 선박식별이 가능하도록 경비임무 개선 기술개발
 - * 무선신호 탐지기술을 통한 선박식별 기술체계 개발('24~'28, 250억원)

□ 중장기 전략과 현장 수요를 연계한 신규 R&D사업 발굴·기획

- **(신규제안 발굴)** 현장 및 기능별 수요조사를 통해 「미래비전 2033」과 연계된 중장기 수요기술 중심의 '26년 신규사업제안 발굴·기획
 - * 선정된 제안과제 대상 기획연구용역 수행(5건 내외)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중기('24~'28)사업계획 수립 및 중기심의 대응 전략회의(1월) ❖ R&D 중기예산 기재부 심의 대응(1~3월) ❖ '25년 기획 신규 R&D사업 전략적 대응을 위한 사전컨설팅(2~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기획 신규 R&D사업 기술 분야별 산·학·연 연구현장 방문(3~4월) ❖ '25년 단년도 R&D 예산요구서 작성(4월) 및 과기부 예산심의 대응(5~6월) ❖ 과기부 주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대상 사업설명(5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R&D 예산안 기재부 심의대응(7~8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도 R&D예산 정부안 국회 심의대응(9~12월)

중점 추진	6. “통합장비관리시스템(장비나라) 재구축” ISP 추진 (연계 과제) 기 타	장비 관리
	[과제목표] 표준화 DB 체계 구축, 시스템 연동, '25년 시스템 구축 예산반영	

□ 추진 배경

- '12년 이후 고도화 작업 없이 비표준화된 DB 마스터 코드를 사용, 해경청에서 관리하는 他 시스템과의 연계가 불가능하며, 시스템 기능 문제 지속 발생
 - * 동일한 내용을 이중 입력하는 행정력 낭비 및 분산된 업무처리
- 현장에서 시스템 사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요청하고 있으나, 시스템 노후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 불가

□ 주요 내용

- (코드체계 표준화) 他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성 코드 체계 표준화 적용 및 구성항목(장비·부속품 등) 표준 분류체계 정립
 - 해양경찰정비창(부산 및 서부) 등 사용처별 시스템과 연계방안 마련으로 물품수급 및 수리처리 등 합정 운용을 위한 전반적 관리방안 마련
 - * 서부정비창 신설 추진단에서 진행중인 “모바일 정비지원 시스템”과 연계 가능성 확인 및 테스트 진행을 위한 필요사항 확인
- (시스템 설계)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해군·소방청 등 유관기관에서 사용중인 장비 및 물품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정보확보
 - * 해군 (DELLIS - 군수통합정보관리체계), 소방청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
- (재구축 예산 확보) 구축비(약 30억원 추정) 확보추진, 기재부 지속 대응
 - ISP 산출물 제출(기재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4.5월), '25년~'27년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필요성 관련기관 방문 설명.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2분기	❖ 정보화전략체계 구축 계약의뢰 및 수행사 선정 (1월), 유관기관 시스템 확인 및 현장 의견조사, 제안요청서 작성(2~4월)
2~4분기	❖ '25년 시스템 구축 예산 대응 및 시스템 구축 자료획득(지속) (~ 4분기)

중점 추진	7. 현장에 보급한 정수(定數)물품 품질 개선 (연계 과제) 기 타	장비관리
	[과제목표] 현장 의견 적극 반영, 고품질·고사양 물품으로 기능 및 품질 제고	

□ 추진 배경

- 그간 정수물품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보급한 로프류, 선체정비품 등은 양적 확장을 넘어 고품질·고사양 물품 보급으로 질적 향상 추진 필요
- 경비함정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특성 등 고려, 출동 중에도 전용 온라인몰에서 구매가능 하도록 등재물품 다양화 및 고품질화

□ 주요 내용

- (만족도 분석) 최근 5년간 현장 임무수행을 위해 보급한 정수(定數) 물품별 품질 만족도, 정수량 등을 포함한 현장직원 만족도조사 실시
 - 함정운용품·선체정비품·개인안전품 등으로 정수물품 분류 후 현장 만족도조사, 만족도가 낮은 보급물품 선별 후 우선적 기능개선 추진
- (개선물품 선정) 만족도가 낮은 물품, '23년 현장점검시 소요 제기 물품, 정수로 정한 비품·소모품 등 다각적 검토
 - 함정운용 로프류(계류색, 예인색), 페인트 및 방청도료, 선체 정비용 특수 장비(청락기, 에어햄머), 안전물품(절연장갑, 신호탄) 선정, 기능·품질 개선



로프류



청락기



절연장갑



신호탄



K급소화기

- (구매방식 개선) 전용 온라인몰 內 구매 가능하도록 개선물품 등재, 출동 중에도 언제든지 모바일로 구매·결제 가능하도록 편의성 강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보급물품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분석(2~3월)
2분기	❖ 대상물품 선정, 기능·품질 개선(4월~)
3분기	❖ 물질 개선물품 현장 테스트 실시, 최종의견 수렴(7월~)
4분기	❖ 물품사양 등 최종 확정, 보급계획 수립(12월)

중점 추진	8. 현장 우수장비보급(2단계) 개선 추진 (연계 과제) 기 타	장비관리
	[성과목표] 현장 참여형 오션랩 방식을 통한 장비 개발 및 보급률 향상	

□ 추진 배경 “군경 우수장비 도입” VIP 지시(‘22.5.) 관련 고품질 장비 보급

○ (추진경과) ‘23년 1단계 : 고품질 개인 임무수행 기본 장비 보급

1단계(‘22~23년)	⇒	2단계(‘24~25년)	⇒	3단계(‘26년~)
▶ 고품질 개인보급장비 개선		▶ 임무장비개선 및 노후교체		▶ 상용화(상시보급) 체계 구축

※ ‘23년 현장보급 : 경기동화(艦派), 안전장갑, 하계근무모 등 9종, 29,000점(15억)

□ 주요 내용(2단계)

○ (장비개선) 1단계 미완결 개인장비(안전확보) 및 현장 임무수행(긴급 대응) 효율적인 장비를 현장직원 참여형 R&D(오션랩2)로 장비개선

* 장비개발 리빙랩 : 우리청 ‘오션랩’, 경찰청 ‘폴리스랩’, 소방청 ‘119랩’ 추진 중

※ ‘21~’23년 오션랩 1.0 사업(해상진압복, 방검부력조끼 등)을 추진, 현재 ‘24년 오션랩 2.0(189억, 5년간) 사업 과제 추진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 (노후교체) 외근조끼(‘21년 개발) 등 기존장비 불편사항 및 노후도 심한 장비에 대해 우수업체* 참여를 통해 조기 교체 보급 추진

* 대기업, 우수 사회적 업체(중증, 여성, 보훈 등), 특허 등 전문기술 보유 업체

□ ‘24년 검토품목

○ 추가 개선 필요한 개인 임무장비 현장 의견취합(~‘23.12월말) 중이며 ‘24년 R&D(오션랩2.0) 연계, 고품질(기능) 임무장비 개발 및 상용화 추진

현재까지 임무장비 개선요청 사항

품명	진압헬멧	외근조끼	부력우의	방호장갑	방검자켓	웨어러블슈트	포박장치
사진							
기능	▶ 통신기 매립	▶ 업그레이드	▶ 부력기능	▶ 손가락보호	▶ 베임방지	▶ 중량물운반	▶ 원거리포박, 전기충격 등
추진 방법	오션랩2.0	연구센터 자체 과제(R&D)				경찰청 공동개발	국유특허* R&D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오션랩 제품 상용화 및 개선 요구 현장의견 수렴 및 분석(1~2월)
2분기	❖ 분석결과에 따른 벤치마킹 또는 R&D 및 시범운영(3~5월)
3~4분기	❖ 개선 장비 구매 계약 추진 및 보급(6~10월)

중점 추진	9. 정보화 사업·예산 통합관리체계 강화 (연계 과제) 정보화 사업 관리체계 강화(23년 추진 중인 과제)	정보통신
	[성과목표] 통합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확대(15종→18종)	

□ 추진 배경

- 내실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화 예산확보 절차, 전자정부 성과평가 대응 등 정보화 관리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방안 마련

□ 이행계획

- 해양경찰 비전 2033 중심의 정보화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우선순위 선정 등 세부 절차 기준 마련 및 이행
 - 정보화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 선정기준표에 따라 정보화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정성·객관성 확보

구 분	지금까지(AS-IS)	앞으로(TO-BE)
정보화 정 책	▶ 해양경찰 비전 2033 일부 반영	▶ 해양경찰 비전 2033 연계 구체화 ▶ 국정과제 및 최신 ICT 동향 등을 반영한 정보화 중장기 마스터플랜 재수립(5년)
정보화 예산·사업	▶ 우선순위 선정, 중복·적정성 및 타당성 검증 절차·기준 미비 ▶ 일회성·단편적 예산편성· 사업추진	▶ 정보화 심의위원회 등 절차·기준 마련 * 중복·적정성·타당성 등 검증 절차 추진 ▶ ①정보화 사업 사전컨설팅 → ②전문가 자문 위원회 → ③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보화 예산의 우선순위·적정성 등 검토 후 정보화 사업 예산 확보 추진

- 「정보화사업 관리규칙」에 따라 정보화 사업 관리와 예산 편성 업무를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실무 매뉴얼*」을 작성·배포

* 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사전검토~성과관리) 및 정보화 예산편성 대응 매뉴얼

- 해경청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자정부 성과평가 대응 내실화
 - 자체 시스템 성과평가 세부 관리지침 마련을 통한 현행 정보시스템 활용 및 관리실태 점검·개선 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정보화 심의위원회(4월)
2분기	❖ 정보화 예산편성 대응 매뉴얼 작성 배포(3월) ❖ 정보시스템 성과평가 세부 관리지침 마련(5월)

중점 추진	10.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도청 체계 강화 (연계 과제) 24년 예산 국회 요구사항(상임위, 예결위)	정보통신
	[성과목표] 민감정보 취급부서 대도청 탐지활동 실시(본청·지방청 월 1회, 경찰서 분기 1회)	

[예산] 문서 암호화 라이선스 100백만원 / 대도청 탐지장비 예산 확보 중

□ 추진 배경

- (언론보도) 민감정보 취급부서 도청 위험 노출 관련 보도
 - * 세계일보('23.10.18) "해경의 '24년 대도청 예산 부족으로 대비 부실 우려"
- (대도청 현황) 주요사무실(51개소) 상시 도청탐지 장비 운영 중
 - * 민감정보 취급부서(52개소), 회의실 및 사무실(19개소) 미설치
- (문서유출) 미국 국방부 기밀 유출 등 인적요인에 의한 정보유출이 증가하고 있어 내부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 필요

□ 주요 내용

- (예산확보) 상시 도청탐지 장비 도입 예산(3년 11.4억) 확보 추진

구분	계	민감정보 취급부서	회의실	국장급
계	71	52	17	2
본청	4	2(형사,외사)	-	2(구조,방제)
소속기관	67	50(수사,정보외사)	16(경찰서) 1(정비창)	-

* 예산 조기 확보시 '24년 상시 도청탐지 장비 도입 추진

- (탐지강화) 이동형 탐지장비를 활용 미설치 장소 대도청 탐지활동 강화
 - * 본청·지방청 월 1회, 경찰서 분기 1회 대도청 탐지활동 실시
- (문서보안) 업무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문서 암호화 솔루션 도입(1억)
 - * PC저장 문서 암호화로 정보유출 방지('24년 시범운영 ⇒ '27년 쏘 기관 도입)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분기	❖ 문서 암호화 솔루션 시범도입 및 운영(6월)
매월·분기	❖ 민감정보 취급부서 대도청 탐지활동 실시(본청·지방청 월 1회, 경찰서 분기 1회)
수시	❖ 상시도청 탐지장비 예산 확보 추진

중점 추진	11. KOSNET 위성통신망 성능개선 및 보안체계 확립 (연계 과제) ① '23년 국감 지적사항, ② 5개년 중기과제	정보 통신
	[성과목표] 주요장비 노후율 ('23년) 11% → ('24년) 0%, 보안장비·전송암호화 적용	

[예산] 위성통신망 성능개선 23억 / (성능개선) '20 ~ '24년 연차별 추진 중

□ 추진 배경

- 항공기 위성통신망 구축, 함정 척수 증가, 미래형 해양경비·재난대응 체계(MDA) 구축으로 위성통신망 수요 지속 증가, 전송효율 향상 필요
 - * 함정 118척 / 대역폭 125MHz 운용 / 재난망, ENG영상, 업무포털 등 40여 시스템 지원
- '23년 추가 주파수(5M) 및 재배치(연속)와 연계, 주파수 운용 효율 극대화

□ 세부 계획

- (대역폭 추가 확보) 항공기 등 위성통신 수요 증가 감안, 위성사업자 (KTsat) 및 타 이용사와 협의(위성 이전 등), 대역폭 추가 확보 추진(~5MHz)
 - * 항공기 대당 소요 대역폭 : 5MHz, 1대 구축 중(~'24년 완료, 총 4대 구축 예정)
- (복합통신망 도입) 육상의 5G·LTE망과 위성 통신망을 결합, 두 망간 속도 병합, 고속전송 (근거리) 가능한 Hybrid형 통신망 구현(100톤급)

 - * (근거리) 5G/LTE + 위성 동시 사용 / (원거리) 위성 단독 ⇨ 육상·위성망 자동 전환
- (신규장비 도입) 함정 위성안테나·모뎀, 라인카드 등 노후장비를 고성능의 신규 장비로 교체, 주파수 운용 효율 등 성능 향상
 - * (주요노후) 안테나 8.6%(10대) / 모뎀 16.9%(20대) → 전량 교체(노후율 Zero化)
- (보안체계강화) 위성통신망 통합위협관리(UTM) 시스템, 국정원 보안장비, 암호화 모듈 도입 등 보안 기능 강화(다중 보안체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성능개선 개소 파악 및 사업계획 수립(1~3월) / 신규장비 성능시험(BMT) (2월)
2~4분기	❖ 조달 계약 및 사업 진행(6월~11월)
4분기	❖ 준공검사 및 사업 종료(12월)

국제해상조난안전시스템 철탑, 안테나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환경변화(도심화, 관광지 조성)로 송수신을 저하 등 전파환경 악화로 개선 필요

□ 이행계획

- (예산 편성) 「GMDSS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現 시스템·시설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예산** 확보 노력
- 도출된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예산 편성의 주요 논리로 활용
- * (기간/수행/금액) '23. 3. 24.~11. 19. /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7,840만원
- ** (소요예산) 총 사업비 149억 소요 (실시설계 12.4억 / 개선사업 공사비 136.8억)

《 GMDSS 개선사업 소요예산 》

구 분(단위: 백만원)	'25년	'26년	'27년	'28년	계
실시설계	1,246	-	-	-	1,246
이전(3개소) 및 시설개선(9개소) / 통신장비 교체	-	3,636	5,411	3,962	13,009
VHF-DSC 신규 구축(17개소)	-	-	-	680	680
합 계	1,246	3,636	5,411	4,642	14,935

- (이전부지 확보) 전파환경 불량으로 이전이 필요한 수신소* 부지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부지 소유 기관 등)과의 협업(업무협의, 문서화 등) 추진
- * (3개소) 인천 → 도심화 / 부산 → 주변 장애물 / 목포 → 내륙·인근 관광지 조성



〈GMDSS 개선사업 주요 내용〉

- ✓(부지 이전 구축) 이전이 필요한 수신소(3개소)에 대한 이전 신설 구축 추진
- ✓(안테나·철탑 보강 및 교체) 송수신소(9개소) 기반시설 보강·교체를 통한 전파환경 개선
- ✓(통신장비 교체) 노후된 통신·장비, 서버(8년 이상) 등 전면교체를 통한 시스템 고도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GMDSS 개선 사업 기본 계획 수립 및 이전 부지 관계기관 업무협의 실시
연중	❖ GMDSS 개선 사업 관련 실시설계용역 예산 확보 노력

직속부서

정책	1. 청년 중심(MZ세대)의 국민기자단 구성·운영 (연계과제) '23년 정책 고도화	대변인
	[성과목표] 현장취재 국민기자단 기사 확대 ('23년) 27건 ⇨ ('24년) 40건(50%↑)	

□ 추진 배경

- 정부는 '청년'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 '청년들의 국정참여 기회 확산' 방향에 맞춰 우리청 정책에 청년이 참여·홍보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국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해양안전수칙, 현장의 특색있는 기사 등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해양경찰 맞춤형 온라인 기사 생산 추진

□ 주요 내용

- **(대학협업)** 해양경찰학과 개설 대학*(11개)과의 디지털 홍보 협업을 통한 청년기자단 구성·운영으로 해양경찰 정책에 대한 청년 참여 유도
*한국해대, 목포해대, 가톨릭관동대, 경상대, 부경대, 전남대, 제주대 등 11개 대학 대상
- **(참여향상)** 지방청별 구성인력 정예화(15명내외→ 20명내외) 및 본청 대변인실과 합동관리 방안 마련(합동워크숍, 이벤트, 교육 등) 참여율 제고
- **(현장기사 확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기사 제작을 위한 경비함정·파출소 견학, 연안정화(비치 플로깅) 등 현장취재 기회 제공 대폭 확대
- **(기획기사 도입)** 시기·테마별 해양경찰 주요 정책 관련 기사소재를 제공하여 해양경찰 언론 홍보와 연계한 바이럴 홍보(시너지 효과) 유도

〈국민기자단 제작 기사 사례〉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2024년 국민기자단 모집 공고 및 위촉
수 시	❖ 해양경찰 정책홍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블로그, 카드뉴스, 영상 등) 제작

정책	2. 해양경찰 주요정책 국민 친화 홍보 강화 (연계과제) '23년 정책 고도화	대변인
	[성과목표] ① 해양경찰 악대 공연 ('23년) 52회 ⇨ ('24년) 64회 이상 공연(20%↑) ② '24년 해양경찰 악대 운영규칙(훈령) 제정 * 임무,기능,요건,복무,행사기준 등	

□ 추진 배경

- 타 부처(국방부, 중앙소방학교 등) 대비 해양경찰 악대의 구체적 운영 근거 미흡(임무,기능,근무요건,복무방법 등)으로 관리·운영 애로 발생
- ❶악대 운영 근거 강화와 내실화를 위한 규칙(훈령) 제정과 ❷정기·자체·국민 공연 및 해양안전 캠페인을 통한 해경악대 경쟁력 제고

□ 주요 내용

- **(규칙제정)** 악대의 임무와 기능, 자격요건 및 복무사항, 행사 지원기준 정립 등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해양경찰 악대 운영규칙(훈령) 제정」
* 악기구성 및 용어적 정의를 고려 '관현악단' → '해양경찰악대'로 명칭 개정
- **(캠페인강화)** 日 평균 2,000명이상 방문하는 주요 밀집장소(한국잡월드, 센트럴파크, 인천아트센터 등)에 정기공연(월 1회이상) 병행 안전캠페인 실시
 - **[안전교육]** 학생층 대상 해양 안전수칙 및 환경보호 필요성 교육(영상 등 활용)
 - **[설문조사]** 안전 퀴즈와 느낀점 등 설문조사(구글폼 활용), 홍보실적 데이터화
- **(자체공연)** 해경악대 창설 2년차, 본청과 소속기관 힐링타임 및 지역 행사·국제의전에 악대 공연을 선사, 사기진작과 조직 화합의 장 마련
- **(국민공연)** 해양문화축제(장보고축제 등),인천시립교향악단 협연 등 국민 생활 속 공연을 통한 축제 분위기 고조와 해양경찰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24년 해양경찰 악대 운영규칙(훈령) 제정
연 중	❖ '24년 찾아가는 해양경찰 악단 운영' 및 공연(캠페인,자체공연,국민공연) 추진

중점 추진	3. 상황분석을 위한 상황 관련 통계 고도화 (연계과제) 국정과제 65번	종합상황실
	[성과목표] 정확한 통계 산출을 통해 상황실 조직 및 업무 진단 기반 마련	

□ 추진 배경

- **(조직진단)** 상황실 주요보직 직급상향, 全 상황실 4교대 정원확보, 업무확대 등 조직발전을 위해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진단 필요
 - * 상황유형별, 소속기관 상황실별 정확한 신고접수·처리 통계 산출
- **(통계 자동화)** 現 상황접수 시 상황요원이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상황유형 카테고리 지정하는 실정으로 인적오류 불가피
 - * 인적오류 최소화를 위해 상황종료 후 자동으로 통계 산출되는 시스템 도입 필요

□ 주요 내용

- **(시스템 개선)** 세분화된 現 시스템의 상황유형 카테고리를 활용성 고려하여 통합하고 상황종료 시 필히 통계검토가 이행되도록 개선
 - * 현재 사용 중인 통합상황관리시스템 상황접수 UI 편의개선 지속 실시
- **(주기적 통계관리)** 상황처리의 긴급성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월별 통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
 - * 상황접수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상황유형을 기타 또는 훈련으로 지정하는 등 오류 다수
- **(프로세스 개선)** 전자게시판* 기능 활용을 통해 각종 통계자료 입력, 관리 등을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업무 감소 및 통계 신뢰도 향상
 - *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각종 통계를 상황관리시스템 내 입력, 현황 관리 등 활용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상황통계시스템 고도화 세부계획 수립(2월)
2·3분기	❖ 신규시스템 도입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 및 관계기관 대응 (5월~) ❖ 종결 전 팝업창 등 시스템 기능 개선(8월)
매월	❖ 월별 통계 점검의 날 운영

중점 추진	4. 안정적 · 효율적 상황시스템 구축 (연계과제) 국정과제 65번	종합상황실
	[성과목표] 안정적 상황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체계적 상황대응 체계 구축	

□ 추진 배경

- 안정적 상황관리 체계 유지 및 신규 시스템 개발을 통한 효율성 향상

□ 주요 내용

< 시스템·장비 최신화 등을 통한 안정적 상황관리 인프라 구축 >

- **(노후개선)** 10년 이상 상황실(포항·서귀포) 대상 노후 영상장비 등 최신화,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후 PC 단계별 교체(보령·완도·제주)
※ 상황실 노후 개선(2개소, 포항·서귀포서) 10.2억 및 노후 PC 교체 50백만원 상황관리시스템 등 운영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단계적 추진
- **(정기적 시스템 개선)** 반기별 지도점검 시 상황실 운영 시스템 개선 및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후 개선계획 등 수립 후 시달

< 장애대처 및 고도화 연구 등 효율적 상황관리 프로세스 정착 >

- **(장애대처)** 행정망 장애 등 시스템 운용을 저해하는 중대 장애 발생 대비 문자망·사고등록 등 최소 기능만을 갖춘 대체 시스템 개발 추진
* 서버·DB 등 최소 자원만 본청 구축으로 장애가 발생해도 상황대응 가능한 체계 마련
- **(고도화연구)** 재난환경 변화와 해경 역할 확대, AI 활용 등 효율적 업무 프로세스 등을 반영한 시스템 재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소방은 지능화 기반 119플랫폼 구축 등 차세대 119시스템(약 2,000억 규모)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등 시스템 고도화 추진 중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3분기	❖ 전자게시판, 대체시스템 개발 추진(1월)
3·4분기	❖ 상황실 운영 시스템 고도화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7월)
4분기	❖ 포항·서귀포서 상황실 노후개선 공사 완료(11월)
계속	❖ 포항·서귀포서 상황실 노후개선 사업 진행사항 점검

정책	5. 상황분석을 통한 사전 대비체계 구축 (연계과제) VIP 강조사항	종합상황실
	[성과목표] 기상 및 빅데이터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고 예방	

□ 추진 배경

- (사전예방) 상황 발생 이후 대응 외 예방의 중요도 부각, 기상정보 및 상황 분석 등을 통해 예방 및 선제적 대비 체계 마련

□ 주요 내용

< 시기별 · 상황별 주요 기상정보 분석 · 지원 >

- (시기별 분석) 농무기·태풍내습기 등 해양 안전을 위해하는 기상 현상 발생 시기에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통한 예방적 상황대응
※ 꽃게 등 불법외국어선 조업 어종에 따른 시기별 출현 예측, 상황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양기상정보 시스템 발굴 후 내부망과 연계
- (상황별 분석) 각종 상황 발생 시 수색·구조 및 잠수가능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상정보를 분석하여 제공

< 빅데이터 등 자료 활용 선제적 대비 >

- (자료 활용) 위성영상, 빅데이터 등 자료를 상황회의 등에서 활용하여 상황대비 중점사항 도출, 향후 MDA, 클라우드 VTS 연계 구상
- (사전 예방) 중대사고 발생 추이 등을 바탕으로 시기·선종별 중점사항 마련, '가을철 낚시어선 사고 예방기간'과 같은 계절별 중점 테마 선정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빅데이터 자료 활용 방안(사건 종류, 시기별 등) 계획 및 계절별 중점 테마선정 (3월)
2분기	❖ 농무기 해무 예측정보 상시 제공 (4~7월), 상반기 상황 분석결과 도출(6월)
3분기	❖ 태풍 내습기 대비 해양 분석 정보 제공 (7~9월)
4분기	❖ 기상 전문가 추가 채용 및 배치 검토(11월), 하반기 상황 분석결과 도출(12월)
상 시	❖ 유용한 해양기상정보 시스템 발굴 및 도입 추진 ❖ 시기, 선종별 중점대책 마련, 각 계절(시기)별 중점 테마 선정

정책	6. 현장 중심의 상황처리 체계 정착 (연계과제) VIP 강조사항	종합상황실
	[성과목표] 조직, 규정 등 체계를 개선하여 현장 상황대응 효율성 증진	

□ 추진 배경

- (新 모델 구상) 본청 종합상황실장 직급 상향(총경→경무관)에 따른 본청 및 소속기관(지방청·경찰서) 상황실 역량 강화방안 구상 필요

□ 주요 내용

< 본청의 현장 지원기능 강화방안 >

- (기능확대) 유관기관 교류 협력등 업무 강화사항 발굴, 경비, 수색, 통신과 등의 일부 업무와 인력 등의 조정 방안 마련 등
- (상황분석 활성화) 본청 상황분석 전담인력을 구성, 상황처리 개선·미흡사항을 도출·공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사항 마련
 - ※ ❶ 지방청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 개선점 마련, '연도별 상황분석 자료집' 출간
 - ❷ 기상분석 강화를 위한 시기별 주요 기상정보 분석·제공, 시스템 연계 등

< 지방청 강화방안 >

- (소속기관 조직) 지방청 상황실장 등 지휘력 강화를 위해 직급 상향* 및 교육훈련 시간확보를 위한 4교대 근무체계, 경찰서 직제화 추진
- (현장중심 상황처리) 상황발생 시 경찰서장 지휘 下 상황처리, 지방청장은 관할 서장지휘 및 경비세력 지원·임무조정 하도록 역할 명확화
 - ※ 「상황실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각급 상황실의 역할·임무 명확화 실시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종합상황실 운영규칙 개정(1월), 조직개편 및 소요정원(안) 조직계 제출(3월)
3분기	❖ 상황실 역량 강화를 위한 각 기능간 사무조정 계획(안) 수립(9월)
4분기	❖ 사무조정 등을 위한 기능간 회의 개최(10월) ❖ '25년 조직개편 대비 인력, 사무조정 시행안 마련(12월)
매월	❖ 상황분석 화상회의 실시 및 결과 환류(월 2회)

정책	7. 바로해(海) 시스템 기반 「현인해소形」 감사체계 확립 (연계 과제) 비전2033	감사 담당
	[성과목표] ('23년) 바로·해(海) 시스템 구축 → ('24년) 바로·해(海) 시스템 정착	

[예산] '24년 「해양경찰 정보화관리」 사업 內 바로해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32백만원)

[법령]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훈령제345호, '23.11.10)

□ 바로·해(海)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내실화

- (바로·해(海) 시스템 정착) 소관 분야 주기별 자가진단을 통해 책무성을 강화하고 업무 위험성을 분석·해소하기 위한 「상시 One-point 점검」 기준 마련
- (내부통제제도 정착) 시스템을 활용한 감사를 통해 업무전문성을 제고하는 내부통제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및 운영 유도
- 연간 “기본·전문과정”, 커리큘럼 교육을 통해 책무성을 강화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테마중심 기획·정책감사 등 실시

- (테마중심 감사) 해양경찰 업무수행과 관련된 수사·안전·레저·장비 등 기능별 국민 불편·민원사항 및 정책과제의 비효율성 점검에 중점

* 2024년 연간 자체감사 별도 계획 수립을 통해 「테마중심 기획·정책감사」 시행

- (업무지원감사 도입)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풀리지 않거나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주는 “업무컨설팅트” 기능 강화

< 지적보다는 애로 해소에 중점 >

- ❶ 종합감사 시 동일 문제점 → 쏠 지방청 동시 점검 및 대안을 제시해주는 피감기관 “컨설팅 창구” 운영, ❷ 컨설팅 수요가 많은 소속기관 선정 “찾아가는 컨설팅” 운영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2분기	❖ 2024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 수립(1월)
3·4분기	❖ 상반기 바로·해(海) 운영시스템을 통한 중간점검으로 보완사항 발굴(7월)
연 중	❖ 연간 자체감사 계획 수립을 기반한 테마중심 기획·정책감사 실시

정책	8. 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연계과제) 기타	감찰 담당
	[성과목표] 해양경찰 성평등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및 지표 등 관리방안 마련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 추진 배경

- 조직 특수성(근무환경 등) 고려한 정책 전반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해양경찰 성평등정책 방향의 다각화 등 중기적 이행 필요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및 조직문화 진단결과 등의 정책 환류

□ 주요 내용

- 성평등정책 관련 연구*에서 도출된 비전 및 목표, 5대 핵심전략, 정책과제 등에 대한 연동계획으로 정책과제와 추진 로드맵 방향 설정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①성평등 중장기 비전 수립 ②성평등 가이드라인 개발)
- 관련기능 간 협업으로 향후 성평등정책 추진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과제의 이행도 제고 및 지표로의 관리 토대 마련

【 해양경찰청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개요(안) 】

✓ (비 전) 성평등한 해양경찰이 만드는 안전한 바다

- ◆ 주요 키워드: 해양경찰 성평등, 안전 바다, 해양안전 희망(미래), 깨끗 대한민국 등
- ◆ 비전(안)은 '성평등한 해양경찰이 만드는 안전한 바다'이며, 이외에도 '성평등한 해양경찰이 만드는 희망의 바다', '안전한(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성평등한 해양경찰', '성평등으로 열어나가는 해양경찰, 안전한 바다' 등 추가 논의

✓ (목 표) 성평등한 조직문화 실현, 해양안전정책의 성주류화

✓ (정책과제) 5대 정책 영역 및 13개 정책과제(36개 세부과제) 제시

- ① 평등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실현 ②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 ③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기반 확대 ④ 성인지적 해양안전 및 대응 역량 강화 ⑤ 해양경찰의 성평등한 추진체계 확립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상반기	❖ 시행계획의 정책세부과제 로드맵 추진 (2월) 이행사항 중간점검 (6월)
하반기	❖ 이행사항 최종점검 (12월)
연중	❖ 양성평등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 상시 자문을 통한 개선사항 파악

중점 추진	9. 예방감찰 내실화를 통한 비위 예방 (연계 과제) 국회지적사항(국감)	감찰 담당
	[성과목표] 비위발생 감소를 위한 교육 및 감찰활동 강화	

□ 기본에 충실한 공직복무 환경 조성으로 비위 발생 최소화 추진

- (예방감찰 패러다임 전환) 제보에 의존한 감찰 활동 → 위험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예방감찰 활동 전개

* 바로해 시스템(부서진단용 내부갈등 설문 신설), 서지방청의 모니터링 강화, 멘토&멘티제도 도입

- (전사적 책무성 강화) 개인일탈형, 업무상 비위로 구분, 발생원인 차단에 중점을 두어 계급·직별·세대간 맞춤형 교육 등 체계적 관리 기준 마련

< 맞춤형·선택적 교육 및 점검 >

구 분	개선 및 보완사항	'24년 주요 추진 사항
개인일탈형 비위	자기관리 및 인성교육	채용·직무와 연계된 맞춤형 교육, 비위 행위자 집합교육, 공직기강 교육실적 관리 등
업무상·조직 내 비위	책무성 강화	기능별 명확한 임무·복무기준 정립 및 바로해 시스템 활용 내부갈등 위험성 분석 등

□ 현장 내재화 예방감찰 활동 및 감사·감찰관 역량강화 지속 추진

- (공직신뢰회복 가이드라인) 소속기관 비위에 따른 단계별 발령 가이드라인(관서별 관심→심각, '23년 최초시행) 정착 및 운영 활성화

- (사례 전파) 경각심 고취를 위해 공직복무점검시 적발·처리 후 집합 교육 등으로 전파, 공직신뢰 회복 특별기간 中 예방감찰 내실화

* 공직점검과 함께 해당기관 강평 교육 정례화(신설)

- (감사·감찰 역량강화) 감사·감찰직무 및 인력현황 등 분석, 자체역량 강화*를 통한 시대변화에 맞는 감사·감찰像 정립

* 감사·감찰관 대상 자격요건 및 교육 강화, 전문인력 유인방안 등 마련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연간 공직복무관리 계획 수립 (3월)
2분기	❖ 농무기 안전관리 점검(4~5월), 적극행정 발굴(빛과 소금 등, 6월) ,
3분기	❖ 상반기 실태조사 분석(7월),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계획 수립(9월)
4분기	❖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10월) 적극행정 발굴(빛과 소금 등, 12월)
매월	❖ 소속기관장 현장예방 활동 점검

중점 추진	10.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건립 추진	운영 지원
	① '23년 추진 중인 과제 [성과목표]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건립 ('24년) 공사발주 → ('25년) 준공	

[예산] 총사업비 258억원(중 74억원) 중 '24년 29억원(공사비 28억, 감리비 등 1억)

□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신축을 위한 시공·감리사 조달계약 추진

○ (조달계약) 건축·감리 등 분야별 일상감사 및 조달 계약 의뢰

* '23.12 설계적정성 검토完→총사업비 조정→일상감사→**조달 계약 의뢰→착공**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 건립



√ 위 치 : 인천시 논현동 638-2
 √ 부지면적 : 4,694㎡ (1,420평)
 √ 연 면 적 : 7,500㎡ (2,270평)
 √ 규 모 : 지상 4층, 지하 1층
 √ 기 간 : '21년 ~ '25년
 √ 총사업비 : 258억원

□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인력 확보 대응

○ (예산·인력) '25년 준공 운영을 위한 운영예산 및 인력확보 대응

* **[인력]** 15명 : 관장, 정책과(7명), 관리과(7명) **[예산]** 50억원 : 장비40억, 유지10억

○ (전종TF) 특수기록관의 특수성(항온·항습 고하중 등 높은 설계기준)은 건축 전문성(시공사 선정, 각종 인허가)이 필요한 업무로 **전담인력 긴급**

* 사업규모 및 특수성(자료 분류) 등 고려 경찰서 급 이상 전종요원(3명) 구성

<특수기록관 추진 업무분장(안)>

운영지원과		※ 전문인력 2명 + 기록연구사	
총 무 계		특수기록관 T/F (3명)*	
특수기록관 운영계획 수립, 운영인력·예산 대응		특수기록관 건립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특수기록관 시공사 및 감리사 선정을 위한 조달청 발주 및 선정 ❖ 기록관 건립 전담 T/F 구성
2분기	❖ 특수기록관 운영예산 및 인력 확보 대응 ❖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착공(착공식)
3분기	❖ 특수기록관 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국가기록원)
매월	❖ 특수기록관 진행사항 점검·관리

중점 추진	11. 해양경찰 마음치유원 건립	운영 지원
	① VIP메시지 관리과제	
	[성과목표]해양경찰 마음치유원 건립 ('24년)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 해양경찰 마음치유원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억원

□ 추진 배경

- 제70주년 해양경찰의 날 대통령님의 기념사에서 “해양경찰의 심신 치유 지원” 약속
- 불규칙하고 위험한 업무수행으로 PTSD·우울증 비율이 높은 해양경찰·경찰·소방의 정신건강을 위해 치유·집중관리 시설 필요

□ 주요 내용

- (사타용역)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 민간·유관기관 마음치유 시설과의 이용자·소요예산 등 비교
 - 해양경찰 및 유관기관(경찰청·소방청) 年 이용인원 산출
 - 집중치료, 예방(힐링), 재충전 등 대상자別 운영 프로그램 개발
- (업무협약) 지자체와 업무협약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동력 확보
 - 토지수용, 용도변경, 영향평가(환경·교통)시 주민여론 수렴 등 행정절차 지원
- (유관기관 협의) 경찰청·소방청 등 유관기관 대상 마음치유원 공동 이용을 위한 업무 협의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연구용역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3~4월)
2~4분기	❖ 지자체 업무협약 (4~12월) ❖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5~12월) ❖ 유관기관 협의 (5~12월)

정책	12. 청년인턴 일자리 창출 및 참여기회 제공 (연계 과제) ① 정부 '청년정책' 국정과제(지속)	운영 지원
	[성과목표] 청년인턴 채용 ('23년) 100명 → ('24년) 218명으로 확대 채용	

[예산] '24년 청년인턴 사업비 29.1억원 (일반수용비, 여비, 사업비 신규반영)

□ 추진 배경

- VIP, “정부부처 인턴을 2천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23.9.14, 청년의날 기념사)
* '24년 46개 중앙행정기관 총 5,000명 채용 계획 중(우리청 218명 배정)
- 청년인턴 운영 2년차로 다양한 수요에 대응, 청년인턴 채용 규모 확대 (102→218명)하고 다양한 직무경험 제공 등 청년인턴 제도 내실화 도모

□ 주요 내용

- (채용·교육) '24년 청년인턴 채용계획 수립, 대내·외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 활용 홍보 추진, 해양경찰 교육원 시설 활용 O·T시행
* '23.12 관서별 배정인원 확정 → 지방청별 채용계획 수립 → 교육원 통합 O·T
- (참여·소통) 인턴 교육 및 소통활동을 위한 소요예산(수용비 등) 반영
* 정부운영 및 국정방향 이해, 업무·관계분야 직무경험 제공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 오리엔테이션 ▲ 정책현장 견학 ▲ 멘토링 ▲ 간담회 예산 1.3억원 반영

〈 '24 청년인턴 채용·운영 계획〉

- ✓ (채용규모) 46개 중앙행정기관 年 총 5,000명 (해경청 218명)
- ✓ (소요예산) 인당 소요비용(월) 약 230만원(최저임금+4대보험+운영비)
- ✓ (인센티브) 해경청 등 채용정보, 취업컨설팅, 인턴 우수부서 포상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청년인턴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 추진(1~2월) ❖ 신규채용 청년인턴 사전 직무교육 및 운영(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 청년인턴 주요정책 소통간담회(4월) ❖ 멘토링 등 청년인턴 추진실적 점검 및 취합(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채용설명회(7월) ❖ 청년인턴 운영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8월)

정책	13. 제복근무자 예우 활동 강화 (연계 과제) ① 지시사항	운영 지원
	[성과목표] 해양경찰청 충혼탑 설립 ('24년) 충혼탑 건립 예산 확보 장기근무 제복근무자 국립묘지 안장 법제화 ('24년) 법령개정	

□ 추진 배경

- 현충원 內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해양경찰 순직자를 기억하고 유가족에 대한 감사와 위로를 표시하기 위한 해양경찰 추모시설 부재
- 치안현장에서 각종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헌신한 장기재직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확대하여 예우 강화 필요

□ 주요 내용

- (추모시설 건립) 국가보훈부와 협의를 통해 '해양경찰 충혼탑' 설립 추진으로 해양경찰 자긍심 고취 및 해양경찰 순직자 추모의 場 마련
 - 일반 국민들이 해양경찰 순직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국민의 산 교육장 마련

■ ('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시 VIP 말씀('23.1.27.)) "국가의 안보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 확산이 중요"

- (국립묘지 안장자격 확대) 해양경찰청·경찰청·소방청 등 유관기관 연계, 장기근무 제복공무원 대상 국립묘지 안장자격 확대 추진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장기근무 제복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자격 법제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국가보훈부 및 유관기관 업무 협의 (2월)
2~4분기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4~12월)

□ 추진 배경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모든 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나, 업무담당자 등 일부 특정인만이 산업안전보건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 팽배
-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적 안전관리 체계의 현장 안착 필요

□ 주요 내용

- 위험성평가 등을 반영한「해양경찰청 안전·보건관리 규정(훈령)」제정
-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 중심의 위험성평가 운영
 - 아차사고·실제 사고 사례*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장비 등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 * 함정·파출소·구조대 등 부서별 주요 「재해 사례집」 제작·공유 및 위험성평가 반영
 - 주요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프로그램 이행' 및 위험성평가에 반영
 - *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현업업무종사자), MSDS 관리, 밀폐공간 관리 프로그램 등
- 직원 참여 등 위험성평가의 현장 실행력 제고
 - 위험성평가 쉼 단계* 직원 참여 유도 및 역량 강화(위험성평가 위탁교육)
 - * 위험요인 발굴 → 위험성 추정·결정 → 위험성감소대책 → 환류
 - 상·하반기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시 위험성평가 및 위험성감소대책 이행 중심 점검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정기 위험성평가 시행(5월) ❖ '24년 상반기 의무 이행사항 점검(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청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8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하반기 의무 이행사항 점검(12월)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1 법률 제·개정 추진 사항

구분	법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소관부서
제정 제정	(가칭) 해상교통 사고처리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박운항자에게도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어민 등 해양종사자를 보호하는 한편, 중대 해양사고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제정안 마련 * 연구용역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법제처 입안·원제도 활용을 통한 제정안 마련 · (7월) 국회포럼·학술토론회 추진 · (하반기) 국회 제출 	형사과
	(가칭)해상 위험유해물질 방제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기름유출사고와는 다른, 화재·폭발·오염을 동반하는 재난형 복합 해양사고인 HNS 사고 대비·대응에 필요한 법률안 마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부처협의 및 법안 마련 	방제기획과
개정	해양경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❶ 해양경비정보 개념 정의, ❷ 경비정보 수집근거 보완, ❸ 한국해양경비기술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하반기 	경비 작전과
	선박교통 관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해 밖 수역 관제시행의 근거 마련, 규제 완화를 위한 부선 관제대상 선박 제외 등 * '23년 국회 상임위 의결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심의(~5월) · 공포(6월) · 시행(12월) 	해상교통 관제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의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역할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임무·역할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법안 마련 · (하반기) 의원 발의 	해양 안전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해상 조난사고의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법적 근거 명시 ○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안 반영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의무보험 요건 관련 「재난안전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국회 제출 (정부입법) 	수색 구조과
	수상레저 기구등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C안전인증제) 등록·검사 대상이 아닌 수상 레저기구 KC안전인증 의무화를 위한 전부개정 ○ (운항구역)「선박안전법」에 기반한 현 운항구역(항해구역)을 일반국민의 이해도 제고 및 현장 안전관리에 용이한 새로운 개념의 운항구역 법령에 반영 ○ (임시항해검사제)외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입 시 수상레저기구등록법상 안전 검사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시항해검사제 도입 ○ (기타) 타법(수중레저법, 마린나항만법)상 이용 기구에 대한 검사·등록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법안 마련 · (8월) 의원 발의 · (상반기) 검토 · (하반기) 의원 발의 	수상 레저과

구분	법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소관부서
	수상레저 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종면허) 현행 조종면허를 필요로 하는 기구의 상·하한 조정, 외국 요트활동자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종면허 면제 조항 명확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통합발급 근거 마련 등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조종면허 장애인 취득을 위한 응시기준 마련, 조종면허 대행기관 관리·감독 규정 명시, 조종면허 대행기관 종사자 결격사유 근거 마련 등 ○(수상레저사업) 이원화된 사업자 준수사항 정비, 빌려주는 사업의 범위 확대검토,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등록기준 정비 등 ○(안전수칙) 기구별 특성을 반영한 인명안전 장비 세분화, 내·해수면 야간운항장비 이원화, 기상특보 시 세일링요트 운항금지 완화 방안 검토, 일정 톤수 이하의 어선·일반선을 이용한 레저활동 시 일정 안전수칙 적용 명문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검토 ▶ (하반기) 의원 발의 	수상 레저과
	성폭력 처벌법	○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제, 전문가의견 조회 기관에 해양경찰청 추가	▶ 국회설명(1~4월)	수사 기획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 기관에 해양경찰청 추가	▶ 국회설명(1~4월)	수사 기획과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규정에 해양경찰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협의(1~2월) ▶ 입법 추진(5월~) 	수사 기획과
	해양환경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대선박 화물이송계획 검인 등 관리대상 물질에 기름 外 케미칼, 액화가스를 추가 하고 작업계획을 해경청장에 보고하도록 개선 * 제32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 해양시설 휴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 소유자 법적 의무사항 부담 완화(오염물질기록부, 오염방지관리인, 비상계획서 등) * 제33조의2(해양시설의 휴업신고 등) 신설 ○ 해양시설의 안전점검결과 중대한 결함발생 시 해양경찰청장에게도 보고의무 추가 개정 * 제36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등) 개정 ○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EGCS)인 개방형 스크러버 배출수의 무역항 내 배출금지 조항 신설 *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 해수부 협의 	해양오염 예방과
	해양환경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제품의 검정시험을 폐지하고 유통제품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 * 제110조의2(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 해수부 협의 	해양오염 예방과
	항만 대기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사업장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및 개선명령 권한 확보 * 제1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3항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 해수부 협의 	해양오염 예방과

2 시행령 제·개정 추진 사항

구분	법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소관부서
제정	해양재난 구조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청장의 조직 설치 권한을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 ○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치료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시행시기 (공포 후 1년)에 맞춰 하위법령 마련 	수색 구조과
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부서의 장 경력경쟁채용 임용절차 보완, 채용시험 공고일 정비, 간부후보 필기시험 과목 개편 등 ○ 승진대상자 명부 배수범위 조정, 경력평정 반영비율 축소 등 성과·실적중심의 인사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안(12월) ▸ 공포(9월) 	교육훈련 담당관 인사담당관
	선박교통 관제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교통관제법 개정법률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개정 * 영해 밖 관제수역 설정, 출입 시 선장의 관제통신 추진 배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령 입안(6월) ▸ 입법예고(~9월) ▸ 법제처심사(~11월) ▸ 시행(12월) 	해상교통 관제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제15조 실무 위원회 위원 구성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포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협의(7~8월) 	수사 심사과
	해양환경 관리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적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함유량 점검을 하고 있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부적합연료유 교체 등 조치명령 권한 부여 * 제94조(권한의 위임) 제5항에 위임규정 신설 ○ 개방형스크러버 배출수의 배출금지 해역 조항 신설 *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에 배출금지해역 신설 ○ 광역 해양환경감시원 활동을 위한 지방청 권한 확보(기존 서장 → 지방청장·서장) * 제94조(권한의 위임) 개정 지방청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 해수부 협의 	해양오염 예방과

3 시행규칙 제·개정 추진 사항

구분	법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소관부서
제정	해양재난 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설치 기념행사 위촉대상 관련 인정 학력경력 - 그 밖의 해촉사유 및 위촉, 해촉의 절차방법 -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의 임무 - 복장착용, 신분증 소지 예외상황 - 복장·신분증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필요한 사항 - 소집명령 없이 자발적 임무수행시 보고 절차방법 -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의 내용주기방법 협회 위탁 - 수당·실비 지급방법·절차, 포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시행시기 (공포 후 1년)에 맞춰 하위법령 마련 	수색 구조과

구분	법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소관부서
개정	직제 시행규칙	○ '24년 정기직제 소요정원 반영 및 국과 단위 사무조정 및 조직개편 사항 반영 등	▸ '24년 1분기, 3분기	혁신행정 법무담당관
		○ 경찰서 관할구역* 변경 * 내해구역 확대, 특별경비구역 신설 등	▸ 규칙 개정(2월)	경비 작전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체의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역할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임무·역할 근거 마련	▸ (상반기) 개정안 마련 ▸ (하반기) 개정	해양 안전과
	해양환경 관리법 시행규칙	○ 선박건조시설(도크시설 및 의장안벽)이 '해양시설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양환경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연중 * 해수부 협의	해양오염 예방과 (예방지도계)
		○ 조선소의 자체 방제역량 강화를 위해 방제 자재·약제를 비치하도록 의무 부여 * 제32조(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연중 * 해수부 협의	
		○ 해양환경관리업 대표자(권리·의무 승계 제외) 및 기술요원 보유현황 변경등록 시 등록 기한 확대(30일 → 60일) * 제37조(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제2항	연중 * 해수부 협의	기동방제과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	○ 유증기 배출 규제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 나프타 등 3종)외에 위해성 높은 B.T.X(벤젠, 톨루엔, 자일렌)를 규제대상으로 포함 * 제37조(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	연중 * 해수부 협의	해양오염 예방과
		○ 어선의 폐기물관리기록부 기록의무 명확화를 위한 「어선검사증서」 포함 개정 * 제23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	연중 * 해수부 협의	
		○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 채취장소 및 기준과 관련하여 이행 주체에 '해양경찰서장' 표기 * 제34조(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제5항	연중 * 해수부 협의	
	선박 입출항법 시행규칙	○ 위험물 반입의 신고(특수화물적부도 도면, 적재번호, 위험물 목록 제출) * 제14조①항, 4호, 별지 제11호의3 서식 신설	연중 * 해수부 하위법령 개정 시 추진	기동방제과

참고 2

'24년 주요 과제 추진 일정

1/4분기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28년 중기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새로운 플랫폼 성과관리 체계 구축 ■ '24년 해양경비계획 수립 ■ MDA 국제 교류·협력 확대 ■ '24년 설연휴 해양 안전관리 대책 수립 ■ 전국 수사심사관 지정·배치 ■ 3개년 퇴역함정 현황 관리 ■ 다목적 화학방제함 건조 소요제기 ■ 서부정비창 적기개창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강화 ■ 설명절, 인사발령 전후 공직기강 점검 ■ 연구개발 중기('24년~'28년)사업계획 수립·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기사업 수요조사 등 플랫폼(dPPM) 구축 계획 수립 연간 경비계획 수립 싱가포르 IFC 연락관 선발 안전관리 대책 수립 정기 인사발령 전 시행 데이터 수집 소요제기 정비창 조기 안정을 위한 T/F 구성 추진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재부, 과기부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친화형 해양경찰 인재육성 ■ 제주 특별경비수역 신설 ■ 대북 안보위협 대응 위기관련 역량 강화 ■ 신고접수·상황처리 통계관리 고도화 ■ '24년 연안안전지킴이 사업계획 수립 ■ 수사계장 중심수사 체계 정립 추진 ■ 아시아해양치안기관회의 기본계획수립 ■ 해양환경 위기대응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설계 ■ 홍보대사 재위촉 및 승진임용식 ■ 위성통신망 구축관련 감항인증 추진 ■ '24년도 청년인턴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역량강화 계획 수립 제주 동부 특별수역 지정 통합방위업무 연간계획 수립 상황통계시스템 고도화 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정기 인사발령 후 시행 계획수립 설계용역 계획수립 이덕화 홍보대사 일정협의 완료 방위사업청 감항인증 신청 채용공고, 면접 등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이드 라인을 통한 전략적 결산국회 대응 ■ 제1회 해양경찰청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심의 ■ 첨단기술을 활용한 VTS시스템 고도화 ■ 해양안전 종합대책 수립 ■ 미래지향적 해양과학수사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준법지원 특별 점검(국회의원 선거) ■ NPCGF 전문가회의(위기대응그룹, 일본) ■ 유관기관과의 ODA 협업 소요 확인 ■ '24년도 항공품질경영시스템 인증심사 확대 ■ '25년 기획 신규R&D사업 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한 기술 분야별 산·학·연 연구현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대응방안 등 교육·토의 의사결정 안건 심의 레이더·운영시스템 용역·공사 발주 기능·분야별 사고예방 대책 수립 '23년 연구용역 결과 반영 점검 계획 수립·시행 회의참석 및 의제대응 자료 조사 인증심사 추진계획 수립 기술분야별 연구기관 	3월

2/4분기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플랫폼 성과관리 체계 구축 ■ 드론경진대회 개최 ■ 봄철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추진 ■ 수중과학수사 전수사업(ODA) 추진 검토 ■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NPCGF)전문가회의 참석 ■ 「해경청-해양환경공단-방제협회」 협업체 구성·운영 ■ 해양경찰 정보시스템 총괄·조정기능 강화 ■ 해양경찰 영토순례 시리즈 제작 추진 ■ 해양경찰 마음치유원 건립 ■ 해양경찰 위성센터 청사신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랫폼(dPPM) 구축 착수 해상익수자 수색 경연 등 집중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ODA관련기관(외교부·KOICA) 협의 계획수립 및 시행 계획수립 및 시행 정보화 예산편성 대응 매뉴얼 배포 주요 방송사 대상 제작 협의 연구용역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계획수립 및 조달계약 의뢰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 화생방 대테러, PSI 선박검색 대응역량 강화 ■ 무선신호 탐지를 통한 선박식별 기술체계 개발 ■ 수색구조지침서 개정안 마련 ■ 해양 마약수사 자문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 KOICA 예산지원 프로젝트 사업 발굴 ■ 국제유류오염학회(IOSC, 미국) 참석 ■ 자격관리시스템(C-TMS) 구축을 위한 현장방문 ■ 관측위성 개발사업 예비설계 ■ 해양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사업 발굴 및 역점사업 선정 국회사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 육상국 안테나 설치, 업무 협의 실무중심으로 지침서 전면개정 자문위원회 개최 준비 사업 발굴 학회 참석 한서대 및 산림청 방문 예비설계 검토회의 개정규칙 시행·공포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대 국회 원구성 이후 관계자 대상 정책설명 ■ 역량·성과관리 중심, 「인사관리통합플랫폼」 구축 ■ VTS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 제21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개최 ■ 「(가칭)해양경찰 KICS 운영규칙」 제정 준비 ■ 베트남 공안부 경비함정(2척) 양여 ■ 친환경 LNG 방제함 현장 배치 ■ 인터넷 기반, 미래형 디지털 함정체계 구축 ■ W재단 협업 해양경찰-캄보디아 업무협약 ■ '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 ■ 공공복합 통신위성 개발사업 탑재체 상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의원실 대상 정책설명회 의견수렴 및 시스템 인프라 구축 관제구역 설정 절차 마련 개최일정, 방법 협의 법무팀 협조, 초안 마련 사전 준비·계획 수립·시행 인수단 운영 및 현장배치 기본계획 수립 해양정화활동 및 MOU 추진 해양경찰위원회 상정 상세설계 검토회의 	6월

3/4분기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파이어니어 대표단 워크숍 ■ '23년 국회 결산심사 및 의결 대응 ■ 상반기 불법외국어선 분석 및 하반기 대응 ■ 수상구조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상반기 수사심사 실적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해양 안보상황 가이드북 개정 ■ 부주의 오염예방 테마점검(폐어구 실태조사 병행) ■ 선박편드를 통한 함정건조 계획 수립 ■ 테마중심 기획·정책 특정감사 실시 ■ 해양경찰 위성센터 청사신축 착공 ■ '26년도 신규 R&D사업 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수립·시행 상임위·예결위 결산심사 대응 하반기 대응 계획 수립 개선과제 발굴 등 1~2분기 합산 수사심사 평가 실시 개정 및 등재 계획수립 및 시행 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조달계약 및 공사착공 내·외부 수요조사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국회 결산심사 및 의결 대응 ■ 연구용역 정책실현 T/F 단장 회의 ■ 변화관리 추진실적 중간점검 및 컨설팅 ■ 한·중 어업지도단속회의(해수부 주관) ■ 대북 안보위협 대응 역량 강화 ■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 수상레저 정책 수립 및 현장관리 역량 강화 ■ 베트남 정례회의 개최 ■ HNS 물질정보집 제작 ■ 제6회 해양환경보전 콘텐츠 공모전 ■ 노후 함포 유지관리 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임위·예결위 결산심사 대응 계획 수립·시행 분기단위 소속기관 실적 점검 불법조업 현황 등 정보사항 제공 해공격 대비·대응방안 검토·보완 의원발의 안전검사정책 소요정원 대응 계획수립·시행 물질정보집 제작 계획수립 및 시행 함포 부속 구매 확보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대한 해양데이터의 디지털전환(DX) 추진 ■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 확대 ■ 광역VTS 구축 및 관제 사각지역 해소 ■ 추석 연휴 해양 안전관리 대책 추진 ■ 구조경진대회 국제화 추진 ■ 국제해상 마약범죄수사 공조포럼 개최 ■ 하반기 범죄첩보 집중수집 기간 운영 ■ ODA 부처 협업 사업 수행 ■ 국제연안정화의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활동 ■ 함정 탑재장비 관리 강화를 통한 성능개선 ■ 인터넷 기반, 미래형 디지털 함정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 강화 및 시스템 연계 「글로벌인재양성과정」 운영 제주 광역VTS 개국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관리 국제구조단체 구조경진대회 초청 포럼 개최 공조기관 선정 집중수집(테마별) 시행 계획수립·시행 계획수립 및 시행 실태점검을 통한 향후 대책방안 마련 스마트 함정 서비스 시범운영 	9월

4/4분기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안사항, 의원실 관심사항 등 국정감사 대응 ■ 국민만족도 소식지 「해경IN」 발간 ■ 국가 해양정보 연계 및 공유 ■ 해양경찰 재난관리 Core 역할 정립 ■ 구조직별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설계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대응 ■ 「(가칭)해양경찰 KICS 운영규칙」 제정 ■ 고속단정 등 소규모 양여희망국 양여지원 ■ NOWPAP 국가방제책임기관회의 ■ 항공품질경영시스템 외부심사 추진 ■ 서부정비창 적기개창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감사 준비 및 대응 국민만족도 소식지 발간 국토지리정보원 MOU 체결 추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스템 구성 등 설계 법무부 업무협약 법무팀 협조, 시행 계획수립·시행 회의참석 및 대응 외부심사계획 수립 부진한 사항에 대한 방안 마련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정부입법계획 수립 ■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에듀테크 교육방식 도입 ■ 대북 안보위협 대응 위기관련 역량 강화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해경철 훈련) 개정 ■ 낚시어선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 연간 수사심사 평가 및 최우수 심사관 선정 ■ KOICA 예산지원 프로젝트 사업선정을 위한 현지 조사 ■ 해양오염 예방업무 미래발전 컨퍼런스 개최 ■ CN-235 성능개선 레이더 장착 추진 ■ 선박펀드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입법계획 법제처 제출 기관별 우수사례 선발 사이버 교육 콘텐츠 제작 통합방위업무 수행실적 점검 훈련 개정 시행 낚시어선 안전관리 실적 분석 1~4분기 합산 수사심사 평가 실시 현지 조사 실시 계획수립 및 시행 CN-235(4대) 체계통합 추진 사업설명회, 제안서평가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감 지적→후속대책 마련 및 주요업무계획 반영 ■ 표준교과서 기반한 사이버 교육콘텐츠 제공 ■ 광역VTS 구축 및 관제 사각지역 해소 ■ 국제지침 배포 ■ (가칭) 해양경찰 형사정책학회 구성 ■ 접경해역 안보상황 FTX 훈련 ■ 방제자원 관리 혁신 심포지엄 개최 ■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도청 체계 강화 ■ 하반기 관서운영경비 및 채권 관리실태점검 ■ 바로·해(海) 시스템을 통한 진단평가 실시 ■ 관측 통신위성사업 및 위성활용기술개발 연차진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사항,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사이버 교육 콘텐츠 제작 완료 동해 광역VTS 건축 준공 IAMSAR 매뉴얼 제1·2권 발간 학회 구성 관련 사전협의 계획수립 및 훈련 계획수립 및 행사개최 민감정보 취급부서 대도청 탐지 실태점검 이행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 등 사업별 연차점검 실시 	12월

〈기획조정관〉

'24년 주요업무계획	3개년('24~'26년) 실행계획	비전2033
· 탄탄한 조직으로 성장을 위한 직급구조 개선	· 효율적이고 탄탄한 조직으로 체형개선	· 해양경찰 조직 재설계
·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평가 대응 및 진단 강화	· 효율적이고 탄탄한 조직으로 체형개선	· 해양경찰 조직 재설계
· 일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 성과중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 해양경찰 직무 맞춤형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실적에 기반한 역량중심 인사제도 구현	·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량평가체계 구축개선	·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량평가체계 구축개선
· 역량·성과관리 중심, 「통합인사플랫폼」구축	· 통합 인사정보시스템 (All-In-One) 구축	· 통합 인사정보 시스템(All-In-One) 구축
·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추진	·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추진 - 한국형 MTT 추진	· 인재양성 전문교육훈련 기관 및 산하기관 설립
· 미래형 교육훈련 플랫폼 구축	· 메타해양경찰청 구축 ·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에듀테크 교육방식 도입 · 첨단 교육·훈련센터 설립	· 메타해양경찰청 구축 ·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에듀테크 교육방식 도입 · 첨단 교육·훈련센터 설립
·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훈련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훈련
· 초급간부 임용 다양화 정책화	· 채용제도 과학화	· 채용제도 과학화
· HACGAM 개최로 글로벌 선도적 역할 수행	· 국제협력 다변화	· 국제협력 다변화
· ODA 활성화를 통한 「PAX-KCG」 확대	· 국제해양정보 수집 거점 확보	· 국제해양정보 수집 거점 확보
· 인태전략에 부합하는 대륙별 전략적 협력체계마련	· 해상교통로 확보 전략	· 해상교통로 확보 전략
· 퇴역함정 양여를 통한 해양안보체계 구축	· 국제협력 다변화	· 국제협력 다변화
· 새로운 플랫폼 성과관리 체계 구축	· 빅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시스템	· 해양경찰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시스템 구축
· AI 행정혁신체계 기반 조성	· 빅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시스템	· 해양경찰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시스템 구축

<경비국>

'24년 주요업무계획	3개년('24~26년) 실행계획	비전2033
·해역별 위험도 분류 및 외곽도서 거점 활용	·무인도서 등 외곽거점 마련	·무인도서 등 외곽거점 마련
·해상임무능력 강화를 위한 항공기 성능개선 추진	·항공기 위성통신망 구축	·항공기 위성통신망 구축
·광역VTS 구축 및 관제 사각지역 해소	·광역 VTS 구축	·광역 VTS 구축
·첨단기술을 활용한 VTS시스템 고도화	·선박관제시스템 첨단화	·선박관제시스템 첨단화
·해양정보융합플랫폼 기반 마련	·MDA 시스템 구축	·MDA 시스템 구축
·미래형 경비체계 전환을 위한 무인체계 및 전문가 확보	·무인 감시장비 도입	·무인 감시장비 도입
·위성센터 전담기구 신설	·인공위성 도입	·인공위성 도입
·위성센터 인프라 구축	·인공위성 도입	·인공위성 도입

<구조안전국>

'24년 주요업무계획	3개년('24~26년) 실행과제	비전2033
·연안안전지킴이 사업 활성화 추진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
·치안수요 변화에 따른 파출소 등급 재정립	·연안 종합 안전관리로 임무 전환 ·파·출장소 인력 및 조직 개선	·연안 종합 안전관리로 임무 전환 ·파·출장소 인력 및 조직 개선
·파출소 기본임무 역량 제고 및 근무환경 개선	·파출소 시설 개선	·파출소 시설 개선
·파출소 구조·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파출소 순찰 함정·장비 스마트화	·파출소 순찰 함정·장비 스마트화
·New 기동점검단 발족, 유도선 안전 UP	·다중이용선박 표준 안전관리체계 마련	·다중이용선박 표준 안전관리체계 마련
·해양재난구조대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하위법령 등)	·해양재난구조대법 제정 및 지원 강화	·민간 해양구조·순찰세력 통합 및 조직화
·중특단 운영체계 개편 및 구조역량지원 체계 마련	·중특단 운영체계 개편 및 구조직별 관리시스템 구축	-
·「해양재난구조대법」시행전 조직·운영체계 정비	·해양재난구조대법 제정 및 지원 강화	·민간 해양구조·순찰세력 통합 및 조직화
·수상레저기구 KC안전인증 의무화를 위한 입법추진	·수상레저안전공단 설립 추진 ※ 수상레저기구 인증제	·수상레저안전공단 설립 추진

〈수사국〉

'24년 주요업무계획	3개년('24~26년) 실행계획	비전2033
· 전문수사경찰 양성을 위한 수사연수소 직제화 추진	· 해양경찰 수사전문성 강화	· 해양경찰 수사전문교육 강화
· 현장 수사력 강화를 위한 수사인력 확보	·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수사체계 개편	· 수사체계 개편
· 근무여건 개선 등 수사경찰 사기진작 방안 마련	·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수사체계 개편	· 수사체계 개편
· 선제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차세대 KICS 안정적 운영	· 첨단과학 기반 수사시스템 구축	· 첨단과학 기반 수사시스템 구축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인권 중심 수사환경 조성	· 인권 중심 수사환경 조성
·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해양 마약수사 국제포럼』 추진	· 범죄없는 안전한 바다 구현	-
· 해양 마약수사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인프라 구축	· 범죄없는 안전한 바다 구현	-
· 해양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 조직 구성	· 해양 사이버범죄 대응체계 구축
· 수중과학수사 전문기관 도약	· 해양과학수사 역량 고도화	· 수중과학수사 고도화

〈정보외사국〉

'24년 주요업무계획	3개년('24~26년) 실행과제	비전2033
· 정보경찰 역량 강화	· 정보역량 재편	· 정보역량 재편
· 해양주권·국경 수호를 위한 국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 항만을 통한 국제범죄 차단을 위한 항만보안 강화	· 항만보안 강화
· 해양 국제범죄 대응 국제 공조수사 강화	· 국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 국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 유관기관 정보협력 실질적 네트워크 활성화	· 국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 국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 안보위해선박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 채널 다각화	· 방첩·전략물자 관리	· 방첩·전략물자 관리
· 체계적·효율적 해양 안보 상황 대응체계 구축	· 방첩·전략물자 관리	· 방첩·전략물자 관리

〈해양오염방제국〉

'24년 주요업무계획	3개년('24~26년) 실행계획	비전2033
· 해양오염사고 재난관리체계 마련	· 현장 집행 총괄기관으로 법·제도 개선	· 해양환경 관련 법·제도 개선
·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방제인프라 확보	· 다목적 방제정 도입 등 방제자원 확충	· 다목적 방제정 방제함정 도입
· 친환경선박 확대 도입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복합 해양환경사고 전문 대응역량 강화	· 복합 해양환경사고 전문 대응역량 강화
· 해양환경 위기대응을 위한 국가 방제대응 시스템 강화	· 복합 해양환경사고 전문 대응역량 강화	· 복합 해양환경사고 전문 대응역량 강화
· 해양오염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 신규 관리대상 해양오염 지도점검 정책 기반 마련	· 해양환경관리 대상 확대
· 국민친화적 해양환경보전 활동 전개	· 신규 관리대상 해양오염 지도점검 정책 기반 마련	· 해양환경관리 대상 확대
· 미래 지향적 해양오염 예방업무 발전 기반 마련	· 첨단기술 접목 해양오염물질 분석 체계 마련	· 해양오염 법과학 감정·분석 고도화

〈장비기술국〉

'24년 주요업무계획	3개년('24~26년) 실행과제	비전2033
· 미래형 경비체계 장비기반 마련	· 첨단 기술장비 도입	· 첨단 기술장비 도입
· 연구개발(R&D) 전담기구 신설	· 연구개발 조직 신설·개편	· 연구개발 조직 신설·개편
·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	· 6대 핵심 미래기술 R&D	· 6대 핵심 미래기술 R&D
· KOSNET 위성통신망 성능개선 및 보안체계 확립	· 미래형 정보통신, 보안 기술	· 미래형 정보통신, 보안 기술

〈직속부서〉

'24년 주요업무계획	3개년('24~26년) 실행과제	비전2033
·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작성을 위한 AI 도입	· KCG 정책소통	· KCG 정책소통
· 바로해(海) 시스템 기반 「현안해소형」감사체계 확립	· 감사·감찰업무 재설계	· 감사·감찰업무 재설계
· 해양경찰 마음치유원 건립	· 직원복지기반 조성	· 직원복지기반 조성